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 신종호 · 김성진 · 김학성 · 손기영



통일 이후 통합방안-Ⅲ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 신종호 · 김성진 · 김학성 · 손기영

통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통일 이후 통합방안-Ⅲ)

인 쇄 2015년 12월
발 행 201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소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호정씨엔피(02-2277-4718)
인 쇄 처 아미고디자인(02-517-5043)

ISBN 978-89-8479-811-3 93340
국가정체성
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5036150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1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요약 / ix

I. 서론	1
II.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9
1. 정체성 형성에 관한 이론 분석	12
2. 분석의 틀	24
3. 분석의 지표	37
4. 소결	43
III. 국가정체성 형성의 사례연구	47
1. 독일	49
2. 홍콩	98
3. 북아일랜드	122
IV. 결론	165
1. 이론 및 사례연구의 시사점	167
2. 통일한국에 대한 시사점	172



참고문헌 / 18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93

표 차례

표 II-1	정체성이론의 세 수준	19
표 II-2	통일국가의 국가정체성 형성과정	26
표 II-3	국가정체성 형성의 내적 측면과 단계별 인정 과정	30
표 II-4	국가정체성 형성의 외적 측면과 단계별 인정 과정	35
표 III-1	서독 주민의 연령대별 대동독 인식(1987년)	53
표 III-2	서독 주민의 국가 자긍심 변화	55
표 III-3	독일·프랑스·영국인의 국가정체성 비교(1992년)	60
표 III-4	동·서독지역 주민들의 국가정체성 지표(1993년)	62
표 III-5	통일 이후 주요 독일정당의 연방의회선거 득표율	63
표 III-6	동독지역 주민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기탄만 변화 추이 ...	64
표 III-7	독일 청소년들의 정치적 정향(14세~29세 대상)	65
표 III-8	구서독지역에서 일반적 민족자긍심	68
표 III-9	구동독지역에서 일반적 민족자긍심	68
표 III-10	세 차원별 독일에의 유대감 원천	70
표 III-11	통일 이전과 이후 분야별 만족도의 대차대조표 (35세 이상)	75
표 III-12	구동독지역 34세 이하 분야별 만족도의 대차대조표	76
표 III-13	‘번영의 지대’ 실현을 둘러싼 여론조사	77
표 III-14	통일 후 구동서독지역별 연방의회 선거결과: 정당명부 제2기표	78
표 III-15	일반적 민주주의와 독일적 민주주의에 대한 구동서독지역 주민들의 지지도(1991~2014년)	79
표 III-16	정당 및 법치국가의 제도에 대한 구동서독지역에서 신뢰도 변화추이(1991~2014년)	80
표 III-17	구동독사회주의에 대한 지역별 평가	85
표 III-18	구동서독 주민의 통일독일 및 구동서독과의 일체감	88
표 III-19	유럽국가들의 국가자긍심 비교	90
표 III-20	독일인 또는 유럽인	91
표 III-21	민족감정의 시대적합성	92



표 III-22	홍콩 주민 스스로가 생각하는 정체성 정도 (1997~2006년)	103
표 III-23	홍콩 주민 스스로가 생각하는 정체성 정도 (2007~2015년)	104
표 III-24	홍콩인의 정체성 비율(1997년 7월~2015년 6월)	105
표 III-25	자신을 '중국의 홍콩인'으로 생각하는 홍콩 주민의 연령대별 비율(1997~2014년)	107
표 III-26	자신을 '홍콩의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홍콩 주민의 연령대별 비율(1997~2014년)	108
표 III-27	북아일랜드의 종교 구성	126
표 III-28	지역의 가톨릭 인구비율(1991년)	129
표 III-29	영국 GDP의 지역별 구성(1989~1996년)	130
표 III-30	직종별 종교 구성 비율(1997년)	131
표 III-31	40대 기업 중 1천 명 이상 고용 기업 종사자 종교구성비 ...	133
표 III-32	북아일랜드정책에 대한 종교별 입장	134
표 III-33	민족정체성에 대한 응답(1996년)	135
표 III-34	영국의 지역별 주 평균수입 격차 (잉글랜드 평균소득 대비 비율)	138
표 III-35	산업영역별 프로테스탄트 인구 고용 비율	140
표 III-36	가톨릭 및 프로테스탄트 사회의 상호 이해	142
표 III-37	프로테스탄트 지역에 있는 일자리에 대한 가톨릭 주민의 인식	143
표 III-38	'일반적으로 누가 우대받는가?'에 대한 응답	144
표 III-39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에 대한 인식 차이	145
표 III-40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2011년 인구조사 결과)	156
표 III-41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사회의 민족정체성(2007년)	158
표 IV- 1	독일, 홍콩, 북아일랜드의 국가정체성 형성 비교: 정체성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	171



그림 Ⅲ-1 구동독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 비율의 변화 (1991~2013년)	73
그림 Ⅲ-2 구동서독지역의 실업자수와 실업률 변화 추이	74
그림 Ⅲ-3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인구 구성비의 변화 (1861~2011년)	128
그림 Ⅲ-4 프로테스탄트-가톨릭 실업률 격차(1992~2011년)	139
그림 Ⅲ-5 정체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998~2012년)	155
그림 Ⅲ-6 지역별 '영국인' 정체성과 가톨릭 인구비율 (2011년 인구조사)	157
그림 Ⅲ-7 무장단체의 공격에 의한 희생자 수(1981~2015년)	162

이 연구는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에 대한 이론연구 및 사례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가정체성 형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법적 통일보다 통합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둘째, 이 연구는 가치통합, 그 가운데서 정체성 형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 연구는 통일보다 통합이라는 긴 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의 내적 측면인 가치관의 통합이라는 점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가치관의 통합 가운데서 통일국가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이 연구는 개인적 정체성이나 사회적 정체성이 아니라 국가정체성 형성에 대한 것이다. 국가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정체성이론을 반영하겠지만, 연구의 초점은 국가적 차원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넷째, 이 연구는 정체성 형성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함께 분석하였다. 특히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해 국가가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독일, 홍콩, 북아일랜드의 국가정체성 형성을 다음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독일의 국가정체성 형성사례는 ‘융합형(A+B=A(b))’에 가깝다. 서독의 정체성과 동독의 정체성이 결합하여 서독 정체성의 상위 하에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동독의 정체성이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잔여범주로서 존재함으로써 통일독일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홍콩사례는 ‘일방형(A+B=A)’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사례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하에 홍콩의 자율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병존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홍콩의 자율성은 중국의 압도적 우위 하에 허용되었기 때문에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 제한적인 자율성이 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주도의 일방형 통합에 대한 홍콩의 불만은 ‘우산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북아일랜드 사례는 ‘병존형(A+B=AB)’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정부는 북아일랜드의 분리주의를 잠재우는 대신 협의제에 입각하여 정치, 경제분야에서 자치권을 허용하고 문화적 융합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공존의 틀을 마련하고 병존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는 영국의 분권주의적이고 협의제적인 정치적 전통이 작용하였다.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복합형 정체성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 모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독일(융합형)과 북아일랜드(병존형)를 선택적으로 결합한 복합형이다. 통일한국은 남한의 가치와 이념, 체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포섭함으로써 공존하고 병존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중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은 여러 개의 하위 정체성이 공존하는 다중정체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국가에서 여러 개의 지역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대외정체성이 다양한 층위에서 존재하거나 이것들이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융합적 정체성이 형성될 수도 있다.

셋째, 정서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병행해야 한다.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문화적 일체감과 공존의식을 함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한 내적 지표로 정치,

법, 경제, 사회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 대외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종합적·장기적 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분야별로 북한 주민을 배려하는 특혜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조항은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보편적 원칙과 제도, 절차 등을 정착시킴으로써 구조적으로 정체성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화해·화합 지향적 과거사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경우 과거 상흔에 대한 트라우마 해결을 위해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에 중점을 두되, 화해와 화합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여섯째, 통일 대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과 소통을 추진해야 한다. 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 인적 교류, 소통의 기회를 다각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한국사회의 개방적·포용적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한국사회의 내적 준비역량과 수용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통일 이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을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갈등관리에 대한 한국사회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열린 민족주의와 평화·협력을 지향하는 지역정체성을 지향해야 한다. 통일한국은 개방적인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은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대외정체성을 지향해야 한다.

주제어: 국가정체성, 통합, 지역정체성, 다중정체성, 복합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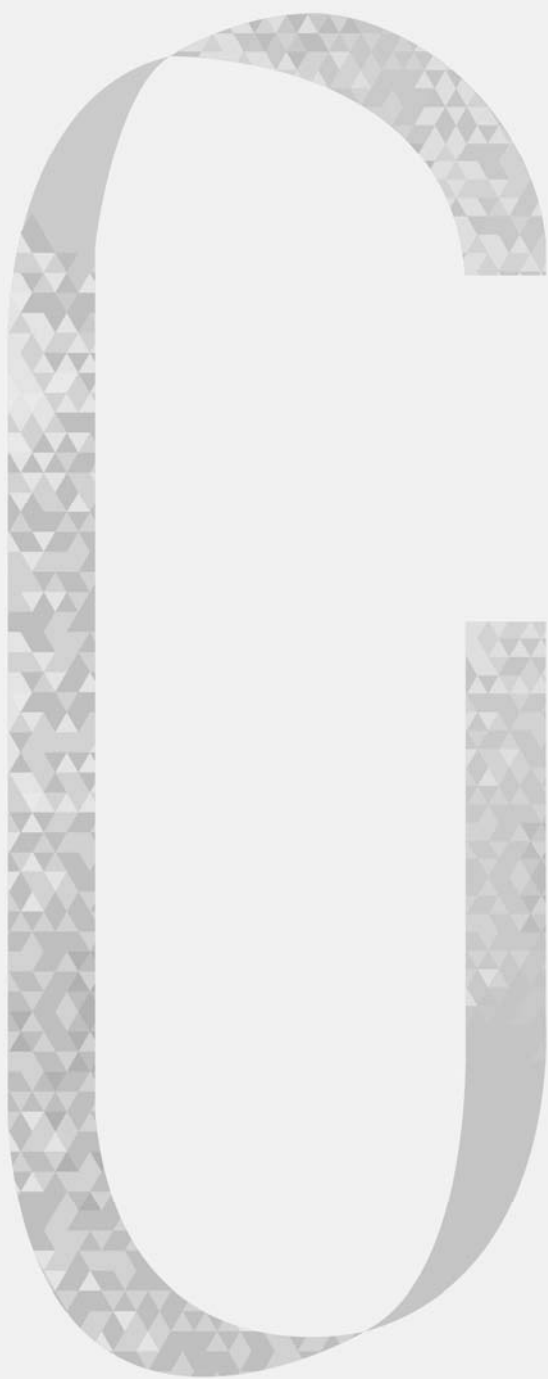
Post-Unification National Identity Formation: Focusing on Theories and Case Studies

Park, Jongchul et al.

This research is to present a basic direction in forming post-unification national identity by deriving implications from theories and case studies. The research focuses on the following. First, it primarily looks at integration rather than political or legal unification. Second, it emphasizes value integration, more specifically formation of identity. Third, this is not about identity of individuals or society but about building of national identity. Fourth, the research analyses the internal as well as the external aspects of establishing national identity.

Unified Korea needs the following policies to form national identity. First, it should seek complex identity. Second, the identity should be multifaceted. Third, sharing common sentiments should go in parallel with the social and economic integration. Fourth, comprehensive and long range measur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s should be in place. Fifth, past issues should be resolved in a peaceful and reconciliatory fashion. Sixth, to recover a sense of homogeneity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South and North Koreas should expand and diversify opportunities for exchanges,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s between the residents of the two. Seventh, Korean society should cultivate the capacity for openness and inclusiveness. Eighth, we need to head for regional identity oriented toward open democracy, peace and cooperation.

Keywords: National Identity, Integration, Regional Identity, Multifaceted Identity, Complex Identity



I. 서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법적 통일보다 통합에 중점에 두고자 한다. 그동안 통일연구의 많은 부분은 정치적, 법적으로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을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정치적·법적 통일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친 화해·협력, 평화정착, 교류·협력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법적 통일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두 체제가 하나로 융합되는 복잡하고 긴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통일 이전과 이후를 포함하는 통합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가치통합, 그 가운데서 정체성 형성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통합은 크게 보면 제도통합과 가치통합으로 구분된다. 그동안 많은 연구가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어떻게 제도통합을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독일통일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통합은 가치통합과 병행되어야 하며, 가치통합이 없는 제도통합은 불완전하고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통합의 외적 측면인 제도통합과 함께 통합의 내적 측면인 가치통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통일보다 통합이라는 긴 과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또한 통합의 내적 측면인 가치관의 통합이라는 점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가치관의 통합 가운데서 통일국가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내적통합을 위해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이 가치와 의식, 문화면에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 이후 남한 주민은 통일 한국의 새로운 국가상을 구현하는 데 따른 자긍심을 느끼는 한편, 통일비용 부담과 통일 후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통일의 의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통일이

후 북한 주민은 통일의 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은 이념과 체제의 이질감으로 인해 새로운 국가의 구성원으로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질감과 정체성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이후 정치, 법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 등 제도적 통합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들은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이후 진정한 내적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이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국가정체성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북한 및 국제사회에 대해서 통일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론들과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남북한의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다. 국가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사례연구 대상인 독일, 홍콩, 북아일랜드의 통합에 적용하여 통일한국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셋째, 이 연구는 개인적 정체성이나 사회적 정체성이 아니라 국가정체성 형성에 대한 것이다. 국가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정체성이론을 반영하겠지만, 연구의 초점은 국가적 차원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정체성은 개인, 집단, 국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이 타자와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존재이유와 특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자아정체성의 형성과정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정체성을 보면, 집단적 정체성은 집합적 특징을 공유하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인식하고 자기 집단의 존재이유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국가정체성(state identity)은 국가의 구성원들이 동질적 특성에 근거하여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 동질의식을 느끼는 것이다.

국가정체성은 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 국민정체성, 공동체 정체성(community identity)과 같은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다. 민족 정체성은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종, 언어, 문화, 가치관 등의 공통적 요인에 근거하여 구성원들이 동질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적 동질의식과 함께 대외적으로 차별의식을 가지는 의식이다. 국민정체성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민족이라는 고정적 요인보다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으로서 느끼는 가치, 문화, 습관 등의 공통된 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 정체성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규범, 가치, 문화 등을 공유하는 동질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민족정체성이나 국민정체성, 공동체 정체성이라는 용어보다 국가정체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정체성 형성은 자발적이거나 자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민족정체성은 고정요인을 강조함으로써 21세기의 세계화와 다문화현상을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국민정체성은 국민의 자생적 차원의 정체성 형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조명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동체 정체성은 공동체의 내적 응집력을 조명함으로써 정체성의 대외적 측면이나 국가의 정책적 측면을 분석하기 어렵게 한다.

넷째, 이 연구는 정체성 형성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함께 분석하였다. 특히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해 국가가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체성은

개인, 집단, 국가 차원에서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내적 특징을 기초로 한다. 이런 점에서 정체성은 내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다른 대상과의 차별성에 근거한 정체성에 의하면 다른 대상과의 관계가 갈등, 대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체성의 또 다른 측면인 외적 측면이 중요하다. 정체성의 외적 측면은 차별성에 근거하면서도 다른 대상과 공존하는 공생관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체성은 차별에 근거한 내적 측면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다른 대상과 평화롭고 공존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외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에 대한 이론연구 및 사례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가정체성 형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통일국가의 정체성 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과 인정투쟁(struggles for recognition)을 포함하여 사례연구에 적합한 이론적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론 분석을 통해 통일국가의 새로운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이론적 틀에 기반하여 독일, 홍콩, 북아일랜드의 사례 연구를 하였다. 국가정체성 형성에 대해 다양한 사례연구를 할 수 있으나, 연구범위의 제약을 고려하여 세 가지 사례를 선정하였다.

우선 통일국가의 국가정체성 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독일을 선정하였다. 독일의 경우, 동독 주민은 정치적 선택에 의해 공산당을 몰락시키고 서독과의 신속한 통일을 희망하였다. 그리고 동서독 정부 간 통일협상에 의해 신속하게 통일이 이루어졌다. 서독체제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동서독 간 제도통합이 이루어졌으나 내적통합은 예상보다 어려웠다. 독일을 사례로 선정할 이유는 어느 한쪽의 주도에 의해 신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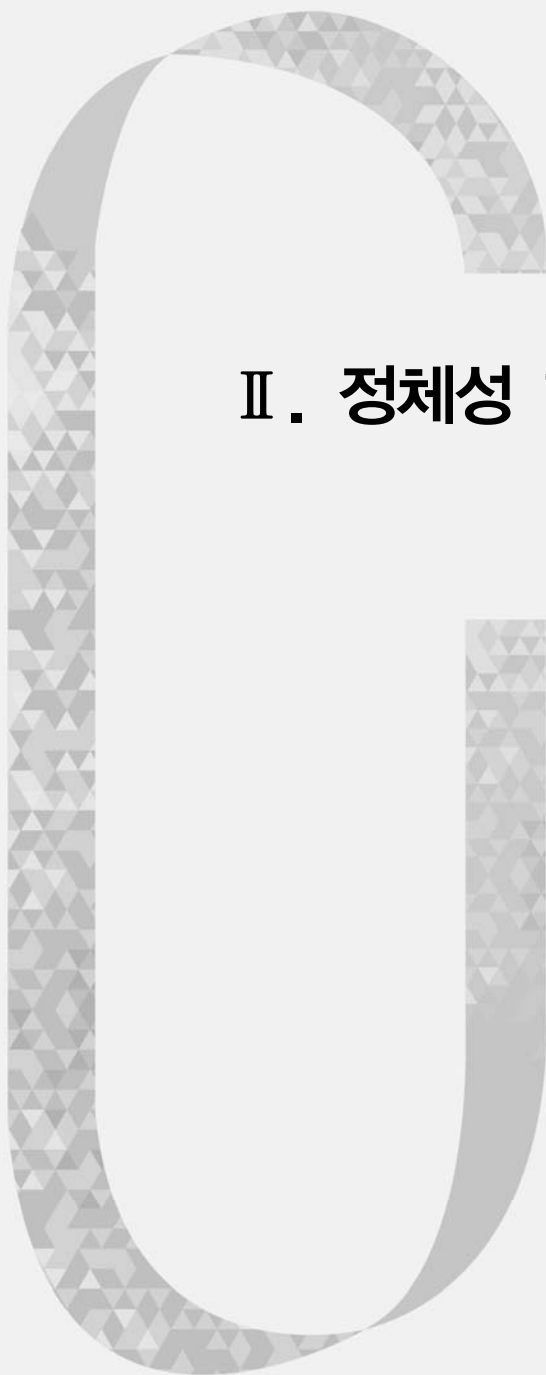
하게 통일을 이룬 경우에 대한 국가정체성 형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홍콩은 중국에 반환된 뒤 일국양제라는 두 체제의 공존을 통해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홍콩의 경우 일국양제라는 점진적 방식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국 주도의 장기적 계획에 의해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홍콩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일국양제라는 점진적이고 과도적 단계를 표방하면서도 사실상 압도적으로 우세한 측의 주도로 통합이 추진되는 경우 국가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한 국가 내에서 인종, 종교, 계급, 지역, 문화 등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여 국가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다. 내전과 종족분쟁으로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자스민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정치적 변혁을 겪고 정치적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비아, 이집트 등 중동 국가, 전쟁에 의해 정부가 교체된 후 국가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북아일랜드는 종교문제와 지역문제, 경제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테러와 내전 상황을 겪었다. 북아일랜드는 다양한 갈등으로 점철된 국가 내에서 갈등적 요인을 지닌 집단 간에 어떻게 국가정체성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셋째, 이 연구는 이론연구 및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통해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과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실현될 남북한의 역사적인 통일이 몇 세대에 걸쳐 분단을 경험했던 남북한 주민들의 통합으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국가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까? 독일, 홍콩, 북아일랜드 등의 사례를 보면 국가의 통일이 진정한 국민적 통합과 국가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통일국가 형성을 위해서는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질적인 집단 간의 균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의 조화로운 공동체(harmonious community)를 형성하기 위해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창출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지만, 현실은 늘 이론과 정책을 험난한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다.

이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될 국가정체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회정체성이론이나 집단정체성이론을 살펴보면 정체성의 형성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주변의 타인이나 집단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상호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¹⁾ 집단정체성의 일종인 국가정체성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데 일반적으로 정체성은 고정된 의미를 지니지 않고 하나의 지속되는 과정 혹은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다.²⁾

이 연구에서는 국가정체성을 한 국가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결속력(cohesion)과 통일성(uniformity)을 가진 집단인가를 표상하는 내적 측면과 외부적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어떤 차이(distinctiveness)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할 예정이지만, 이것은

1)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Dominic Abrams and Michael A. Hogg, eds. *Social Identity Theory: Constructive and Critical Advances*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90).

2) Samuel S. Kim and Lowell Dittmer, "Wither China's Quest for National Identity?," in *China's Quest for National Identity*, ed. Lowell Dittmer and Samuel S. Ki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 11.

분석을 위한 편의적인 조치이고 실상을 보면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두 측면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³⁾ 어떤 국가가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내부적으로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어떤 특질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질들이 다른 국가의 구성원들과 비교해 어떻게 다른가를 의미한다. 다양한 국내외적 상호작용의 영향으로 한 국가는 복수의 정체성(multiple identities)을 보유하게 되는데, 국가정체성은 국내적(domestic), 국가적(national), 국제적(international) 수준을 포함하는 여러 층위에서 분석되어야 바람직하다.

이 연구는 통일국가의 정체성 형성을 포괄할 수 있는 키워드를 ‘통일 이후 조화로운 국가공동체의 건설’로 설정하고 새로운 통일국가가 가질 수 있는 국가정체성의 가상적 실체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다음 장에서는 통일국가의 정체성 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과 인정투쟁(struggles for recognition)을 포함해 사례연구에 적합한 이론의 틀을 찾아본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통일국가의 정체성과 사회통합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 홍콩, 북아일랜드의 통합사례와 정체성 형성을 연구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를 설정한다.

1. 정체성 형성에 관한 이론 분석

이 연구는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여러 이론을 분석해 봄으로써 통일 이후 국민통합과 조화로운 국가공동체의 건설 방법에 대해 조망해 보는 것이다. 통일을 통해 하나의 국가는 형성되었지만, 이것이 어떤 성격의

³⁾ Paul Kowert, “National Identity: Inside and Out,” *Security Studies*, vol. 8. no. 2/3 (1998/99), pp. 4~5.

국가로 성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내부의 갈등은 어떻게 봉합되거나 치유되어 하나의 국가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 통합 과정과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이다. 통일국가가 가질 수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지만,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이질적인 집단 간에 예상되는 다양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국가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집단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을 형성할 수 있는가가 연구의 대상이다.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집단에 대한 정체성 연구는 크게 근원주의(primordialism)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장에서는 근원주의와 구성주의의 양면을 보면서 주로 구성주의적 측면에서 사회정체성이론과 인정투쟁이론을 분석한다.

가. 집단정체성이론: 근원주의와 구성주의

초기 집단정체성의 연구는 근원주의적 성격을 가졌는데, 이것은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실증주의 방법론의 영향으로 어떤 민족이 가진 다양한 특성에서 보편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는 고유한 형질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작업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낭만적 민족주의(romantic nationalism) 혹은 유기체적 민족주의(organic nationalism)는 민족의 공통된 언어, 민속 문화, 서사적 전설, 종교, 관습 등의 특질에 관심을 가졌다.⁴⁾ 이러한 낭만적 민족주의는 그 전 시대를 풍미했던 왕조 또는 제국이 위로부터의 권위와 폭력을 통해 국가의 결속을 다졌던 것과는 다르게 민족을 형성하는 개인들의 공통

4) Balazs Trencsenyi and Michal Kopecek, eds. *National Romanticism: Formation of National Movements, Discourses of Collective Identity in Central and Southeast Europe 1770~1945*, Volume Two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2007).

점에 주목한다. 민족이나 민족주의를 보는 관점은 막스 베버(Max Weber)의 시기에 이르면 민족이 같은 조상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주 모호한 표식이며, 민족이 실제로 존재하기 보다는 가치(value), 믿음(belief), 감정(sentiment)의 영역에 속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⁵⁾ 즉, 민족주의를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사실보다는 공통의 언어, 종교, 관습과 정치적 기억을 가진 강력한 정치 공동체에 속한다는 자부심(pride)의 표현이라고 보았다.⁶⁾ 예를 들어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다는 집단적인 기억은 계급과 소유의 차이를 넘어서 민족이라는 집단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⁷⁾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말하는 민족(nation)은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인데 이것은 전통적인 국가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어떻게 민족주의를 형성할 수 있느냐를 분석한다. 앤더슨의 민족은 위에서 언급한 민족적 특질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기보다는 서적이거나 신문의 대량출판과 보급 등의 자본주의 확산과 맞물려 같은 정보를 감정적으로 공유하는 상상의 공동체이다.⁸⁾ 이렇게 형성된 수평적인 동지애(horizontal comradeship)는 심지어 민족의 구성원들이 전쟁에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게까지 만들 수 있었다.⁹⁾ 그러므로 한 개인이 스스로 누구인가를 정의하고자 할 때 국가정체성은 그 개인의 정체성을 지정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5) Jean Terrier, *Visions of the Social: Society as A Political Project in France, 1750~1950* (Leiden: Brill, 2011), p. 99.

6) Zenonas Norkus, "Max Weber on Nations and Nationalism: Political Economy before Political Sociology,"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vol. 29, no. 3 (2004), p. 396.

7) *Ibid.*, pp. 397~398.

8)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Books, 2006), p. 86.

9) *Ibid.*, pp. 6~7.

이렇게 형성된 민족은 국가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베버는 국가와 민족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지만, 보통의 경우는 민족이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베버는 사회 속에서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국가라고 주장했는데, 어네스트 겔러(Ernest Gellner)는 이 주장을 근거로 사회 안에서의 갈등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이러한 갈등을 국가가 아닌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보았다.¹¹⁾ 근대국가는 주권을 행사하며 국경선이 정해진 영토를 통치하게 되는데, 근대국가 이전에 존재했던 제국과 왕국이 이질적이고 인접해 있지도 않은 다양한 인간집단을 통치했다는 것은 근대국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¹²⁾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국가 속의 민족 집단이 내부적 문제해결에 실패하고 갈등 속에서 표류한다면, 그리고 조화로운 공동체의 형성에 실패함으로써 다른 국민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진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의 국민들이 고양된 민족주의를 만끽하듯, 패배한 국가의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¹³⁾ 이 연구는 이미 통일을 통해 형성된 하나의 단일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내부의 이질적인 집단 간의 갈등을 비폭력적 방법으로 극복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해서 이 공동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10) Anthony D. Smith, *National Identity*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91), p. 17.

11) Ernest Gellner,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p. 3.

12)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p. 19.

13) Randall Collins, *Weberian Sociolog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 154.

나. 구성주의적 접근 방법: 사회정체성이론과 인정투쟁이론

이 장에서는 통일 이후 새로운 국가정체성 형성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주의적 접근법으로서 사회정체성이론과 인정투쟁이론을 살펴본다.

(1) 사회정체성이론

한 개인이 자신이 소속된 집단과 타 집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지하고 설정하는가를 추적하면서 이질적인 집단 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이 있다.¹⁴⁾ 개인은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개인보다는 집단의 성공을 통해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높이면서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집단(ingroup)과 외부집단(outgroup)이 형성되고 내부집단에 대한 편애(ingroup favoritism)와 외부집단에 대한 차별(outgroup discrimination) 현상이 발생한다.¹⁵⁾ 자신을 소속집단의 일원으로 동일시하는 과정은 보통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자신이 한 그룹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적(cognitive)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음은 자신이 속한 그룹이 최상의 그룹이라고 평가(evaluative)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신은 이 그룹을 좋아하고 다른 그룹을 미워하는 감정적(emotional) 단계로 이어진다.¹⁶⁾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집단에 속한 개인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자신의 집단이 더 우월한 집단이 되도록

14) Henri Tajfel and John Turner,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eds. Stephen Worchel and William Austin (Chicago: Nelson-Hall, 1985).

15) Henri Tajfel,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3, no. 1 (1982), p. 8.

16) *Ibid.*, p. 2.

노력하게 된다.¹⁷⁾ 내부집단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그 소속원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때, 외부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와 차별이 발생하며, 결국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사회정체성이론의 이러한 가설은 실제 상황에서 반드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데, 사회적 환경(social context)의 차이에 의해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무조건적 편애나 외부집단에 대한 무조건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결론이다.¹⁸⁾ 사회적 환경을 감안할 때 개인과 집단의 행동은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국인으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한국인이 이민족에 비해 우월한 집단으로 보이기를 원하게 되겠지만, 이것이 반드시 다른 민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한 개인은 소속 집단과 외부집단의 관계에서 어떤 전략을 취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보장 할 수 있을까? 집단 간 이동의 가능여부와 사회구조의 안정성이라는 변수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다. 집단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면 자기가 속한 열등한 집단으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마치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집단으로 전향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만약 집단 간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동료들과 함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집단적인 노력이나 투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서 현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 상황에 적응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를 증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구

17) George Herbert Mead,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34), p. 205.

18) Naomi Ellemers, Russell Spears, and Bertjan Doosje, eds. *Social Identity: Context, Commitment, Content* (Oxford: Blackwell, 1999).

조가 정당하지 못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대안이 있다면 현상유지를 넘어서 사회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소속 집단과 외부집단의 관계는 한국의 통일 상황에 대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단 통일 후에도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이라는 개인과 집단정체성이 유지된다면 어느 한쪽을 경제적, 사회적, 지식적 차이에 따라 열등한 집단으로 볼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이 속한 집단이 열등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들은 소속집단에서 벗어나려 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면 소속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려고 할 것이다. 통일한국의 사회적 상황이 안정되어 있어서 집단적인 노력이나 투쟁이 불가능한 경우, 차선책으로 자신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 이주노동자들과 비교하면서 소속집단의 가치를 심리적으로 제고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2) 인정투쟁이론

사회정체성이론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나 내부집단과 외부집단의 관계를 분석하는 다양한 이론적 잣대를 제공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사회 속의 대립되는 집단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사회학 이론으로 이 연구의 목표인 통일 이후 통합이라는 국가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연구에 적절한 이론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국가 내에 존재하는 집단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이론보다는 국가정체성 형성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수준(level) 높은 모델은 무엇일까? 이 연구의 목적이 통일 이후 조화로운 국가공동체의 형성이기 때문에 국가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으로 접근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도식화해주는 로드맵(roadmap)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표 II-1>처럼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이 처음 사용해서 악셀 호네트(Axel Honneth)가 개념화한 인정투쟁(struggles for recognition)이론은 다른 정체성이론과 달리 국내,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정체성의 형성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이론이 아니라 이 세 수준을 포괄해 국가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1 정체성이론의 세 수준

이론 \ 수준	국내	국가	국제
사회정체성이론	○		
국가정체성이론		○	
인정투쟁이론	○	○	○

출처: 필자 작성

예나(Jena)시기의 젊은 헤겔은 ‘인륜적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 공동체의 형성에 대해 연구했지만, 개인의 특수성(particularity)이 상호주관적 인식을 통해 국가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는데, 이런 부분을 호네트가 조지 허버트 미드(George Herbert Mead)의 사회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좀 더 설명력 있는 이론을 만들었다.¹⁹⁾ 이 연구는 호네트의 인정투쟁이론에 바탕을 두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석의 틀을 만들고자 한다. 이 분석의 틀을 통해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을 봉합하면서 하나의 공동체 형태로 집단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통해 기존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¹⁹⁾ Axel Honneth,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Cambridge: MIT Press, 1995), p. 16.

전환(transformation)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공동체 구성원의 최대한의 자유와 자존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호네프의 인정투쟁이론을 적용하는 이유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기능적으로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미드의 가설을 수정하면서 공통의 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존감(self-esteem)과 사회적 가치의 위계성은 연계되어 있으며, 다양한 집단은 타집단과 대등한 인정을 받기위해 투쟁하게 되는데 이러한 투쟁의 결과가 사회구조를 바꾸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기 때문이다.²⁰⁾

호네프가 주장하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자기인식은 보통 세 가지 단계로 발전하는데, 자기확신(self-confidence: 유년기 욕구에 대해 타자가 사랑과 관심으로 응답하는 경우), 자기존경(self-respect: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타자가 존중), 그리고 자기존중(self-esteem: 사회에 대한 공헌을 타자가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이 그것이다.²¹⁾ 역으로 세 가지 형태의 불인정이 존재할 수 있는데 1) 자기확신을 부정하는 신체적 위협이나 학대, 2) 자기존경을 부정하는 제도적, 혹은 구조적 권력관계에서의 배제, 3) 사회적으로 자신의 특정 생활방식이나 신념이 열등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사회적 공헌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태가 그것이다. 이러한 불인정이 인정투쟁을 불러온다는 것이 호네프의 인정투쟁이론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정투쟁이론이 마치 계급투쟁을 연상시키면서 대립된 세력의 극한

20) Joel Anderson, "Translator's Introduction," in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ed. Axel Honneth (Cambridge: MIT Press, 1995).

21) Axel Honneth,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투쟁을 연상시킬 수도 있지만 실상은 헤겔의 영향을 받아 사회 갈등을 투쟁이라는 방식으로 극복하며 정신적으로 더욱 고양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이론이다. 그 이유는 상호불인정에서 기인하는 극단적 투쟁은 자기사멸로 이어지고,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있는 주체인 타자의 사멸은 자아의 사멸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도덕적 감정론(Theory of Moral Sentiments)』에서 인간은 측은지심(pity and compassion)을 느끼는 존재이며,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기꺼이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사회를 형성하게 하고, 인간을 사회화시키기도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²²⁾

호네트는 한 집단은 자신의 배타적 총체성을 지양하고 타 집단을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자기집단이 타집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호네트가 주장하는 인정투쟁과정의 기저에 존재하는 가치 중의 하나는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master-slave dialectic)’이다.²³⁾ 인정이 주체적 자의식을 가진 두 존재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행위라고 가정한다면 주인은 노예에게서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노예는 주인에게 주인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헤겔은 인정이라는 상호주관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인과 노예라는 비대칭적 관계보다는 권위와 책임을 함께 행사할 수 있는 주체들 간의 상호적 관계 정립을 희망했다.

헤겔의 국가공동체론을 미드의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

22) Adam Smith,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New York: Penguin, 2007).

23)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The Phenomenology of Spir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1807]), pp. 104~110.

과 같은 사회학이론을 도입해 설명력을 높인 호네프트는 자아가 타자와의 투쟁을 통해서 형성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아(self)를 형성하는 ‘주체적인 나(I)’와 ‘객체적인 나(me)’사이에서 내부적 마찰이 벌어진 행위자는 어떤 행동을 취함으로써 주체(I)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서 주체(I)는 다른 사람의 태도에 대해 반응하는 자신이고, 객체(me)는 사회의 법률과 관습 및 이미 설정된 규범과 기대가 반영된 자신이다. 호네프트는 주체(I)의 욕구의 만족과 자아의 형성은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의 범위와 고착되어 버린 행위자들의 집단 의지를 넘어서 미래지향적 공동체를 상징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²⁴⁾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형성된 기존의 규범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해야만 보다 크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아의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논리다.²⁵⁾

고착화된 자아와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타자화(self-othering)와 인정이라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²⁶⁾ 자기타자화의 과정은 ‘객체적인 나(me)’를 보편적인 존재로 착각했던 ‘주체적인 나(I)’가 자신을 타자와의 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편협하고 추상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시작된다. 이것은 혼자 살던 사람이 짝사랑에 빠졌을 때 겪을 수 있는 상황과 유사한데, 타자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게 되거나, 원래의 순진하고 편협했던 자아가 큰 타격을 받아 자아 상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아의 상실은 자신이 몰랐던 자아의 특수성을 자각함으로써 시작

24) Axel Honneth,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p. 83.

25) *Ibid.*, p. 84.

26) Robert Williams, *Recognition: Fichte and Hegel on the Other*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2), pp. 148~149.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자를 제거하거나, 자아의 특수성을 초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정투쟁이 발생하는데, 타자를 제거하기 보다는 타자의 인정을 얻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쪽을 지향하게 된다. 타자의 인정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타자의 죽음은 자기 파괴적인 것이거나 자아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타자의 인정을 받는 것은 절대적 자아가 더 이상 절대적이 아니며, 타자와의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자아는 특수성을 유지한 상황에서 보편성을 지향하게 된다. 타자의 포용이 일방적 이어서는 안 되고 쌍방이 자아를 수정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타자화되었던 자아가 다시 복귀되어야 하는데, 원래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타자의 인정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고양된 자아로의 회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호네프가 제시하는 인정투쟁이 성공적인 공동체 형성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자기집단과 타집단의 경계를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집단이 타집단에 대해 행사하는 규범의 수정이 필요하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것으로부터의 계속해서, 상호적으로 벗어날 때 인간은 자유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오직 마음을 바꾸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지속적인 의사를 가질 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주장했다.²⁷⁾ 셋째,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사회조직이 어떤 입장을 결정할 때, 과거 인정투쟁의 대상이었던 타자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참조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통일 이후 통합이 국가

27)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p. 240.

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그룹 간의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새롭게 탄생한 통일국가와 그 내부적 통합과정에 대해 주변국의 입장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realism)가 상정하는 자폐적인(autistic) 국가모델은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안보 딜레마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만인과 만인의 투쟁(struggle of all against all)’이라는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²⁸⁾ 결국 인정투쟁을 공동체 형성으로 귀결시키는 성공적인 방법은 국가 내의 이질적인 집단 간의 경계를 수정하고, 타집단에 대한 행동의 기준을 바꾸며, 국가 내의 여러 집단뿐만 아니라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2. 분석의 틀

이 장에서는 호네프의 인정투쟁이론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 통합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정체성 형성의 내적측면과 외적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의 틀을 만들어 본다. 호네프는 헤겔의 인정투쟁이라는 개념을 체계화시키기 위해 사회학이론인 사회정체성이론도 상당부분 자신의 이론에 반영시켰다고 할 수 있다.

28)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1992), pp. 391 ~ 425.

가. 국가공동체 형성과정

통일 이후 새롭게 형성된 국가 속에는 다양한 가치를 가진 이질적인 집단들의 존재로 인해 인정투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호네프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국가공동체 형성을 위한 헤겔의 인정투쟁과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최초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이 형성되는 것이고, 둘째는 인정투쟁을 통해 법적 계약이 성립되면서 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또 다른 형태의 인정투쟁을 통해 국가가 형성되지만 이러한 국가공동체가 개인의 자유 확대와 자아실현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²⁹⁾

이것을 통일과정에 대입시키면 다음과 같다. 통일 전의 상황은 배타적 민족주의, 내부집단에 대한 편애, 그리고 외부집단에 대한 차별이 일반화되어 있는 개별적 총체성(*totality*)을 가진 국가집단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1단계). 이러한 개별적 총체성을 가진 모습으로 형성된 국가집단들이 다양한 인정투쟁을 통해 흡수통일 혹은 합의에 의한 통일로 새롭게 통일국가라는 법적 공동체를 구성한다(2단계). 통일을 통해 법적 공동체가 구성되었지만, 통일 이후에는 법적통합을 위한 인정투쟁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인정투쟁이 발생한다. 즉, 통일은 지난 시기의 분단국가가 보편적 현상이 아니라 아주 특수한 현상이었다는 내부인들의 자각으로 이어지겠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통일된 국가는 헤겔이 말하는 국가정신이 부상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이질적인 집단과 그들이 견지하고 있는 가치들이 조화롭게 통합된 것이 아니라, 단

²⁹⁾ Axel Honneth,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p. 25.

지 법적으로 통합되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제 3단계는 윤리적으로 고양된 진정한 국가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형성된 국가공동체가 개인의 자유 확대와 자아실현의 환경을 조성해 줄 때 이러한 국가공동체는 제대로 기능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마지막 3단계가 바로 이 연구의 주제인데, 이미 법적 공동체로 형성된 통일국가가 어떠한 인정투쟁을 통해 헤겔이 말하는 윤리적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가와 이 과정을 통해 국가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표 II-2 통일국가의 국가정체성 형성과정

단계	공동체의 유형	국가정체성의 유형
1단계	개별적 총체성을 가진 공동체의 형성	개별적 국가정체성
2단계	인정투쟁과 통일을 통한 법적 공동체의 형성	통합된 국가정체성
3단계	인정투쟁을 통한 윤리적 공동체의 형성	통합된 국가정체성

출처: 필자 작성

일단 정치력과 경제력에서 비대칭적이었던 두 집단이 통합되면 열등한 집단은 소수민족과 같은 상태로 전락할 것이고, 이들은 감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통합국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투쟁할 것이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소수집단의 정치적 의식은 성장할 것이고, 그들의 소수 민족주의(minority nationalism)는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때까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헤겔은 두 개의 주체가 서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았는데, 특히 주종관계에서는 상호 간의 진정한 인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헤겔과 호네트는 진정한 공동체의 형성은 통

합된 집단 속에서 과거의 분리된 집단에 속했던 개인들이 서로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줄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쌍방이 서로에 대한 구속을 중지한다는 것은 무관심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능성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줌으로써, 상대의 존재로 인해 자신의 가능성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요된 연대를 넘어서 서로 간의 인정과 해방이 가능할 때 보편적 의식과 견고한 정체성을 내포하는 헤겔의 ‘정신(Geist)’이 형성되게 된다. 특수성을 포용해 형성된 보편성은 개인적 자유의 신장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헤겔은 자아가 타자 속에서 마치 집처럼 편안한 상태라고 불렀다.³⁰⁾ 그러므로 국가공동체 형성의 마지막 단계는 추상적이고 강압적인 법에 의한 공동체에서 벗어나 국가이상의 실현이 가능한 윤리적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다. 인정투쟁의 동학을 이해하면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보일 것이다. 즉, 통일은 하나의 통합된 국가정신이 발현되고 더 고양된 국가정체성이 형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 국가정체성 형성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

새로운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한 인정투쟁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려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속력 있는 국가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느냐와 외부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는 한 집단의 정체성은 집단 내부의 특성 및 결속성과 외부 집단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³¹⁾ 먼저 국가가 내부적으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30) Robert Williams, *Recognition: Fichte and Hegel on the Other*, p. 149.

31)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어떤식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는가와 이러한 과정에서 통합된 공동체는 어떤 가치와 규범을 지향함으로써 윤리적으로 고양된 국가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겠다.

(1) 국가정체성 형성의 내적 측면

국가정체성은 보통 그 국가의 중심 세력의 이해관계와 세계관을 반영해서, 언론, 교육, 종교, 군사제도와 여러 국가통치기구를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³²⁾ 새롭게 뽑힌 미국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성경에 손을 대고 선서를 하듯 국가의 구성원들이 상징(symbol)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통된 상징이 등장하는 의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집단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³³⁾ 국가중심의 세계에서 민족정체성은 보통의 경우 국가에 의해 정해지는데, 국가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정책적 행동을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³⁴⁾

또 다른 예로 국가위기 상황이나 축구경기와 같은 축제상황에서 사용되는 국기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지나갈 때 보게 되는 관공서에 걸려있는 국기가 사회학적으로 더 정체성 문제와 위로부터의 통합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³⁵⁾ 왜냐하면 민족적 감정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2.

32) Jorge Larraín, *Identity and Modernity in Latin America* (Cambridge: Polity Press, 2005), p. 35.

33) Klaus-Peter Köpping, Bernhard Leistle, and Michael Rudolph. eds. *Ritual and Identity: Performative Practices as Effective Transformations of Social Reality*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2006), p. 14.

34) Samuel S. Kim, "Northeast Asia in the Local-Regional-Global Nexus: Multiple Challenges and Contending Explana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east Asia*, ed. Samuel S. Kim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04), p. 41.

35) Michael Billig, *Banal Nationalism* (London: Sage Publications, 1995), p. 42.

의 폭발 혹은 집단적 열정보다는 보통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민족성을 상기시켜 그들의 민족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 후 국호와 국기를 바꾸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국가상징은 오랫동안 국민을 단결시키는 역할을 해 왔는데, 70년 동안 남한의 국호와 국기를 적대적으로 대해왔던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의 국호와 국기는 통일 후에도 지속적으로 분단의 기억을 상기시켜줄 것이다. 이것은 한국 사람이 일본의 욱일승천기를 볼 때마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 사실을 떠올리는 것과 유사할 것이다. 국호와 국기를 바꾸는 과정에 북한 주민들을 참여시켜 통일국가의 국민들이 함께 만든 국호와 국기가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한반도의 통일국가가 단순히 북한 주민을 흡수한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국가라는 상징적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통일국가로서 결속력 있는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일국가 내의 제도통합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국내제도의 통합과정에 대해 주변국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고, 경우에 따라 지원과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새로운 통일국가가 지향하는 국가목표가 무엇인지가 제도통합 과정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7년 7월 1일 영국의 통치가 종식되면서 중국에 반환된 홍콩이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과 제도통합의 과정을 이행하고 있느냐는 주변국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것은 미래의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더 크게는 미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중국과 홍콩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합을 위한 제도는 ‘일국양제’인데, 이 제도는 2014년에 벌어진 홍콩의 대규모 시위에서 보듯 성공여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다. 2017년 홍

I

II

III

IV

공 행정장관 직선제 후보 제한 등에 반발해 이루어진 이 시위는 학생들이 주도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합류함으로써 중국의 제도통합정책에 대한 불만이 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단 이 사건은 홍콩의 제도 통합 문제가 민주화를 지향하는 홍콩인들의 선호와는 상관없이 북경 정부의 독단적 행동으로 결정되는 양상으로 전개됨으로써 통합과정에 큰 차질을 빚는 상황이 되었고, 아울러 대만을 포함한 중국의 주변국들과, 더 크게는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중국의 제도통합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국가가 결속력이 있는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도통합 단계에서 국가 단위, 지역단위, 그리고 전 세계적 단위라는 세 가지 층위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표 II-3 국가정체성 형성의 내적 측면과 단계별 인정 과정

인정 단계	인정의 주체	인정의 방법	불인정의 방법
1단계	국내 집단들	제도통합정책에 대한 복종	제도통합정책에 대해 반발
2단계	지역 국가들	통일국가의 제도통합정책을 지역질서의 안정차원에서 지지	통일국가의 제도통합정책을 지역질서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비난
3단계	국제사회	통일국가의 제도통합정책을 국제질서의 안정차원에서 지지	통일국가의 제도통합정책을 국제질서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비난

출처: 필자 작성

홍콩의 경우 완전한 제도와 가치의 통합은 추후의 통합과제로 넘기고 일단 중국에서는 사회주의체제, 홍콩에서는 자본주의체제를 2047년까지 50년간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비록 양측이 다른 체제를

50년간 유지하더라도 중국정부에서 전체를 통제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도적 통합과정에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치통합이라는 측면을 생각하면 홍콩의 경우는 아직도 초기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중국이 하나의 국민국가가 아니고 제국이거나 문명이라면 굳이 가치통합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 경우 한 국가 내의 다른 체제를 가진 지방정권들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면서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형성하고, 필요에 따라 통합적 국가정체성을 고취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가치통합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국가정체성의 형성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의 제국이나 문명에서 단일 가치에 바탕을 둔 국가정체성의 형성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2) 국가정체성 형성의 외적 측면

홍콩반환과 달리 동서독의 통일은 사실상 제도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이 동시에 추진되었다. 동독의 경우 사회주의체제가 급속하게 붕괴되면서 서독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통일 이후 2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내부적인 제도통합은 거의 완결된 상황이지만, 외적인 국가정체성은 아직도 형성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서구적 자본주의체제에 불만을 가진 동독인들이 통합된 사회에 존재하면서 소수자로 남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와 같은 구 동독인들이 통합국가의 가치체계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독일이 외부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로 변모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하지만 국가정체성의 외적 측면은 국제관

I

II

III

IV

계의 동화 속에서 어떤 국가가 어떤 가치를 지향함으로써 어떤 국익, 전략, 야심을 갖고 타국을 대할지를 평가하는 요소이므로 국가 간의 친소관계와 국제정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 즉 러시아가 어느 정도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할지,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할지, 혹은 미국이 냉전 이후 유일 강대국의 지위에서 물러날지는 국제정치에서 초미의 관심사이다.³⁶⁾

독일의 잡지 슈피겔은 통일 후 25년이 지난 2014년의 통일독일은 1989년 통일당시와 비교해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서유럽적인 가치체계를 상당히 상실했다고 진단했다.³⁷⁾ 즉 서독이 동독을 제도 면에서 볼 때 흡수통합한 것은 맞지만, 통합된 독일인들은 점진적으로 영미계통의 앵글로색슨족이 선호하는 자유로운 언쟁과 대립을 지양하면서 동독이 고수해왔던 합의에 기반을 둔 ‘조용한 정치’와 사회복지와 최저임금제를 강화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잡지는 이러한 경향들을 종합해서 통일독일이 통일 25년 후 네 개의 기본 입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봤는데 이것은 복지국가에 대한 희구(affection for the social welfare state), 평화주의(pacifism), 반자본주의(anti-capitalism), 반미주의(anti-Americanism)이다. 이러한 변화를 볼 때 통일독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정의 특색은 서구의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체제가 사회주의체제를 대체하는 통합이 아닌 훨씬 복합적이면서 앵글로색슨족과 다른 독일인들이 역사적으로 지향했던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 점은 남북한의 제도통합과 가치통합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36) Paul Kowert, "National Identity: Inside and Out," p. 16.

37) Dirk Kurbjuweit, "The Merkel Effect: What Today's Germany Owes to Its Once-Communist East," *Spiegel Online*, October 2, 2014.

비록 체제 면에서 우월한 남한주도의 제도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중국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통합은 남한이 주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서독처럼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배운 여러 가지 서구적 가치들을 부분적으로 상실하면서, 북한이 보유해 온 조선의 유교적 질서 등을 포함하는 한민족 고유의 가치들이 다시 통일국가의 가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정체성 형성의 외적 측면은 제도통합처럼 하나의 지향점이 있는 상황이 아님이 동서독의 통합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독일처럼 분단된 상황에서 외부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 각각의 분단국에서 발전되고 정착되었던 가치들이 통일 이후 새로운 통일국가의 위상에 맞게 과거의 왜곡된 부분이 점진적으로 수정되면서 고유의 민족적 가치가 고양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호네프가 말하는 자기타자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국적으로 국가공동체 안의 다양한 집단의 가치를 인정해줌으로써 통합된 국가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 이후 통합과정이 여러 가지 사례에서 일률적으로 전개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로드맵을 그릴 수는 없지만, 헤겔과 호네프가 말하는 법적 공동체에서 윤리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진정한 국가정신이 형성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국가정신의 형성 전에 다양한 형태의 인정투쟁이 반복하는 집단 간에 발생할 수 있다. <표 II-4>처럼 국내적으로 성공적인 가치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러한 통일국가의 가치에 대해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줄지, 아니면 영향력과 압박을 행사해서 통합된 가치를 변경하려고 할지는 흥미로운 사례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콩, 마카오,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만을 통합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을 넓히려는 방향으로 추진되

I
II
III
IV

고 있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요약될 수 있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의 꿈(中國夢)이 과연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중국의 꿈과 함께 중국이 추진해 온 시진핑 외교의 핵심 개념인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는 사실상 당사자인 미국이 억지로 외면하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중국의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중국이 어떠한 강대국으로 성장할지, 어떤 가치를 지향할지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 인정투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 대만해협에서 1990년대 중국의 미사일훈련으로 야기된 위기가 재발하거나 미중관계, 혹은 중일관계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 악화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체성의 외적 측면 변화는 국익의 우선순위와 국가안보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특정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거나 보유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새로운 국익을 형성할 수도 있다. 즉 어떤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위협이 되는 타자의 발견이 중요한데, 이러한 외부적 위협에 관련된 담론의 형성과 국가정체성의 변화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³⁸⁾ 특히 미국과 같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적(소련, ‘깡패국가’, Islamic State)을 발견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하는 국가는 위협과 국가정체성의 상관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³⁹⁾

38) Ronald L. Jepperson, Alexander Wendt, and Peter J. Katzenstein,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ed. Peter J. Katzenstein (Columbia: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pp. 60~61.

39) David Campbell, *Writing Securit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8).

표 II-4 국가정체성 형성의 외적 측면과 단계별 인정 과정

인정 단계	인정의 주체	인정의 방법	불인정의 방법
1단계	국내 집단들	통합된 가치와 정체성의 수용	통합된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 반발
2단계	지역 국가들	통일국가의 가치통합과 정체성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정	통일국가의 가치통합과 정체성이 주변국에 위협이 된다면 반발
3단계	국제사회	통일국가의 가치통합과 정체성이 국제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정	통일국가의 가치통합과 정체성이 국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반발

출처: 필자 작성

다. 국가정체성 형성과정

인정투쟁을 통해 국가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통합된 국가정체성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까? 인정투쟁의 결과로 자기타자화가 이루어지면 분단국가가 개별적으로 가졌던 국가정체성은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흡수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수집단의 영향력에 의해 소수집단은 정체성의 위기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다. 앞에서 언급한 정책적 제도통합 과정에서 다수집단의 제도가 소수집단이 가졌던 제도를 전면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수집단의 정체성은 말살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제도통합은 가치통합과 연동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가치통합의 진전에 따라 제도통합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일단 새로운 통일국가의 정체성 형성은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통일국가가 통일 전 다수집단이 형성했던 정체성을 큰 변동 없이 승계하는 경우이다(A+B=A). 이것은 통일연구원이

I
II
III
IV

발간한 연구서에서 통일한국의 정치이념과 가치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수정하면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⁴⁰⁾ 둘째, 통일 전 두 국가가 형성했던 각각의 정체성이 혼합되면서 복합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이다($A+B=AB$). 즉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가 통일을 통하여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경우이다. 셋째, 통일국가 가 통일 전에 각자 가졌던 정체성과 관련이 적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이다($A+B=C$ 또는 $A(b)$). 독일은 전술한 것처럼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앵글로색슨족이 주도하는 서구적 가치 혹은, 구동독이 유지했던 사회주의적 가치보다는 분단 전 독일인 특유의 합의지향적이며 국가주의적인 방향으로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는 경우이다.

통일 이후 새로운 국가정체성의 형성은 크게 보아 이러한 세 개의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으로 정체성이 형성될 것이라는 추측이 불가능하며 오직 사례연구를 통해 정체성 형성의 추이를 판단할 수 있다. 국가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과 가치들이 대결하고 투쟁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늘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소지가 있다.⁴¹⁾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현재의 국가정체성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이고, 수면 밑에는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국가구성원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다양한 자의식들이 존재하며, 이것들은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돌출되어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⁴²⁾ 국가정체성 형성과정은 결국

40) 배정호 외,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 3.

41) Kim and Dittmer, "Wither China's Quest for National Identity?," p. 11.

42) Anthony Giddens. *The Constitution of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1984), pp. 374~375.

국가공동체 안에서 국민들이 가치의 지향점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고, 이러한 가치에 대해 어느 정도 친숙하게 느끼며, 주변국이나 국제사회가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집단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로 귀결된다.

3. 분석의 지표

통일 이후 새로운 국가정체성 형성과정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으로 국가정체성이 형성될 것이라는 추측이 불가능하며, 오직 사례연구를 통해 정체성 형성의 추이를 판단할 수 있다.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통합과정과 국가정체성의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 호네프는 한 개인이 통합된 사회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느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도덕적으로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인간’으로 거듭남으로써 보편적 권리와 가능성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첫째는 완전한 시민으로 대접받는 사람들의 비율증대이고, 둘째는 완전한 시민이라는 의미 속에 존재하는 내용물의 증대이다. 이 내용물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넘어서 정치적 권리와 복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⁴³⁾ 예를 들어 남북한의 복지통합은 일종의 제도통합으로서 통일 이후 북한출신 주민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갖고 통합된 사회에서 권리와 책임을 가진 구성원이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일 이후 통합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크게 국가정체성 형성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로 나눌 수 있다.

43) Axel Honneth,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pp. 114~117.

가. 국가정체성 형성의 내적 지표

국가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내적 측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충돌을 포함한 인정투쟁의 강도를 사회적 분규의 발생횟수와 규모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아래처럼 정치적 권리와 자유의 문제, 국가기관 통합 문제, 화폐통합 문제, 경제수준의 평준화 문제, 복지통합 문제, 이주와 구직활동의 자유 문제, 문화와 정서적 통합 문제 등을 상정할 수 있는데 각각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격심한 사회적 투쟁양상으로 전개될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국가통합 과정에 대한 국내의 여러 집단들의 인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치적 시위, 행정조치에 대한 반발, 각종 범죄 등에 대한 횟수와 규모에 관한 정보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내부적 통합에 대해 지역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반응과 반발을 조사해서 통일국가의 국가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는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1) 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문제

통일 이후 분단되어 살았던 양쪽의 주민들에게 투표권을 포함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부여 문제와 지방자치 허용 정도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다.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지방자치를 제한하는 것은 상당한 반발과 투쟁이 예상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국내적 통합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

(2) 군부대의 재배치를 포함한 국가기관 통합 문제

과거 분리되었던 지역에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용할지, 아니면 완전한 국가기관의 통합을 추진할지는 개별 국가의 통합전략 문제이다. 하지만 자치의 허용보다는 일단 전국토에 존재하는 국가기관의 완전한 통합이 통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과 홍콩처럼 일국양제를 지향하는 국가체계는 통일독일처럼 완전통합을 지향하는 체계에 비해서 통합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통합국가에서 군부대의 재배치와 같은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통합과정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과거 분단되었던 지역의 평준화를 위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냐의 여부도 중요한 문제이다.

(3) 화폐통합 문제

경제활동의 기초를 형성하는 화폐통합 문제도 통합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1990년 7월 1일 서독과 동독은 정치통합과 동시에 화폐통합을 추진하였다. 시장의 논리를 배제한 급진적 화폐통합은 고실업·고물가로 이어지며 통일독일 경제를 힘들게 했는데, 통일 10주년까지만 해도 독일은 주변국가로부터 ‘유럽의 병자(sickman of Europe)’로 불리기도 했다.

(4) 소득과 실업률을 포함한 경제수준의 평준화 문제

통일이 되었지만 소득수준과 실업률이 과거의 분단선을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좁혀지지 않는다면 제도통합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통일이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라면, 기본적으로

I

II

III

IV

소득수준과 실업률의 차이는 공동체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므로 통합도를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5) 복지와 교육통합 문제

사회보장제도의 남북한 분리 운영, 혹은 차등적용은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국가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 하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차등적용이라는 용어자체가 2등 국민을 만드는 것과 같은 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남한 주도의 통일이 발생한다면 남한은 남한 주민들에게 주어진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한반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통합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통일 후의 통합과정에서 복지와 교육의 혜택이 차별 적용된다면 북한 주민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의 초래가 예상된다. 남북한 사회보장제도를 분리 운영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책 선언적 차원에서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보편적 혜택이 가는 복지와 교육제도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주민에게 보편적 복지와 교육을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은 구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가면서 점진적으로 보편적 복지와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6) 이주와 구직활동의 자유 문제와 인구변화

이주와 구직활동의 자유는 윤리적 국가공동체의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다. 통합된 상황에서 이주와 구직활동의 자유를 막는 것은 국가공동체가 개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윤리적 문

제를 발생시키면서 완전한 통합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이주와 구직활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인구분포의 변화는 통합의 수준을 분석하는 데 주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7) 문화와 정서적 통합 문제

통일 이후 통합은 단순히 정치, 경제, 사회적 통합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서적 통합을 포괄하고 있다. 새롭게 통합된 국민들이 통일 전의 각각의 국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문화적,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새롭게 통합된 국가에 대해 어떤 형태의 정서적 일체감을 가지는지를 여론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즉 법적, 제도적 장벽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마음의 장벽’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문화와 정서적 통합은 국민통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나. 국가정체성 형성의 외적 지표

국가정체성 형성의 외적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는 통일된 국가가 어떤 가치와 제도를 지향하는 쪽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 주변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이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는 분단국 주민들의 가치의 이질화 정도,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등의 외부 가치의 유입정도, 민족 고유의 가치에 대한 계승정도, 주변국가가 통일국가를 보는 시각,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공동체의 존재여부 등이 있다. 일례로 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 인물, 혹은 지역에 대한 충성도를 언론보도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아 볼 수 있다. 이것과 함께 납세에 대한 의지, 선거나 투표의 참여율, 정당 지지도, 중앙과 지방 정치인과 행정엘리트의 출신지 조사 등도 국가정

I

II

III

IV

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정체성 형성의 외적 측면은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가 타국에 대해 우방국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면 적대적 국가로 성장할 것인가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 통일국가가 지향하는 가치

기본적으로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분단국가의 가치들 중의 어느 하나가 승계되고 있는지, 가치들이 융합되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가치가 발굴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가능성도 비율만 다를 뿐, 함께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서 추이를 조사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수년간 축적된 여론조사의 데이터가 있으면 가장 명확하게 추이를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언론보도를 종합해서 그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통일은 통일시점에서 서독이 가진 서구적 가치가 가치의 서열에서 가장 두드러졌겠지만 점차 사회민주적 가치가 강해지고, 최근에는 독일인이 역사적으로 보유했던 고유의 가치가 부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공식적이며 표면적인 국가정책적 통합 노력보다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한 국가의 전반적인 지향점을 보여주는 국가정체성 형성의 외적 측면이 국가정체성의 민낯을 드러내는 더 합당한 표식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주변국이 통일국가를 보는 시각

통일국가의 국가정체성 형성 노력에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인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일국가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인지,

혹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인지, 아니면 민족고유의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인지는 주변국의 우려와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통일국가에 대한 주변국가나 국제사회의 인정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나 신문기사를 활용하거나 주요국의 인사들과 관련 내용에 대해 인터뷰를 할 수 있다.

(3) 지역공동체의 존재여부

통일 이후 통합을 통한 국가정체성 형성에 대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인정문제는 국제적 환경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화가 진전된 곳에서는 통합과정에 대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반발이 없을 수도 있지만, 동아시아와 같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다투는 환경에서는 특히 군부대의 재배치 문제와 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문제는 주변국의 관심과 개입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역 혹은 안보공동체의 형성여부, 지역 혹은 안보공동체의 기능여부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ASEAN+3(ASEAN+한국, 중국,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역 혹은 안보공동체는 존재여부보다는 적절하게 이러한 공동체가 기능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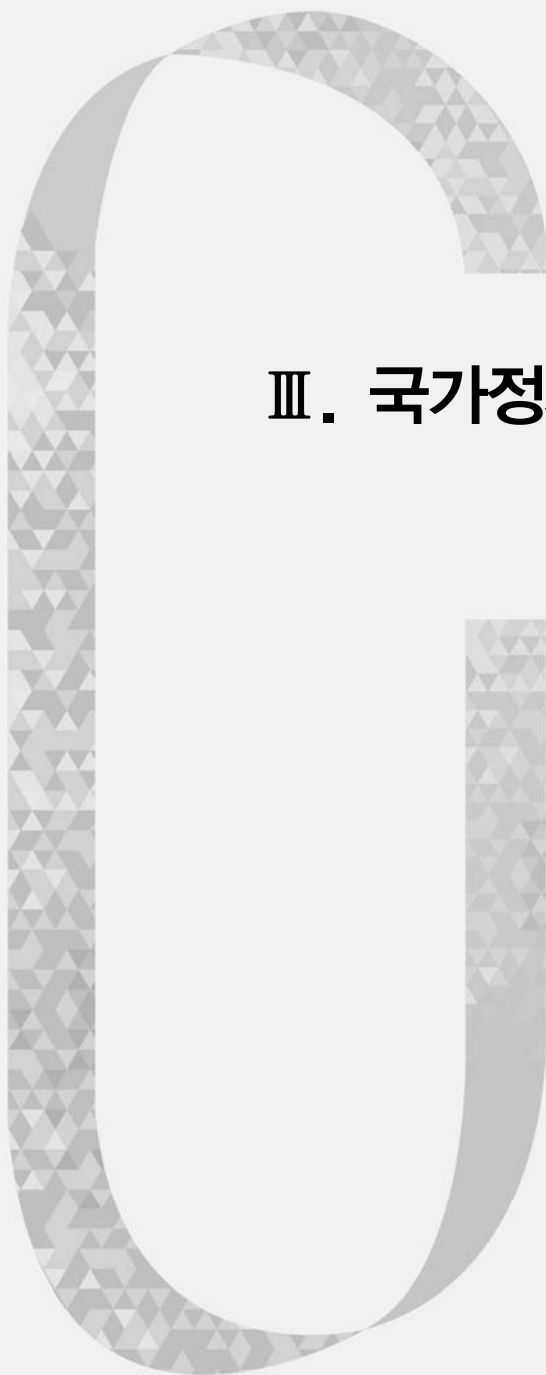
이 연구는 한 국가사회의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인정투쟁을 통해 국가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의 형성과정을 검토해 봤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로는 통일 이후 새롭게 형성된 국가는 통일 전 다수집단의 정체성을 승계할 수도 있지만, 승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두고 정체성의 변화추이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다. 통일 이후 발생할 통합과정은 험난한 인정투쟁의 과정이고 이러한 인정투쟁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선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통일 전의 한국이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를 지향했다고 하더라도 통일된 국가가 반드시 통일 전의 이상과 가치를 승계하는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글로벌 코리아는 한국이 중견국가라는 정체성을 갖고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된 정책기조였지만, 새로운 통일국가는 인구가 8,000만 명에 이르는 세계 주요국가 중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그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성공적인 통합과정을 통해서 조화로운 통일국가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얘기다.

통일독일이 보여준 25년 간의 유동적인 국가정체성의 변화처럼 통일한국이 비슷한 정체성의 변화궤적을 따른다면, 한민족 고유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재건되면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지난 수십 년 간 분단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된 북한지역, 중국의 동북3성, 극동러시아의 경제성장을 자극할 수 있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이러한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비교적 싼 노동력과 결합될 때 국제무대에서 한민족의 활약은 지금보다 훨씬 두드러질 수 있다. 경제력의 부상과 함께 한민족 고유의 가치들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분출되면서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이 통일국가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으려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통일이 한민족과 주변국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정체성의 형성과정이 선순환적으로 진행될 때 가능할 것이고, 인정투쟁이 격화되어 다양한 형태의 분규가 발생하면 그 만큼 통일과 통합에 대한 열망과 지원이 사라질 수 있다. 한편으로 통합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내 문제의 해결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분단되었던 주민들이 외부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함께 뭉칠 수 있도록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통일국가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시기에 제기된 미국과 중국, 혹은 중국과 일본 간의 균형자(balancer)와 같은 역할 논의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통일국가의 안보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통합된 국가정체성 형성이 지연되고 인정투쟁이 격화되면 70년간의 적대적 공존의 결과로 동질적인 민족정체성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서 ‘북한 민족’ 혹은 ‘김일성 민족’이 통일 후에도 상당기간 잔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혈연적 유대, 기억, 가치, 상징 등의 동질성에 기반을 둔 혈연적 정체성보다는 한국전쟁과 무한대결의 양상을 보여준 한반도 분단의 종식과정이 남북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통일 후의 통합과정이 독일통일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Ⅲ. 국가정체성 형성의 사례연구

1. 독일

가. 배경

독일통일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다는 사실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과정과 연이어 급박하게 전개되었던 통일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어떠한 계획 및 청사진을 토대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 상황과 동독내부의 급변으로 인해 위기관리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탓에 독일의 통일 및 통합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일 및 통합과정에서도 분단시기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던 내독 관계의 긍정적 영향력을 사회일각에서 내심 기대하기도 했다.⁴⁴⁾ 1970년대 초 이래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서독정부의 대동독 접근정책 덕분으로 내독 관계는 체제경쟁 속에서도 접촉 및 의사소통을 지속함으로써 최소한이나마 민족문화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초기의 어려움은 통일독일의 새로운 국가정체성과 더불어 머지않아 극복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새로운 국가정체성의 형성이나 내적통합의 진전은 생각보다 여러 난관을 헤치며 더디게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분단시기 동서독에 형성된 이질적 문화의 관성력, 통일독일이 처한 국내외 환경,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기득권의 상실과 새로운 이익갈등 등 여러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독일의 통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⁴⁴⁾ Petra Bauer-Kaase and Max Kaase, "Five Years of Unification: The Germans on the Path to Inner Unity," *German Politics*, vol. 5, no. 1 (April 1996), p. 3.

분단시기 동서독에서 만들어지고 확립된 정치·사회문화와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동서독 국가정체성의 특징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의 국가정체성 확립과정은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될 수 있다. 첫째는 외집단(out-group)인 타국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국가정체성으로서 패전국가인 동서독 모두 동서블록의 동맹체계에 수용되는 과정이다. 둘째는 동서블록의 대결 속에서 불가피하게 전개된 동서독의 체제경쟁에 따른 상호차별화가 만들어 낸 동서독의 국가정체성이다. 셋째는 국내적으로 탈나찌화를 거치며 전후 독일의 전통을 벗어나 서독과 동독이 각각 서유럽의 시민사회와 소련식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내적정체성이다.

(1) 국제환경 차원

냉전시기 동서독의 국가정체성은 일반적인 국가의 그것과 차이를 보인다. 패전국가로서 정상국가(normal state)가 되기 어려웠던 탓에 애초부터 동서독은 타국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재구성하는데 커다란 한계를 가졌다. 서독의 경우, 초대총리였던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민족주의와 직결되는 통일문제보다 서독의 주권회복에 주력했다. 즉 서유럽통합을 비롯하여 1955년 나토 가입 및 재무장을 통해 서구동맹의 일원이 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었다.

서유럽통합 및 블록동맹체제로의 결속은 시민당정부에서도 대외정책적 기본목표였다. 사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신동방정책 및 독일정책도 서독이 서방진영에서 발을 굳건하게 디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브란트 이후 서독의 분단관리정책은 민족문제의 해결보다는 국제정치적 긴장완화에 동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민족정체성의 추구와는 거리가 멀었다. 더욱이 탈나찌화 정

책은 서독사회에서 민족주의를 금기어로 여기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상황은 동독 역시 마찬가지였다. 바르샤바 조약기구(Warsaw Treaty Organization: WTO)와 코메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ociation: COMECON)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위성국가에 대한 소련의 획일화 정책에 철저히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탓에 동독에서도 타국과의 차별화 방식으로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려웠다. 나아가 동독은 서독보다 더욱 강한 탈나찌화를 진행했으며, 사회주의 이념으로 인해 민족주의가 발붙이기는 한층 어려웠다.

(2) 동서독관계 차원

동서독의 체제차이는 내독 관계에서 상호 차별화를 유발했고, 이 과정을 통해 동서독의 상이한 국가정체성이 확립되었다. 동서독 정부차원에서는 블록대결구조 속에서 체제경쟁을 했으나, 교류·협력이 지속된 덕분에 이러한 경쟁이 양독 주민들 사이에 상호 차별화를 촉진시켜 상이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끼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분단에도 불구하고 서독정부는 1960년대 이후로 민족적 동질성의 유지를 독일정책(대동독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즉 서독은 “독일의 분단을 자유지향적 토대 위에 평화적 방법으로 극복할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목표가 성취되지 못하는 동안에는(동서독을 포함하는) 독일인들이 분단의 결과를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라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주력했다.⁴⁵⁾

동독정권은 1970년대 초반 동서독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서독의 영

45) 에곤 바의 1963년 투징(Tutzing) 연설의 중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조함. Egon Bahr, *Sicherheit für und vor Deutschland* (München: Carl Hanser Verlag, 1991), pp. 11~17.

향력을 우려하여 ‘차단정책(abgrenzungspolitik)’을 추진했고, 이 맥락에서 서독과 동독은 각각 독일민족의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다른 민족이라고 선언했다. 서독정부가 ‘1민족·2국가·2체제’를 전제로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추구했다면, 동독정부는 ‘2민족·2국가·2체제’를 내세워 독일통일은 더 이상 논의할 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동독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노력 덕분에 동서독 주민들의 접촉이 증대될 수 있었기 때문에 체제의 차이로 인해 고유의 민족정체성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분단 기간 동안 동서독 주민들이 각각 체제이념에 익숙해진 탓에 서독정부가 원했듯이 민족적 동질성의 유지 목표가 제대로 성취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민족문화에서 상호 이해는 가능했을지라도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상이한 일상적 삶을 살았던 탓에 특히 동서독의 청소년들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고, 서로 다름을 크게 느꼈다.⁴⁶⁾ 현대화로 인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공동체적 응집력에 작용하는 민족의식의 영향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민족 전통을 아무리 중시하고 공유하려 해도, 동질성을 지속시키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표 III-1>은 서독 주민들의 대동독인식에 관한 설문결과로서 젊은 세대로 갈수록 동독을 외국으로 간주하며, 동독 주민들을 같은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6) Werner Sauerhöfer, “Die Jugend-Verbandskontakte zwis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Kein Alter zum Ausruhen* (Bonn: Deutscher Bundesjugendring, 1989), pp. 157~159.

표 III-1 서독 주민의 연령대별 대동독 인식(1987년)

(단위: %)

	전체	14~29세	30~49세	50~59세	60세 이상
독일인은					
- 하나의 민족이다	78	65	74	93	90
- 별개의 민족이다	21	34	26	6	9
서독과 동독은					
- 한 국가이다	21	16	15	22	32
- 별개의 국가이다	79	83	85	77	67
동독은					
- 외국이다	32	51	38	17	12
- 외국이 아니다	67	48	61	83	88

출처: "WELT-Umfrage," *Die Welt*, Oktober 27, 1987.

(3) 국내환경 차원

(가) 서독

동서독은 1949년 정부수립 이후 서로 다른 현대화 전략을 수용한 결과, 체제 차이에 기인하는 상이한 국가정체성이 내적으로 구성되었다. 서독은 내적으로 시민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했으며, 외적으로는 유럽분단의 극복을 독일통일의 기반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내·외적 전략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은, 19세기 후반 이래 독일이 유럽을 피로 물들였던 배경에는 독일의 특유한 독자적 길(sonderweg)이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독일의 유럽체제에 편입시킴으로써 향후 독일의 일탈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막으려 했으며, 독일의 엘리트들도 과거 반성의 차원에서 전승국의 의지에 부응했다.

I
II
III
IV

경제적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라는 독일의 ‘사회국가(social state)’ 전통이 반영된 체제가 선택되기는 했으나, 시민민주주의를 수용한 서독의 성공적인 서구화(현대화)는 전후 서독의 정상국가화를 비롯하여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또 이를 토대로 신동방정책과 같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가능했다. 그렇지만 서독이 탈나찌화를 위해 민족주의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은 결국 국가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 서구의 근대국가가 민족국가(nation state)의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물론 독일은 오랫동안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개념이 구분되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문제는 민족국가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정체성 형성이 보통국가들과 다르게 나타났고, 더욱이 분단국가로서 통일의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문화적 모멘텀을 확립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전후 정치문화 연구에서 가장 주목 받는 주제들 중의 하나가 전후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의 민주적 정치문화의 정착 및 발전에 관한 것이었다. 이 맥락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서독에서 국민들이 국가적 긍지를 느끼는 분야가 <표 III-2>와 같이 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국가에 대한 긍지는 국가정체성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다음의 표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표 III-2 서독 주민의 국가 자긍심 변화

설문: 당신은 어떠한 분야에서 국가에 대한 긍지를 느낍니까? (중복응답 가능)

(단위: %)

분야	1959년	1978년	1988년
정치제도 및 헌법	7	31	51
경제	33	40	50
사회보장제도	6	18	3
주민들의 인성	36	25	-
과학분야에 대한 기여	12	13	37
예술분야에 대한 기여	11	10	22
기타 및 무응답	43	39	50

출처: David P. Conrardt, "Changing German Political Culture," in *The Civic Culture Revisited*, eds. G. A. Almond and S. Verba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0), p. 230; David P. Conrardt, *The German Polity* (New York: Longman, 1993), p. 55.

2차 세계대전 후 서독 주민들 사이에 민족의식이 갑자기 증발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민민주주의와 탈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교육을 위해 서독정부 및 사회의 지대한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1960년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발전과 복지수준의 증대를 기반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즉 1960년대 말을 기점으로 서독에서 정치사회적 가치체계의 큰 변화가 발생했다. 당시 학생운동을 비롯하여 1970년대 소위 ‘조용한 혁명’으로 불리는 ‘신 사회운동’은 근대적 정치사회문화와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문화혁명적 성격을 띠었다.⁴⁷⁾

⁴⁷⁾ Ronald Inglehart,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I
II
III
IV

새로운 정치 및 사회문화는 정당정치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즉 기존 정당들은 환경, 여성, 평화 등 신사회운동적 주제들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녹색정당이 대안정당으로 등장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정치사회문화의 변화는 근대적인 민족국가 의식을 더욱 약화시켰다. 더욱이 서유럽통합이 진전되는 가운데 단순한 탈나찌화를 넘어 새로운 지역주의를 향한 탈민족주의적 의식이 나타나기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독 주민들은 더 이상 민족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헌법과 경제발전 및 복지에서 국가정체성의 기반을 찾게 되었다. 소위 ‘헌법애국주의’나 ‘경제애국주의’라는 표현은 서독인들의 자긍심이 민족이 아니라 헌법가치와 경제발전에서 연원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⁴⁸⁾

물론 서독사회가 민족정체성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서독의 지식인들 사이에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1980년대 중반 ‘역사가 논쟁’이 전개되었다. 새롭게 제기된 정체성 논의는 성장의 한계와 물질주의에 대한 반발, 그리고 독일의 문화 및 정신적 가치를 재정립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역사가 논쟁에서 드러났듯이 서독의 국가의식과 역사적 과오의 원천으로 간주되는 독일의 민족의식 사이에 긴장을 해소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⁴⁹⁾

48) 1980년대 후반의 한 설문조사 결과, 서독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가진 자들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변 서유럽국가들에서 나타나는 50~80%의 결과와 크게 대비되었다. Werner Weidenfeld, “Politische Kultur und deutsche Frage,” *Politische Kultur und deutsche Frage*, hrsg. W.Weidenfeld (Köln: Wissenschaft und Politik, 1989), p. 33.

49) *Ibid.*, p. 34.

(나) 동독

동독 역시 사회주의체제를 현대화 전략으로 수용하게 되면서 국가 정체성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여타 동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동독의 사회주의체제도 기반을 확립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196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체제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졌고, 1970년대 초반 서기장으로 취임한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는 이를 토대로 동독이 ‘발전된 사회주의사회’이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했다.⁵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독재의 사회주의체제에서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가치 및 이익은 당이 제시한 원칙과 목표에 부합해야 했기 때문에 공적 분야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엄격했다. 공산당은 하 부기관화 되어있는 사회단체들을 매개로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에까지 침투한 비밀경찰(stasi)의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모든 사적·공적 생활을 속박했다. 이러한 정치사회구조 속에서 동독 주민들은 심리적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웠으며, 사회심리적으로 만성적 결핍증을 겪었다. 그 결과 동독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왜곡 현상이 발생했으며, 비정상적 행위유형이 일반화되었다.⁵¹⁾

동독체제의 발전과정에서 독특한 정치·사회문화의 이중성이 배태되었다. 동독정권은 사회주의체제의 구축을 위해 사회주의적 인간개조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사회주의적 가치를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내면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적 분야에서 평등이 우선되는 등 사회주의

50) 동독의 사회주의체제 도입 이후 체제 확립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김학성, “동독의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제,” 『정치·정보연구』, 제16권 1호 (2013), pp. 7~24.

51) Hans-Joachim Maaz, “Psychosoziale Aspekte im Deutschen Einigungsprozeß,”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9 (1991), pp. 19~20.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저항이 적지 않았다. 1953년 6월 동독노동자 봉기는 밖으로 드러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사회주의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주민들은 서독으로 이주를 감행하기도 했다. 동독에 남았던 주민들 사이에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전통적 가치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어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독의 정치문화에는 세 가지 요소가 공존하고 있었다. 첫째, 독일의 전통적인 절대관료국가(obrigkeitsstaat)적 요소로서 국민의 복종과 예속을 미덕으로 삼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독일의 노동자문화적 요소로서 이는 동독정권의 근면과 규율을 강조하는 공적 문화에 흡수되었다. 셋째,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지향하여 동독정권에 의해 강조된 문화혁명적 요소이다.⁵²⁾ 실제로 이러한 요소들이 혼재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참여기회를 얻지 못한 동독 주민들의 정치문화를 제대로 규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들은 억압과 통제가 작동하는 공적 생활에서 도피하여 개인적 삶에 더욱 집중하는 사회문화적 양태를 보였으며,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 동독 주민들의 가치정향은 전통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한다.⁵³⁾

1970년대 들어와 가속화된 체제발전정책은 동독 주민들의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의 차이를 더욱 벌려 놓았다. 서독과의 체제경쟁을 위해 체제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려 했던 동독정권의 정책방향은 사회구조의 변화와 계층 및 계급 분화를 초래했으며,⁵⁴⁾

52) Gert-Joachim Glaessner, "Politische Kultur und Nationales Erbe in der DDR," *Einheit-Freiheit-Selbstbestimmung: Die Deutsche Frage im historisch-politischen Bewußtsein*, hrsg. Karl-Ernst Jeismann (Frankfurt a.M.: Campus Verlag, 1988), p. 127.

53) 가족이나 친지들 사이에서 전통적 미덕인 친숙함, 이웃사랑, 정확성, 청결, 근검 등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이 하나의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Winfried Gebhardt and G. Kamphausen, "Mentalitätsunterschiede im Wiedervereinigten Deutschland? Das Beispiel Zweier Ländischer Gemeinde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6 (1994), p. 34.

이와 더불어 유연해진 문화정책으로 인해 사적 영역이 차지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확장되었다. 나아가 동서독 관계의 발전을 비롯하여 서독 방송청취가 가능해짐에 따라 동독 주민들이 공적 가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적 영역을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특징 탓에 동독사회는 ‘틈새사회(nischengesellschaft)’로 규정되기도 했다.

틈새사회는 체제의 정통성 결핍과 국가정체성의 혼돈을 그대로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정통성 결핍은 동독정부 수립 이후 항상 동독정권을 괴롭혀 온 문제였다. 애초 동독정권은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정통성과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려 했으며, 서독과의 체제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되자 경제적 성장을 통해 이를 만회하고자 했다. 동시에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1974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민족 이론을 내세우는 등 역사왜곡을 통해 서독과 차별화하려고 노력했다.⁵⁴⁾ 1970년대 이후 동독정권의 그러한 노력은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는 체제정통성과 국가정체성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체제발전의 전략에 기인하는 사회구조 변화와 민족전통의 활용은 사회주의체제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나. 통일 직후 통일독일의 국가정체성 수준

통일 당시 독일에서는 새로운 국가정체성의 형성 필요성이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통일과정에서 주변국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54) Katharina Belwe, “Sozialstruktur und Gesellschaftlicher Wandel in der DDR,” *Deutschland Handbuch*, hrsg. W. Weidenfeld and H. Zimmermann (München: Carl Hanser Verlag, 1989), pp. 135~140.

55) Bernd Riebau, “Geschichtswissenschaft und Nationale Frage in der Ära Honecker,” *Deutschland Archiv*, nr. 5 (1989), pp. 534~538.

독일정부는 ‘유럽화된 독일’을 강조했다기 때문이다. 유럽통합의 심화 결과, <표 III-3>에서 보듯이 EU의 주요 국가 국민들 사이에는 유럽시민으로서의 자의식이 어떤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에 상응하여 국가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독일정부 및 사회 역시 유럽통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구태여 국가정체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독일통일 직후 내적통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통합을 위한 정체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실 ‘마음의 장벽’ 또는 ‘한 국가 내 두 사회’라는 표현은 단지 통합의 어려움을 넘어 통일독일의 정체성 확립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동독 주민의 경우, 국가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순간적 정체성 혼란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서독 주민들도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는 것이다. 통일비용과 정당정치 혼란에 직면하여 분단시기 서독의 국가정체성 기반을 제공했던 ‘경제애국주의’ 및 ‘헌법애국주의’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표 III-3 독일·프랑스·영국인의 국가정체성 비교(1992년)

설문: 당신은 미래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까?

(단위: %)

	오로지 국적 (독일인, 프랑스인, 영국인)	국적과 동시에 유럽인	유럽인인 동시에 국적	오로지 유럽인	모르겠다
독일	41	43	9	3	3
프랑스	30	55	6	6	2
영국	54	35	4	4	2

* 이 설문은 유럽통합의 여론조사기관인 Eurobarometer가 1992년 4월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출처: Eurobarometer (1992), <<http://ec.europa.eu>>. (검색일: 2015.5.30.).

이에 따라 통일독일에서는 내적통합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 의식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근대국가적 공동체의 기반인 민족의식에 호소할 수 있다면 가장 손쉬울 것이나, 서독에서는 탈나찌화의 연장선에서 탈민족주의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국가정체성을 내놓고 민족의식에서 찾기로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은 1994년 독일 연방대통령이었던 로만 헤어초크(Roman Herzog)가 통일 4주년 기념사를 통해 ‘민족적 동질성’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⁵⁶⁾ 여기에는 통일독일 국민들 사이에 민족의식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적통합을 위해 요구되는 관용, 상호이해, 협력이 적극적으로 실천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 맥락에서 통일 직후 독일에서 국가정체성의 혼란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또 그렇게 된 이유가 분단시기 동서독의 이질화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었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독일인으로서의 자긍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정체성의 혼란상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 예로써 아테나워 재단의 국가정체성에 대한 축적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독일인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는 서독 주민은 1986년 73%, 1988년 69%, 1989년 72%, 1990년 64%, 1993년 64%로 줄어들었으며, 동독 주민도 통일 직후인 1990년에 74%였던 수치가 1993년에는 59%로 추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 연구의 1993년도 설문결과는 <표 III-4>와 같이 정리되며, 이는 과거의 자료와 비교를

56) “...나는 고유한 ‘민족적 동질성’, 즉 우리에게 표면상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우리에게 그토록 긴요한 ‘민족적 동질성’이 과연 무엇인지 나에게 명쾌하게 설명할 만한 사람을 아직 보지 못했다...” Bundespräsidialamt, “Ansprache von Bundespräsident Roman Herzog bei einem Festakt aus Anlaß des Tages der Deutschen Einheit in Congress-Centrum Bremen,” *bundespraesident*, Okt 3, 1994.

통해 통일 이후 정체성 혼란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⁵⁷⁾

표 III-4 동·서독지역 주민들의 국가정체성 지표(1993년)

설문: 당신은 독일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위: %)

		서독지역		동독지역	
		긍지를 가짐	긍지를 갖지 못함	긍지를 가짐	긍지를 갖지 못함
성별	남성	67	32	60	40
	여성	61	39	58	42
연령별	18~29세	45	54	55	45
	30~39세	57	43	54	46
	40~49세	60	39	61	38
	50~59세	71	28	60	40
	60세 이상	77	23	64	36

*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지 못한 경우는 무응답 탓임.

출처: Konrad-Adenauer-Stiftung, *Department of Political Research, Archive*, 9301/9302; Hans-Joachim Veen and Carsten Zelle,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Priorities in Eastern and Western Germany," *German Politics*, vol. 4, no. 1 (April 1995), p. 11에서 재인용

국가에 대한 자긍심 감소에서 엿볼 수 있는 정체성 약화는 다른 한편으로 독일 정당구조의 파편화 현상, 동서독 지역 간 이념적 가치의 편차 증대 등의 문제를 통해서도 직·간접적으로 나타난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국가정체성은 정치·경제체제의 가치 공유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독일의 정당통합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구서독의 정당구조를 기반으로 삼았다. 그러나 통일 이후 과거 주요

57) Hans-Joachim Veen and Carsten Zelle,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Priorities in Eastern and Western Germany," p. 8에서 재인용

3당(기민련/기사련, 사민당, 자민당)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구서독의 정당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구동독의 공산당 후신인 민사당이 점차 세력을 팽창했으며, 대안정당들의 이합집산, 중도 자민당의 세력약화 등의 성격을 띠었다. 또한 소수정당들이 의회 진입에 성공하면서 정당들이 파편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표 III-5>에서 보듯이 동서독 지역에서 선거의 결과 차이가 적지 않게 나타난 사실은 통일독일에 정치체제에 대해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 상이한 인식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준다.

표 III-5 통일 이후 주요 독일정당의 연방의회선거 득표율

(단위: %)

	1990년			1994년		
	서독지역	동독지역	독일전체	서독지역	동독지역	독일전체
기민련/ 기사련	43.7	41.8	43.3	42.1	38.5	41.5
사민당	25.9	24.3	33.5	37.5	31.5	36.4
자민당	10.6	12.9	11.0	7.7	3.5	6.9
녹색당	4.7	0.1	3.8	7.9	4.3	7.3
민사당	0.3	11.1	2.4	1.0	19.8	4.4

* 상기 득표율은 정당에 대한 투표인 제 2투표(Zweitstimmen)를 합산한 것임.

출처: Emil Hübner, hrsg., *Jahrbuch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92* (München: Dtv Verlag, 1991), p. 215; "Appendix: 'Superwahljahr' 1994: Key Dates," Geoffrey K. Roberts, "Superwahljahr: The German Elections in 1994," *German Politics*, vol. 4, no. 2 (August 1995), pp. 160~164.

공동체에 대한 일체감으로서의 정체성 수준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체제가치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지와 직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 체제가치 차이가 줄어들

들지 않고 확대되는 경향은 국가정체성 혼란을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독 주민이나 동독 주민들 모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적 가치 및 규범을 수용하고 있다. 문제는 양 지역 주민들 사이에 가치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예컨대 <표 III-6>에서 잘 나타나듯이 동독 주민들은 ‘자유’보다 ‘평등’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다. 구동독체제 하에서 내면화된 평등이 우선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 표 III-6 동독지역 주민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추이

설문: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평등 중 무엇이 더욱 중요한가?

(단위: %)

	1990년 3월	1990년 8월	1992년 12월	1993년 10월	1994년 12월	1995년 8월
평등이 더 중요	43	47	53	51	58	46
자유가 더 중요	46	44	35	36	29	36
모르겠다	11	9	12	13	13	18

출처: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정체성 혼란은 청소년층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통일에 따른 정치·사회·경제·문화적 급변이 성년보다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청소년의 정체성 혼란이 확대·지속되는 경향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일독일의 국가체제에 대해 양 지역 청소년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을 가리지 않고 청소년의 현실에 불만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III-7>의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동독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통일독일의 국가체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독 청소년들도 국가체제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정체성 약화는 독일의 내적통합 과정에서 매우 주목받았으며, 우려의 대상이었다.

● 표 III-7 독일 청소년들의 정치적 정향(14세~29세 대상)

설문: 통일당시 시장경제, 인권 그리고 사회주의가 서로 연결된 새로운 국가 형태가 탄생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위: %)

	서독지역		동독지역	
	1994년	1997년	1994년	1997년
새로운 국가형태를 원함	8	15	40	49
현재의 연방공화국 형태에 만족함	75	60	36	27
미결정 또는 기타 응답	17	25	24	24

출처: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April 16, 1997.

이렇듯 통일 직후 한동안 독일에서 나타난 국가정체성 혼란은 내적 통합 문제의 해결을 한층 어렵게 했다. 일차적으로는 분단시기에 형성되었던 동서독 주민의 상이한 정체성과 정치사회문화가 그 문제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므로 동서독 주민들 사이의 차이가 짧은 시간 내 상호 화학적 결합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나아가 급박하게 전개된 통합과정도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 특히 서독 주민들은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불만이, 또 동독 주민들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부적응 및 불만족 역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애초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불만이 고조된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를 ‘식민화’되었다든지 ‘이등시민’이라는 의식이 존재하는 한,

I
II
III
IV

동독 주민들에게 조속한 시간 내 새로운 국가정체성의 형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어쨌든 통일독일의 정부와 사회는 내적통합을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통합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성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노력들이 결국에는 공동체적 가치와 공유이익을 확대하게 될 때, 구성주의가 강조하듯이 공동체적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물질적인 이익과 가치가 어떤 형태로든 상호 내지 교호작용을 거치게 될 것이다. 또한 전통적 가치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구조의 형성에 따르는 새로운 가치의 구성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국가정체성의 형태나 그 의미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구화와 유럽통합의 심화가 각국의 정체성보다 유럽 정체성의 강화, 또는 한 국가 내에 지역적 정체성이 강화되는 추세를 예상할 수 있다.

다. 통일독일의 정체성 형성 노력과 국가정체성 변화

(1) 독일의 국가정체성 변화 추이

나찌의 과거사와 분단의 경험 탓에 통일 이후에도 민족주의나 민족 의식이 공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독일인들에게 여전히 불편하다. 이는 2006년 독일에서 개최된 월드컵 축구경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자국의 축구팀을 응원하는 열기는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수많은 독일국기가 관중석에 등장한 것은 1945년 이후 처음이었기 때문에 독일인 스스로 놀랐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Kofi Annan)은 “진정으로 통일되고 행복해 하는 독일국민을 볼 수 있었다”라고 말했으며, 민족주의 부활로 비취

지는 것을 우려하는 어떤 독일기자의 질문에 그는 오늘에야 독일인이 더 이상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고 대답했다.⁵⁸⁾

독일 언론은 그러한 현상을 ‘파티 애국주의(party-patriotismus)’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 독일 내에서는 상이한 두 가지 해석이 나왔다. 하나는 일상적인 것이 아닌 특별한 이벤트에 몰입한 것으로 일종의 축제적 의미를 가진 국민적 정서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통일 이후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던 민족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근본적 변화의 표현이라는 해석이다. 후자의 해석에 따르면, 그러한 애국적 분출은 축구 자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월드컵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며, 사실 파티는 그 자체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존재를 위한 책임감이라는 신중한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⁵⁹⁾ 후자적 입장에는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에서 연원하는 유럽금융위기의 한 현상으로서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의 유럽통화통합 탈퇴) 문제의 해결과정과 최근 메르켈 총리의 시리아난민의 수용 결정 등 일련의 유럽지역 정치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민족의식 내지 정체성에 호소하는 독일 우파의 포퓰리즘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내재되어 있다.

어쨌든 21세기에 들어와 독일 내에서 국가정체성 내지 민족정체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통일 이후 동서독지역의 통합 문제를 넘어 외국인 이주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독일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한 탓이다. 이에 따라 민족정체성에 관한 설문조사들이 자

58) Jahres-Chronik, *Der Spiegel*, nr. 1 (2006), <<http://www.spiegel.de/jahreschronik/a-452551>>. (검색일: 2015.8.12.).

59) Michael Klein, *Die nationale Identität der Deutschen: Commitment, Grenzkonstruktionen und Wert zu Beginn des 21. Jahrhunderts* (Wiesbaden: Springer Fachmedien, 2014), pp. 157 ~ 158.

주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민족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설문으로서 민족자긍심에 관한 설문결과는 <표 III-8> 및 <표 III-9>와 같다. <표 III-8>은 구서독지역에서 주민들의 자긍심이 과거 서독시절에서부터 근래까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추이를 보여주며, <표 III-9>는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주민의 자긍심 변화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 표 III-8 구서독지역에서 일반적 민족자긍심

설문: 당신은 독일인으로서 얼마나 자긍심을 느끼십니까?

(단위: %)

	1970년	1980년	1982년	1985년	1991년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6년	2010년
매우 자랑스러움	38	21	22	20	16	13	18	18	23	20	22	22
상당히 자랑스러움	33	38	38	42	41	32	43	49	47	45	47	47
별로 자랑스럽지 않음	14	18	19	21	22	21	23	22	17	20	19	17
전혀 자랑스럽지 않음	9	11	9	11	11	14	15	9	8	10	7	8

출처: Eurobarometer; IfD Allensbach; ALLBUS, Michael Klein, *Die nationale Identität der Deutschen: Commitment, Grenzkonstruktionen und Wert zu Beginn des 21. Jahrhunderts*, p. 115에서 재인용.

● 표 III-9 구동독지역에서 일반적 민족자긍심

설문: 당신은 독일인으로서 얼마나 자긍심을 느끼십니까?

(단위: %)

	1991년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6년	2010년
매우 자랑스러움	19	9	20	15	22	19	20	21
상당히 자랑스러움	43	39	47	54	47	48	53	53
별로 자랑스럽지 않음	17	24	23	23	25	23	21	18
전혀 자랑스럽지 않음	8	12	10	6	5	8	4	6

출처: Eurobarometer; IfD Allensbach; ALLBUS, Michael Klein, *Die nationale Identität der Deutschen: Commitment, Grenzkonstruktionen und Wert zu Beginn des 21. Jahrhunderts*, p. 116에서 재인용.

두 결과만을 두고 보면, 대체로 구서독지역보다 구동독지역에서 민족자긍심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 구서독지역에서는 통일 이후 한동안 자긍심이 낮게 나왔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통일 이후의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에 대한 반응이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다시 과거 수준의 자긍심을 보이고 있다. 구동독지역에서 1994년에 자긍심이 낮게 나온 이유는 통합 이후 사회적 불안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극우파들이 창궐하고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여 테러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세대 간 자긍심의 수준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대체로 노년층에서 자긍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는 다른 유럽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으로서 2차 세계대전의 경험 탓으로 해석된다.⁶⁰⁾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자긍심에 대한 설문은 대체로 주민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주관을 아는 데 유용하다. 사실 집단정체성에 관한 설문조사는 여러 차원을 망라하고 있다. 감정적이며 정서적인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문화적인 기반을 가진 인식적 차원과 합리적인 판단에 따르는 평가적 차원의 설문조사가 있을 수 있다. 인식적 차원에서는 대체로 전통적 문화가치에 대한 판단이, 평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국가나 민족이 이룩한 성취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각각 민족정체성의 원천이 된다. 이 맥락에서 각 차원의 설문결과는 다를 수 있다. <표 III-10>은 2008년 독일의 ‘정체성 재단(Identity Foundation)’이 조사한 설문결과로서 바로 그러한 차이를 보여준다.

⁶⁰⁾ Michael Klein, *Die nationale Identität der Deutschen: Commitment, Grenzkonstruktionen und Wert zu Beginn des 21. Jahrhunderts*, pp. 116~117.

표 III-10 세 차원별 독일에의 유대감 원천

설문: 내가 독일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단위: %)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임	부분적 으로 동의함	상당히 동의하는 편임	매우 강하게 동의함
① 독일인의 미덕과 인성적 특징을 가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6	8	22	33	31
② 독일의 전통과 풍속을 가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7	9	21	31	31
③ 정치, 경제, 스포츠에서 독일이 특별한 성과를 거두기 때문	10	15	31	28	16
④ 독일에서 모든 것이 좋고 신뢰성 있게 작동하기 때문	11	12	26	33	19
⑤ 나의 심장이 독일에 맞춰져있기 때문	6	7	17	28	43

출처: Erste Studie der *Identity Foundation* zur nationalen Identität im Oktober 2008, Michael Klein, *Die nationale Identität der Deutschen: Commitment, Grenzkonstruktionen und Wert zu Beginn des 21. Jahrhunderts*, p. 109에서 재인용.

<표 III-10>에서 ①과 ②의 항목은 인식적 차원, ③과 ④는 평가적 항목, ⑤는 감정적·정서적 항목으로서 이 결과는 <표 III-8> 및 <표 III-9>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보여준다. 먼저 2008년 독일인들의 민족정체성은 감정적·정서적 차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평가적 차원에서 국가유대감이 가장 낮다. ③과 ④의 항목에서는 매우 및 상당히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50%전후로서 60%이상인 다른 항목과 대비된다. 평가적 항목의 낮은 답변은 특히 구동독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구동독지역에서는 항목 ③에 대해 39%, 항목 ④에 대해 36%만이 매우 또는 상당히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구서독지역과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독일인 전체 답변의 평균을 낮

추었다. 이처럼 구동독지역에서 평가적 차원의 정체성이 낮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론해볼 수 있다. 하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거두었던 국가적 성취에 대해 구동독지역 사람들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양 지역의 복지수준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상황차이가 아직 온전하게 극복되지 못한 탓으로 유추된다.⁶¹⁾

이상에서 보듯이 통일 이후 20여 년이 흐르면서 독일의 전통문화 가치를 둘러싼 자긍심과 독일인이라는 공통의 감정 차원에서 독일의 국가정체성은 상당 수준 공고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구동서독 지역 간 정치·경제·사회적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통합의 어려움만큼 평가적 차원의 국가정체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를 염두에 두면, 향후 통일독일의 국가정체성의 확립 문제는 향후 정치사회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통합의 수준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국가정체성 형성의 내적 측면

통일독일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의 정도가 얼마나 국가정체성의 확대에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나 통계조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국가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여러 사회적 지표들을 통해 추론해볼 수는 있다.

(가) 사회경제적 문제들의 해결 노력

독일통일 직후 체제통합 과정에서 구동독의 제도와 산업구조가 전면적으로 재조정되는 가운데 구동독 주민들은 많은 혼란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비단 동독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독지역

61) *Ibid.*, pp. 109~110.

주민들도 통합과정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독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동독지역의 산업구조를 전환시키고, 동독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방면의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통계에 따르면, 2009년 말까지 연방정부가 구동독지역 산업발전을 위해 지출한 지원금 및 보조금이 약 555억 유로에 달한다.⁶²⁾

비록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2014년까지 통일 이후 25년 동안 추산된 총체적 통일비용은 최소 1조 5,000억에서 최대 2조 5,000억 달러에 이르며,⁶³⁾ 앞으로도 매년 1,000억 유로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⁶⁴⁾ 연방정부의 공식적 동독지역 재정지원은 1994년까지 ‘독일통일기금’으로 1,150억 DM을 새로운 세금인 ‘연대세’라는 이름으로 마련했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동독지역 재건을 위한 ‘제1차 연대협약’을 통해 945억 유로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제2차 연대협약’을 통해 총 1,565억 유로를 마련하여 지출했고, 또 지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공식통계 이외에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총 이전지출이 통일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다. 물론 21세기에 들어와 동독 지역의 경제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연방정부가 구동독지역으로부터 거두었던 세금을 총이전지출에서 제한 순이전지출이 진정한 통일비용이 된다. 어쨌든 이러한 성격의 통일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회보장성 비용으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⁶⁵⁾

62) 황병덕 외,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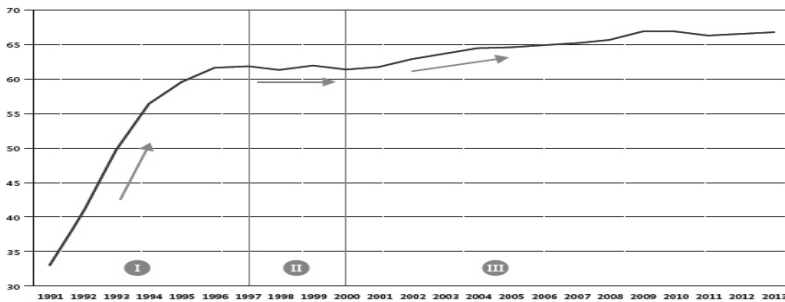
63) *The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7, 2014, <<http://www.wsj.com>>. (검색일: 2015.8.20.).

64) 황병덕 외,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p. 279.

65) 신동천 외, “통일비용과 남북협력기금: 독일통일로부터의 교훈,” 『통일연구』, 제12권 제1호 (2008), p. 22.

● 그림 III-1 구동독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 비율의 변화(1991~2013년)

(단위: %)



* 베를린 지역 불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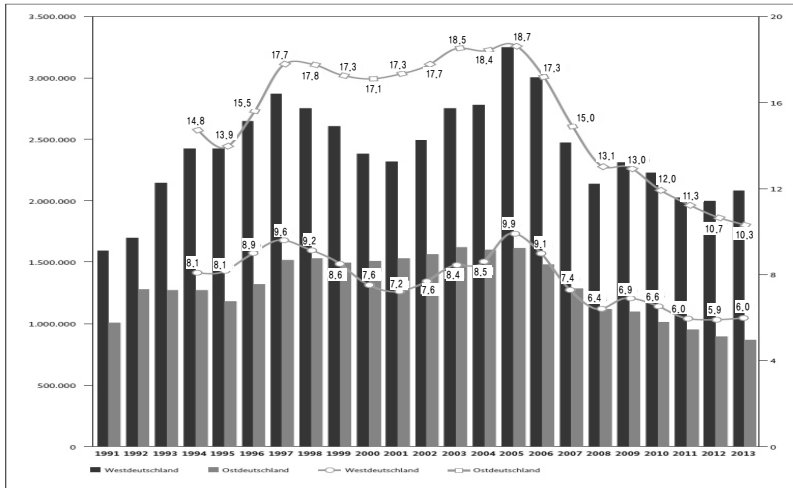
출처: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4* (Berlin: BMWi, 2014), p. 19.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 덕분에 비교적 짧은 시간 내 구동서독지역 사이에 사회경제적 격차가 좁혀질 수 있었으나,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구동서독지역 간 사회경제적 수렴과정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1997년까지 구동독지역의 경제성장이 급격히 증가한 이후 양 지역의 수렴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III-1>에서 보듯이 1997년까지 제1단계에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 시기로서 동서독지역의 건설업종이 호황을 이루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의 2단계에서는 건설업의 침체와 더불어 경제전반적 발전이 지속되기 어려운 시기가 시작했다. 구동독지역의 건설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2000년부터 3단계에 접어들어 건설업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구동독지역 산업의 새로운 역동성과 더불어 동서독지역 사이의 수렴 과정이 다시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수렴도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양 지역 간에는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물론이고, 1인당 국내총생

I
II
III
IV

산도 일정수준에서 격차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그림 III-2>에서 보듯이 구동독지역에서 실업률이 구서독지역보다 두 배 가까이 높으며,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단순히 동독노동자의 문제이기보다 근본적으로 소기업 중심의 구동독지역의 경제구조에 근본적으로 기인한다.⁶⁶⁾ 이러한 문제에 대해 독일정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조만간 양 지역의 격차가 줄어들기보다 현상유지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2차 연대협약이 종료되어 연방정부가 더 이상 재정지원을 하지 않게 되는 2019년경 구동독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대체로 구서독지역의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III-2 구동서독지역의 실업자수와 실업률 변화 추이



* Y축: 실업자 수 (막대그래프 중 왼쪽 진한 것은 서독지역, 오른쪽 연한 것은 동독지역)
선그래프: 실업률 (위쪽 동독지역, 아래쪽은 서독지역)

출처: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4*, p. 92.

66)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4*, p. 21.

둘째, 구동독지역 주민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경제적 수치고 지표상 대체로 큰 성과를 거둔 연방정부의 ‘동독지역 경제부흥 (Aufbau Ost)’ 정책이 저평가되고 있다. 사실 그러한 정책 덕분에 짧은 시간 내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구서독지역 주민의 생활수준에 근접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동독지역 주민들은 물질적 삶에서 구서독 주민들과 대등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구서독지역 주민들 역시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자신들의 복지가 희생당했다고 생각한다. 구동서독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생각과 불만은 다음 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표 III-11 통일 이전과 이후 분야별 만족도의 대차대조표(35세 이상)

설문: 다음 각 항목에 대해 당신은 통일 후 상대적으로 더 악화 또는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통일 후 악화	통일 후 개선	통일 후 악화	통일 후 개선
개인적 출세 기회	-	35.5*	-	64.5
개인적 성취의 인정	23	-	-	33.2
사회정의	47.2	-	56.1	-
사회안전	49	-	47.6	-
범죄예방	33.3	-	58.6	-
어린이 보호	-	63.8	55.2	-
인적 유대	35.2	-	70.4	-
교육체계	41.7	-	58.8	-
건강관리체계	50.4	-	-	43.3
사회에서의 행복감	-	28.9	-	44.1
양성평등	-	62.5	31	-

* 각 백분율은 ‘악화’와 ‘개선’의 차이를 의미

출처: Everhard Holtmann and Tobias Jaek, “Was denkt und meint das Volk? Deutschland im dritten Jahrzehnt der Einhei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nr. 33~34 (Aug 10, 2015), pp. 44~45.

I
II
III
IV

● 표 III-12 구동독지역 34세 이하 분야별 만족도의 대차대조표

설문: 다음 각 항목에 대해 당신은 통일 후 악화 또는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통일 후 악화	통일 후 개선
개인적 출세 기회	-	79.2
개인적 성취의 인정	-	44
사회정의	-	48.4
사회안전	-	47.3
범죄예방	-	42.9
어린이 보호	57.2	-
인적 유대	59.4	-
교육체계	44	-
건강관리체계	-	59.4
사회에서의 행복감	-	50.6
양성평등	-	58.3

출처: Everhard Holtmann and Tobias Jaeck, "Was denkt und meint das Volk? Deutschland im dritten Jahrzehnt der Einheit," p. 44.

<표 III-11>에서 보듯이 통일 이전을 기억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양 지역 주민들은 통일 이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삶이 이전 분단시기 각 체제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비해 통일 이후의 세대, 특히 구동독지역의 젊은 세대는 통일독일의 삶에 윗세대보다 더욱 만족하고 있다(<표 III-12> 참조). 이는 양 지역 주민들 사이에 사회적 내지 사회경제적 차이로 말미암아 국가정체성이 공고하게 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추론케 한다. 만약 양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렴과정이 지속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표 III-13>의 결과는 통일 이후 25년간 독일의 사회경제적 부흥과 양 지역 간 수렴과정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를 가능케 한다. 무엇보다 평가적 차원에서 양 지역 주민들 사이에 유사성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표 III-13 '번영의 지대' 실현을 둘러싼 여론조사

설문: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가 1990년에 동독지역에서 곧 '번영의 지대'가 실현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동독지역에 오늘날 번영의 지대가 실현되었는지?

(단위: %)

		구서독지역	구동독지역
1998년	실현되었다	33	27
	실현되지 않았다	44	54
2010년	실현되었다	40	39
	실현되지 않았다	29	34

출처: IfD Allensbach, 황병덕 외,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p. 306에서 재인용.

독일통일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당시 서독의 콜 총리가 통일의 열망에 부응하여 동독지역이 머지않아 '번영의 지대'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후 통일후유증 탓에 1998년 동서독지역의 주민들 다수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했으나, 통일 20주년 즈음에는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했으며, 더욱이 양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서로 비슷해졌음을 보인다. 비록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으며, 판단을 유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설문 결과를 통해 사회경제적 상황의 개선이 국가정체성의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엿보게 한다.

(나) 법치국가 및 민주주의적 절차의 준수와 정치적 불평등 해소 노력

통일 이후 동독이 서독의 체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독일의 정치질서가 과거 서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비록 서독의 민주적 법치국가와 시장경제체제라는 기본질서가 유지되고 있으나, 통일의 결과는 서독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독일은 통일

I

II

III

IV

이후 기본법(헌법)을 수정하여 변화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현실 정치에서의 변화 또한 매우 컸다. <표 III-14>에서 보듯이 구서독의 정당 체계에 변화가 발생했으며, 특히 좌파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좌파정당은 구동독지역에서 지지도를 확대시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구서독지역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갔다.

● 표 III-14 통일 후 구동서독지역별 연방의회 선거결과: 정당명부 제2기표 (단위: %)

	사민당	기민연	기사연	동맹90/ 녹색당	자민당	민사당/ 좌파당	극우 정당*	기타	투표 참여율
구서독지역과 서베를린									
1990년	35.7	35.5	8.8	4.8	10.6	0.3	2.6	1.7	78.6
1994년	37.5	33.2	8.9	7.9	7.7	1.0	2.0	1.9	80.5
1998년	42.3	28.7	8.4	7.3	7.0	1.2	2.8	2.4	82.8
2002년	38.3	29.8	11.0	9.4	7.6	1.1	0.9	1.9	80.6
2005년	35.1	28.4	9.1	8.8	10.2	4.9	1.7	1.8	78.5
2009년	24.1	26.7	7.9	11.5	15.4	8.3	1.6	4.5	72.2
구동독지역과 동베를린									
1990년	24.3	41.8	-	6.2	12.9	11.1	1.6	2.1	74.5
1994년	31.5	38.5	-	4.3	3.5	19.8	1.3	1.1	72.6
1998년	35.1	27.3	-	4.1	3.3	21.6	5.0	3.6	80.0
2002년	39.7	28.3	-	4.7	6.4	16.9	1.7	2.3	72.8
2005년	30.4	25.3	-	5.2	8.0	25.3	4.0	1.8	74.3
2009년	17.9	29.8	-	6.8	10.6	28.5	3.3	3.1	64.7

* 독일민족민주당(NPD) + 공화당(REP) + 독일국민연합(DVU)

출처: 독일연방선거위; Schroeder Klaus, *Die veränderte Republik: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Stamsried: Verlag Ernst Vögel, 2006), p. 471
 자료 종합: 정병기, “독일통일의 정치통합과 한반도,”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방안』,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공동학술회의 (2009.11.27.), p. 124에서 재인용.

통일독일의 정치질서가 안정화되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은 독일체제의 기본적 이념에 대한 독일국민들 사이의 공감대가 확장 및 확립되어야 하며, 이에 걸맞은 체제능력이 약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 이후 구동서독 주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들을 살펴보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표 III-15>는 양 지역 주민들에게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지지여부와 동시에 독일에서 구현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에 관한 설문 결과이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양 지역에서 지지도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지만, 변화추이는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2005년과 2007년 구서독지역에서 지지도가 낮아진 만큼 구동독지역에서도 낮아졌다. 또한 일반적 민주주의와 독일식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 차이 역시 양 지역에서 대체로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양 지역 주민들의 인식적 유사성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양 지역의 지지도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구동독지역에서 지지도가 점차 상승하면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구동독지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III-15 일반적 민주주의와 독일적 민주주의에 대한 구동서독지역 주민들의 지지도(1991~2014년)

(단위: %)

		1991년	2000년	2005년	2007년	2010년	2014년
구서독지역	일반적 민주주의	86	92	85	84	96	90
	독일적 민주주의	77	82	71	77	89	80
구동독지역	일반적 민주주의	70	78	64	56	86	82
	독일적 민주주의	41	49	38	35	63	72

출처: Everhard Holtmann and Tobias Jaek, "Was denkt und meint das volk? Deutschland im dritten Jahrzehnt der Einheit," p. 36;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 *Deutschland 2014: 25 Jahre Friedliche Revolution und Deutsche Einheit - öffentliche Vorstellung der Ergebnisse eines Forschungsprojekts; Sind wir ein volk?* (Berlin: BMWi, 2015), <<http://www.beauftragte-neue-laender.de>>. (검색일; 2015.8.20.), p. 43

I

II

III

IV

민주주의에 대한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낮은 지지도는 단지 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익숙함 때문만은 아니다. 통일 이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겪었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어려움과 애초 기대의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통일독일의 새로운 체제에 불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구동독지역 주민들이 좌파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이유와 직결된다. 또한 체제전환 과정에서 구동독 주민들은 정치사회적 소외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통일 초기 구동독지역의 행정 및 사법제도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자들은 대부분 서독출신에 의해 점령되었다. 더욱이 구동독의 과거청산 작업, 특히 비밀경찰 문서의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구동독지역 주민들 사이의 상호불신과 반목이 초래되는 결과를 낳았다. 상호불신은 실업의 문제, 가치관 혼란과 더불어 사회심리적 불안을 증가시켰고, 결국 범죄의 증가, 외국인에 적대감을 표명하는 극우세력의 준동 등 사회병리현상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겪었던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표 III-16>에서 보듯이 정당제도, 의회, 정부, 사법부 등의 민주주의적 제도에 대해 구서독 주민들보다 낮은 신뢰를 보인다.

● 표 III-16 정당 및 법치국가의 제도에 대한 구동서독지역에서 신뢰도 변화추이(1991~2014년)

(단위: 4점 만점)

		1994년	1998년	2002년	2007년	2010년	2014년
구서독지역	정당국가	2.5*	2.6	2.7	-	2.9	2.8
	법치국가	2.3	2.3	2.4	-	2.6	2.6
구동독지역	정당국가	2.2	2.1	2.1	1.8	2.0	2.1
	법치국가	2.0	1.9	1.9	1.7	1.7	2.0

* 전혀 신뢰하지 않을 경우 0점에서 전정으로 신뢰할 경우 4점까지 매 1점의 단계를 선택하게 하여 이를 평균한 값.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Deutschland 2014: 25 Jahre Friedliche Revolution und Deutsche Einheit - öffentliche Vorstellung der Ergebnisse eines Forschungsprojekts: Sind wir ein Volk?*, p. 45.

이러한 현실은 통일 후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다. <표 III-16>에서 구동독지역의 신뢰도는 2014년에 이르러 통일초기 새로운 체제에 기대감을 가졌던 구동독 주민들의 신뢰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추세를 보인다. 민주주의에 대한 구동독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개선되는 배경에는 연방정부 및 독일사회의 여러 노력이 있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이후 점차 동독출신의 거물 정치인들이 연방정부 및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다. 현재의 총리 메르켈을 비롯하여 연방대통령 요아힘 빌헬름 가욱(Joachim Wilhelm Gauck)과 연방의회 의장을 역임한 볼프강 티어제(Wolfgang Thierse) 등 많은 구동독출신의 정치가가 연방차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구동독 주민들의 불만은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었다.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 좌파정당의 약진으로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과거보다 더욱 많이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둘째, 동독의 과거청산과 관련, 비밀경찰 문서는 아직도 통일독일에서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비밀경찰 문서관리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의미에서 구동독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는 법적 처벌의 의미에서 과거청산보다 구동독정권에 의해 박해를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 복권, 보상 등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연방정부는 21세기에 들어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확산과 극단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0년에 내무성은 ‘극단주의와 폭력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와 관용의 동맹(BfDT)’을 설립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이를 확산시켜왔다.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는 2011년 극우주의, 인종주의, 반유대주의에 대응하여

I
II
III
IV

‘관용의 증진과 능력의 강화’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참여를 통한 결속’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주의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동독지역에서 극단주의를 예방하고 대응하고 있다. 1단계(2010~2013)는 구동독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고, 2단계(2013~2016)에는 1단계에서 성공한 사업을 구서독지역에 전파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주주의 교육자 양성을 손꼽을 수 있다. 2014년 3월까지 158명의 교육자를 양성했고 현재 580명을 더 교육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2단계 기간 동안 2,400만 유로를 책정하고 있다.⁶⁷⁾

(다) 사회적 소통을 통한 정치·사회문화의 통합 노력

앞에서 언급했던 통일독일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의 어려움은 단지 제도자체의 문제를 넘어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가치, 규범, 정향, 심리, 감정 등과 같은 문화적 통합의 문제로 귀결된다. 독일통일 과정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제도적인 통합에 우선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애초 문화적 통합에 대해 깊이 고민할 시간이 별로 허용되지 않았다. 실제로 동서독과 같이 상이한 체제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사회에서 문화적 통합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통일독일의 연방정부는 동서독의 정치문화 내지 사회문화 통합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추진했다. 무엇보다 동서독 주민들 간의 소통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이에 따라 자매결연의 방식이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각종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했다.⁶⁸⁾ 특히 각 분야의 서독 전문가들이 동독측 파트너

67)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4*, pp. 73~75.

68) 통일 이후 동서독지역 간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Manfred Klaus, *Städtepartnerschaften*

기관에 파견되어 체제전환을 돕는 가운데, 이에 따르는 양 지역 주민들의 공동작업은 소통을 가능케 했고, 결과적으로 문화적 접변이 발생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방정부나 서독의 지도층은 구동독 주민들이 동화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환호가 끝나자 구동독 주민들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치 및 사회경제적 상황의 차별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정치 및 사회경제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였다. 일단 연방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구동서독지역의 차이를 드러내는 통계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았다. 차이를 부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이 더 어렵게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후 통합관련 통계 및 의식조사는 사적 설문기관을 중심으로 발표되어왔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구동독 주민들의 자체적 조사연구가 활성화되며 자신들의 상황을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⁶⁹⁾

나아가 연방정부는 과거 서독시절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정착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정치교육을 구동독지역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이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체제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이를 위해 1991년부터 구동독지역의 새로운 주단위에 주정치교육원이 설립되었다. 물론 과거 국가가 앞장선 선전전과 세뇌를 경험했던 구동독 주민들의 정치교육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학교와 사회, 특히 언론기

zwischen ost-und westdeutschen Kommunen (Berli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liche Forschung und Publizistik mbH, 1994), p. 56.

69) 대표적으로 구동독지역의 할레(Halle)대학교 사회조사센터(ZSH)의 동서독 내적 통합과 관련한 광범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들 수 있다.

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세미나가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직·간접적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⁷⁰⁾ 연방정치교육 센터의 주 임무는 구동독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지식제공 뿐만 아니라 구동서독 주민들의 상호이해를 위한 도서발간과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와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동독의 역사, 독일분단, 동독공산당의 불법 등에 관한 역사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분단을 경험하지 못했던 청년층을 대상으로 역사적 맥락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존중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⁷¹⁾ 정치교육의 지역 확대에서 주목할 것은 1976년 서독에서 학교의 정치교육방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던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의 3원칙이 구동독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이다.⁷²⁾

연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문화의 통합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사회문화적 통합의 어려움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적으로는 민사당의 부활과 좌파당의 세력 확장으로 나타났고, 1990년대 중반부터 앞의 <표 III-11>에서와 같이 과거 동독시절이 지금보다 더 좋았던 것을 선택적으로 회상하는 소위 ‘오스탈기(ostalgie)’ 현상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오스탈기는 단지 일상

70)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 Stand und Perspektiven der politische Bildung in der BR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Sonderdruck (April 10, 1992), p. 20.

71)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4*, p. 74.

72) 3원칙은 학생의 독자적 판단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강압금지(Überwältigungsverbot)’,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논쟁성의 원칙(Kontroversitätsprinzip)’, 그리고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 중심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관성 원칙(Subjektivitätsprinzip)’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독일연방정치센터 홈페이지 <<http://www.bpb.de>> 참조.

적 삶에서 뿐만 아니라, <표 III-17>의 설문결과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도 나타난다. 2008년 조사에 따르면, 구동독지역 주민들의 약 58%가 동독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하는 주민은 약 15%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구서독주민들의 11% 내외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약 67%가 거부하는 결과와 비교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표 III-17 구동독사회주의에 대한 지역별 평가

설문: 동독의 사회주의 이념이 통일독일에서도 다시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

(단위: %)

	강한 거부	거부	반반	동의	강한 동의
서부지역	48.3	18.5	21.0	8.0	4.2
동부지역*	7.4	8.2	26.6	25.3	32.5
남부지역	50.3	17.6	20.1	7.4	4.6
북부지역	49.3	17.6	22.8	6.8	3.5

* 동부지역은 동베를린지역을 포함하여 구동독지역과 동일, 나머지 지역은 구서독지역임.
출처: Erste Studie der Identity Foundation zur nationalen Identität im Oktober 2008, Michael Klein, *Deutsch-Sein: Ein neuer Stolz auf die Nation im Einklang mit dem Herzen* (Düsseldorf: Identity Foundation, 2009), p. 34, <<http://www.identityfoundation.de>>. (검색일: 2015.8.12.).

<표 III-17>의 결과는 양면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 구동독 주민들에게 구동독의 가치는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의 문제이다. 즉 서독은 모두 잘했고, 동독은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동독 주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구동서독 주민들 사이의 심각한 가치갈등 — 특히 오늘날이나 미래의 독일사회가 추구해야 할 기본원칙에 관한 서로 매우 다른 생각 — 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지

I
II
III
IV

만, 구동독 주민들에게 질문된 ‘이념’이란 개념에는 그들의 기본정향에 각인되어 있는 어떠한 이상적인 것이란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통일독일의 현실적 삶에서 그들이 갈구하는 것과 깊은 상관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동독 주민들은 일상적 삶에서 과거 그들에게 익숙했던 정서적이고 연대적인 유대감, 즉 ‘우리라는 감정’이 서독식의 지극히 계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휩쓸리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요컨대 사회주의 이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구동독 주민의 일차적 기준은 사회적 유대감의 기반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에 있었다는 해석이다.⁷³⁾

구동독 주민들은 통일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서독의 체제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물론 급작스러운 통일과 체제통합 속에서 구동독 주민들이 자신들의 집단정체성에 커다란 혼란이 왔고, 부분적으로는 구동서독 체제문화의 접변에 따라 혼성적(hybrid) 문화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1990년 중반 체제통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구동독의 유산을 이어 받은 자신들의 집단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자의식에 눈을 뜨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즉 동독적인 것에 대한 자각의 결과로서 차츰 구동독지역에 고유한 ‘부분문화(teilkultur)’가 형성되었다. 이는 구서독의 사회문화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통일독일의 문화적 공론장에서 ‘아방가르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⁷⁴⁾ 실제로 구동독 주민들은 자신들의 과거 체제문화가 현재 서독식의 문화보다 우월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예컨대 구동독체제에서는 여성들이 대부분 일자리

73) Michael Klein, *Deutsch-Sein: Ein neuer Stolz auf die Nation im Einklang mit dem Herzen*, p. 35 참조.

74) 김누리, “통일독일의 문화변동,” 『독일문학』, 제108집 (2009), pp. 213~236.

를 가졌기 때문에 서독보다 앞선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이 있었다. 이는 <표 III-11>의 결과에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연방정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체제통합의 과정에서 애초 동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커다란 오산이었다는 점을 깨달은 연방정부와 서독의 지식인들은 문화적 다양성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에서 문화적 자산을 새롭게 하고 보존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베를린에 전국가적 의미를 가진 문화유산을 위해 매년 4억 유로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구동독지역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투자”라는 프로그램을 위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6,700만 유로 이상을 지출했다. 또한 1989년 동독의 평화적 혁명에 대한 기억을 지속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⁷⁵⁾ 민주화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의 잠재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 및 사회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독일 정치교육의 목표를 상기하면, 연방정부의 정책방향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표 III-17>만을 두고 보면, 구동서독 주민들 사이에 정치·사회문화적 차이는 엄청나며, 이들이 하나의 국가체제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집단정체성의 다층성 내지 다중정체성(multiple identity)을 이해한다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즉 집단정체성은 가족 및 친구와 같은 일차적 집단을 비롯하여 일정한 단체와 기구, 사회적 계층 및 계급, 도시 혹은 지방, 지역, 국가나 민족 또는 민족적·국민적 소수 집단, 종교공동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초국가적인 문화권이 나 인류 전체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에 대한 정서적 결속정

⁷⁵⁾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4*, pp. 73~77.

도는 개인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⁷⁶⁾ 더구나 민족국가를 매우 늦게 탄생시킴으로써 지방분권적이고 지방문화가 강한 독일의 특성을 염두에 두면, 부분문화의 존재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듯 구동독지역 주민들은 오스탈기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지역적 집단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집단정체성은 독일이라는 국가정체성과 충돌하지 않고 공존가능하며, 이는 <표 III-18>을 통해서 분명하게 입증된다.

● 표 III-18 구동서독 주민의 통일독일 및 구동서독과의 일체감

설문: 당신은 통일독일 또는 구동독 및 구서독에 정서적으로 '강하게' 또는 '아주 강하게' 일체감을 느끼십니까?

(단위: %)

	구동독 주민		구서독 주민	
	독일과의 일체감	동독과의 일체감	독일과의 일체감	서독과의 일체감
1991년	63.4	40.4	63.1	63.2
2000년	53.2	63.4	65.9	55.5
2002년	91.2	84.2	86.3	61.7
2008년	94.4	80.1	93.2	67.9

출처: 1991년과 2000년도 조사는 ALLBUS, 2002년과 2008년은 GMF-Survey의 결과로서 양기관의 조사가 통계적으로 연속성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양민석·송태수, “독일통일 20년-사회·문화적 통합의 성과와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4호 (2010), pp. 11~12에서 재인용.

<표 III-18>은 통일독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동서독에 대한 구동서독 주민들의 일체감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이다. 이에 따르면, 통일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구동독 주민들에게서는 구동독과의 일체감이 구서독 주민들의 그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구동독 주

76) 허영식·정창화, “한국의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간문화적 접근방안,” *OUGHTOPIA*, 제27권 2호 (2012), p. 243.

민들이 통일독일에 대한 일체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 처한 현실과 비교하여 과거를 성찰하면서 서독지역과 구분되는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요컨대 구동독 지역의 독자적 정체성은 통일독일의 국가정체성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는 것이다.

(3) 국가정체성 형성의 외적 측면

2006년 여름 월드컵 대회를 유치한 독일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열정적이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국가대표팀 응원 분위기에 대해 민족주의의 부활을 우려하는 독일내부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는 사실은 나찌의 과거가 얼마나 큰 무게로 독일인들을 누르고 있는지 보여준다. 동시에 독일은 일반적인 국가들과 비교하여 타국과의 차별화 속에서 자신의 국가정체성을 강화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과거사의 무게감 탓에 독일인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떠한 유럽국가보다도 국가자긍심이 낮으며, 이 추세는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는다(<표 III-19> 참조). 국가자긍심은 국가정체성의 대표적 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자긍심은 독일의 특수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I

II

III

IV

표 III-19 유럽국가들의 국가자긍심 비교

설문: 당신은 국가자긍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단위: %)

	1970년	1982년	1994년	2000년	2006년	최대-최소 차이
벨기에	88(70/18)	56(22/34)	68(23/46)	77(27/50)	85(34/51)	32
덴마크	-	75(37/38)	85(39/46)	90(50/40)	89(49/40)	15
독일	71(38/33)	60(22/38)	45(12/33)	66(18/48)	71(23/48)	26
프랑스	88(66/22)	76(33/43)	72(27/45)	82(33/49)	90(46/44)	16
아일랜드	-	84(55/29)	93(67/26)	97(78/19)	95(71/24)	13
이태리	86(62/24)	76(35/41)	79(33/46)	87(36/51)	84(42/42)	11
룩셈부르크	91(81/10)	85(55/30)	75(30/45)	85(53/32)	90(58/32)	16
네델란드	82(54/28)	73(35/38)	66(14/52)	88(34/54)	87(29/58)	22
영국	-	88(56/32)	81(40/41)	92(63/29)	89(59/30)	11
그리스	-	90(76/14)	90(68/23)	97(82/15)	-	7

* ()안의 앞에 숫자는 '매우 자랑스럽다', 뒤의 숫자는 '상당히 자랑스럽다'의 답변 비율을 표기한 것/ 독일의 경우, 1990년 이전에는 서독, 이후에는 통일독일임.

출처: Eurobarometer, Michael Klein, *Die nationale Identität der Deutschen: Commitment, Grenzkonstruktionen und Wert zu Beginn des 21. Jahrhunderts*, p. 120에서 재인용

독일통일은 냉전이 종식된 덕분에 실현될 수 있었으며, 통일은 결과적으로 유럽통합의 심화로 이어졌다. 애초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통합은 독일의 재발흥을 견제하려는 의도의 산물이었고, 실제로 유럽 통합의 심화와 확장과정은 항상 독일의 성장 내지 세력증대와 맞물려 발생했다. 과거 서독정부는 물론이고 통일독일의 연방정부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스스로 유럽의 패권국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물론 통일 이후 독일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는 입장은 더욱 세련되어졌다. 특히 유럽재정의 분담금 비율이나 통화 정책 및 산업정책에서 자국이익의 방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거나 갈등을 빚는 일은 과거보다 많아졌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독일정부가 보여주었던 단호함은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태도가 독일의 홀로서기나 패권지향성을 반영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독일은 과거나 지금이나 유럽통합의 강화를 향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는 단지 정치적 수사학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국가들 중에 독일은 프랑스와 더불어 유럽통합을 견인하는 쌍두마차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공동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의 국민적 지지는 모두 약 75%정도로 높으나, 방위정책에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프랑스는 약 50%만이 유럽연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지지하는데 비해 독일국민들은 약 54%가 찬성한다.⁷⁷⁾ 이를 통해서도 독일국민들의 다중정체성이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편이다. 이는 <표 III-20>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표 III-20 독일인 또는 유럽인

설문: 가까운 장래에 당신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합니까?

(단위: %)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2년
오로지 독일인	34	38	35	39	33
독일인이면서 유럽인	44	46	49	47	56
유럽인이면서 독일인	11	9	11	8	7
오로지 유럽인	7	5	3	4	3

출처: Eurobarometer, <<http://ec.europa.eu>>. (검색일: 2015.9.15.).

77) Joachim Schild, "Eruopäisierung Nationaler Politischer Identitäten in Deutschland und Frankreich,"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3~4 (2003), p. 38.

<표 III-20>은 독일인들 가운데 스스로 독일인이면서 동시에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구동독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정체성이 생성되는 현상과 더불어 근대국가의 산물인 국가정체성을 점차 약화시키고 있다. 이는 통일독일의 국제환경, 즉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심화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귀결이다. 향후 유럽연합이 소위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으로 발전하게 될지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 그렇지만 그러한 길을 걷게 되거나 이를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유럽국가의 국민들은 물론이고 민족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독일인들조차 민족감정을 쉽게 떨쳐버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통합이 더욱 심화되어 유럽정체성이 강화되더라도 현재의 민족감정은 여러 층위를 갖는 집단정체성들의 하나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표 III-21 민족감정의 시대적합성

설문: 지구화와 EU의 공동변영의 틀 속에서 민족감정은 더 이상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위: %)

전혀 동의하지 않음	상당히 동의하지 않음	부분적으로 동의함	상당히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31	23	25	14	6

출처: IF1-Studie, Michael Klein, *Die nationale Identität der Deutschen: Commitment, Grenzkonstruktionen und Wert zu Beginn des 21. Jahrhunderts*, p. 128.

<표 III-21>은 독일에서 유럽정체성이 점점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족감정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국가들은 물론이고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들의 유입이 점점증하면서 민족정체성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의

외국인과 난민이 증가하면서 독일사회에서는 독일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들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독일정부는 유럽연합의 공동책임 아래 시리아계 난민의 전폭적 수용을 촉구하고 독일이 솔선수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일련의 복잡하고 모순된 현실은 역사적으로 증세봉건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근대민족국가가 탄생했듯이,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과 이에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한 산고의 과정일 수 있다. 어쨌든 통일독일에서 국가정체성은 더 이상 근대 민족국가의 기준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다층적이고 다중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요컨대 국가통합과 유럽통합이 상호 밀접하게 진행되어 온 통일독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타국과의 차이를 통해 국가정체성이 강화되는 현상이 분명하게 부각되지 못한다. 통일독일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역통합 과정을 통해 오히려 국가정체성이 점차 약화되고 그 자리에 여러 층위의 집단정체성이 공존하는 다중정체성이 느리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 시사점

독일사례 연구에서 항상 그러하듯이 독일분단과 통일의 특수성 탓에 독일경험으로부터 적절한 시사점을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지만 평화통일은 물론이고, 인류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체제이념으로 삼아 통일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독일통일은 항상 한반도의 모범적 사례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교훈을 찾는 작업은 의미를 갖는다. 특히 통일 이후 통합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됨으로써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

I

II

III

IV

데 도움을 준다.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독일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통일독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우리 방식의 해결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아직 분단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통일독일이 겪었던 것을 간접적이거나 잘된 것은 본받고, 잘못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통일 이전부터 통일 이후 통합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북·통일정책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다.

첫째 차원의 여러 시사점들 중에서 무엇보다 독일식 통일, 즉 서독 체제에 동독지역이 편입하는 방식의 경우, 동독 주민이 서독에 동화됨으로써 서독의 국가정체성을 토대로 내적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오산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체제의 제도적 통합은 효율성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 이룩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규범, 가치, 이념, 문화 등을 비롯하여 감정은 합리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월한 문화에 열등한 문화가 동화된다는 식의 접근은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구동서독지역의 문화적 통합과정은 상이한 문화 간의 접변 현상에서 발생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문화적 혼성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체제의 우열적 격차로 인한 제도통합 과정의 후유증은 지배와 저항의 갈등을 낳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동독지역에서 새로운 문화가 배태되었다. 구서독지역과 다른 새로운 문화의 생성은 구동독지역의 구성원들 사이에 새로운 집단정체성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경우도 독일과 유사한 방식의 통일이 발생한다면, 현재 우리사회의 통념처럼 북한 주민들을 우리사회에 동화시키려

는 목표를 가지고 통합과정을 이끌어갈 경우에 어떠한 결과가 예상될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다른 시사점은 구동서독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구심점으로 간주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국가정체성이 가능한 배경에 관한 것이다. 독일사례는 집단정체성의 다층적 성격과 다중정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독일사례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정체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채 국가내부에 상이한 집단정체성이 공존하는 현실이다. 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적 질서와 문화가 정립된 곳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3원칙에 입각한 정치교육이 꾸준히 추진되었으며,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 그대로 확대 적용되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다중정체성이 큰 갈등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면, 통합의 이념적 내지 정서적 기반인 국가정체성의 형성문제 못지않게 사회의 다양한 집단정체성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의 마련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사례는 국가정체성이 통합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반드시 충분조건이 아닐 수 있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 앞에서 제시했던 여러 설문조사의 결과를 두고 보면, 대체로 정서적 측면과 독일의 문화전통과 관련된 인식적 측면에서는 구동서독지역 주민들 사이에 국가정체성 수준이 높지만, 독일의 국가적 성취에 대한 평가적 측면에서는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요컨대 통일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장벽’은 사라지고 있으나, ‘머리 속의 장벽’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현실에서 보듯이 사회경제적 통합의 어려움은 사회문화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국가정체성이 사회경제적

통합의 어려움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사회경제적 통합의 어려움이 국가정체성의 확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듯 국가정체성을 단지 이념, 가치, 정서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대신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해결과도 연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차원의 시사점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의 통일역량을 증대시킴으로써 통합과정에서 국가정체성 문제가 그리 복잡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과제와 관련되어 있다. 독일사례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구동서독 주민들 사이에 정서적 측면에서 높은 일체감이 가능했던 이유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분단시기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 끊임없는 교류가 있었고, 서로 방송을 보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는 그러한 유대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하나의 핏줄이라는 민족감정은 초기 예상되는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의 어려움 속에 쉽게 휩쓸려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단지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둔 대북·통일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향후 통일이 북한 주민의 일방적 동화를 강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저항과 갈등을 염두에 두면, 이를 평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 및 문화의 정착이 매우 필요하다. 남북한의 전쟁경험으로 인하여 그러한 저항과 갈등의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더욱 그러하다. 어쨌든 남남갈등을 비롯하여 이념적 갈등이 의사소통을 통해 해결되기 어려운 우리사회 내부의 현실을 직시하면, 그만큼 이 과제의 수행은 어렵지만 매우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남한사회가 민주주의적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새로운 정치 및 사회적 균열

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남한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양함의 평화적 공존이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미래의 통일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일방적 동화보다 문화적 공존 속에서 국가정체성 확립 및 사회통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사례는 사실 매우 예외적이지만, 국가정체성 형성의 외적 측면과 관련하여 제한적이거나 시사하는 바가 있다. 분단의 외적 환경 측면에서 강대국들이 부과하는 강한 제약에 대해 저항과 대항보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역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국가를 넘어서는 지역정체성을 만들고자 했던 서독의 의지는, 분단의 원인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통일외교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전후 서유럽과 매우 다른 지역특성을 띠고 있다. 유럽의 다자주의와 비교하여 동북아에서는 아직도 양자주의가 지역질서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정치·경제적으로 대결과 경쟁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주변 강대국들은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질서를 크게 바꾸게 될 한반도 통일을 별로 원치 않는다. 이러한 주변 강대국의 이익이 우리의 의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 지역협력을 배가시킴으로써 강대국들의 이익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더욱 현실적으로 보인다. 만약 주변 강대국이 기꺼이 용인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된다면, 그때의 동북아지역은 이미 모든 분야에서 높은 협력의 수준을 구가하고 있으며, 배제와 차이에 기반을 둔 국가정체성에 좌우되는 지역질서를 넘어서 있을지도 모르겠다.

I

II

III

IV

2. 홍콩

통일된 국가의 정체성 형성 유형으로 보면 중국-홍콩 사례는 ‘일방형(A+B=A)’으로서, 통일·통합국가(중국정부)가 통일 전 다수집단이 형성했던 정체성을 큰 변동 없이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국-홍콩 사례는 국가의 정치적·제도적 통일 및 통합이 반드시 하나의 통합된 국가정체성 형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18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중국정부가 주도한 홍콩과의 제도적·경제적 통합은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으나, 두 지역(주민) 간 ‘가치’의 통합은 아직도 요원하고 홍콩 주민들의 ‘홍콩인’ 정체성이 더 강해지고 있다. 특히 2014년 홍콩에서 발생한 ‘우산혁명’⁷⁸⁾ 사례를 보면 향후 중국정부가 의도하는 국가정체성 형성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고, 홍콩에 대한 중국정부의 통치 방식인 ‘일국양제(一國兩制;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역시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래에서는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 주민들이 어떤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가 홍콩인들의 국가정체성 강화를 위해 어떤 정치·경제·사회적 노력을 했으며, 홍콩인들의 국가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과 특징은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미래에 다가올 한반도의 통일·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78) ‘우산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2014년 8월 3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발표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인과 관련된 결정이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행정장관 선거 입후보 자격을 1,200명 규모의 후보 추천위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 2~3명으로 후보를 한정하자, 홍콩의 학생·시민들은 이를 진정한 보통선거로 볼 수 없다며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홍콩 시위는 초기에는 민주화 열망과 정치개혁 등이 주요 의제였으나, 점차 빈부격차와 청년실업 등 사회모순에 대한 분노로 확대되었다.

가. 배경

홍콩 주민들 대부분은 종족상으로 ‘한족(漢族)’, 문화적으로 ‘중국인(華人)’에 속한다. 근대시기 영국이 홍콩을 통치할 때 ‘식민’보다는 상업과 무역을 중시했기 때문에 홍콩 주민들 스스로도 중국대륙의 주민들과 종족·문화적으로 다르다고 의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홍콩 주민들의 정체성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새롭게 탄생한 중국의 문화정체성 기반이 전통적 유가문화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개념은 1949년을 기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화했는데, 하나는 중국의 유구한 역사·문화·전통에 기반한 ‘전통적 중국인’이고,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고 중국역사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新중국인’이다.⁷⁹⁾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홍콩 주민들의 정체성 역시 위 두 가지 개념과 비슷한 형태로 분화했다.

당시 중국과 대만에서 홍콩 주민들을 부르는 호칭도 달랐는데, 대륙에서는 홍콩 주민들에 대한 정식 호칭이 ‘홍콩동포(香港同胞)’였고, 대만에서는 1997년 홍콩 반환 이전까지 ‘홍콩교포(香港僑胞)’로 불렀다. 홍콩 주민들도 스스로를 영국에 속해 있는 ‘홍콩의 중국인(香港華人)’으로 지칭했는데, 이는 법률적·문화적으로 매우 중립적인 호칭이다.

1960년대 들어 홍콩 주민들의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정체성 인식이 늘어났다. 왜냐하면 1949년 이후 중국 대륙과 홍콩 간 변경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을 받으면서 홍콩은 점차적

79) 强世功, “國家認同與文化政治: 香港人的身分變遷與價值認同變遷,” 『文化縱橫』, (2010), pp. 110~115.

으로 안정되었고, 1960년대에 홍콩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그들이 대륙에 대한 역사적 기억 및 문화전통과 단절하고 홍콩본토 세대 공동의 역사적 기억과 정감을 형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홍콩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서 중국본토와의 경제적 격차가 현격하게 드러나면서 홍콩 주민들의 ‘우월의식’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홍콩의 중국 반환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고, 중국과 영국은 1982년부터 2년간 총 22회의 회담을 거쳐 1984년 12월에 ‘중영연합성명’에 서명했다.⁸⁰⁾ ‘성명’에서 양국 정부는 소위 ‘일국양제’ 방침에 합의함으로써 홍콩의 중국 반환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근대 이후 150여 년간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이 1997년 7월 1일 중국으로 반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홍콩 반환 협상 당시 중국정부는 영국과의 ‘불평등조약’⁸¹⁾이 만료됨에 따라 홍콩의 주권이 ‘조국(祖國)’의 품에 돌아온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인식했고, 당초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덩샤오핑(鄧小平)이 제기했던 ‘일국양제’의 변함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반면, 홍콩 주민들은 중국정부가 강조하는 ‘일국양제’ 중에서 ‘일국’보다는 ‘양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즉, 대만과는 다르게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상황에서 “중국본토와 체제가 다른 홍콩에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

80) ‘중영연합성명’은 본문 8개조, 3개 부속문서, 2개의 비망록으로 이루어졌다.

81) 중국은 제1차 아편전쟁(1839~1842년)의 결과 홍콩을 영국에 영구 할양했고, 제2차 아편전쟁(1856~1860년) 이후에는 카오룬 반도까지 영국령에 편입되었다. 1998년 영국이 홍콩 및 주변도서 및 해역을 포함하는 ‘신계(新界)’지역을 99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협정을 중국과 맺은 후 이 지역은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하지만 홍콩 반환을 앞두고 크리스 패튼(Chris Patten) 총독이 시행한 정치개혁⁸²⁾을 둘러싼 중국과 영국 간 갈등으로 인해 홍콩 주민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홍콩인의 해외 이민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점은 이러한 불안감을 잘 반영하고 있다.⁸³⁾ 그리고 홍콩 주민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자신들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1997년 반환 이후 현재까지 홍콩에서 진행된 변화를 보면 ‘일국’과

82) 1992년 홍콩의 마지막 총독으로 패튼이 부임한 이후 입법국의 직선제 전환, 기초의회인 구의회의 구성, 투표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 집회 및 시위의 무제한적 허용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자, 중국은 이러한 행위가 ‘중영연합성명’ 위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양국 간 갈등이 발생했다.

83) 1980년대 이후 홍콩에서는 두 차례의 해외이민 열풍이 불었다. 첫 번째는 1980년대 초 중국이 홍콩 반환 협상을 전개하던 시점으로 1980년 2만 2천 명이 해외이민을 나갔고 해가 지날수록 늘어났다. 두 번째는 1989년 ‘6.4 천안문 사건’ 발발 이후로 1989년에 홍콩 주민 4만 2천 명이 해외로 이민했고, 1990년에는 6만 2천 명으로 급증했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총 37만 7천 200명이 해외로 이민했고, 이후 매년 4~5만 명 수준의 해외 이민자가 발생하여 결국 1980년부터 1995년까지 홍콩 주민의 해외 이민은 총 60만 8천 3백 명에 달했다. 이는 당시 홍콩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 하지만 당시 홍콩 주민들이 가장 선호한 나라는 캐나다, 미국, 영국 등이었으나 이들 국가에서의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수입 역시 홍콩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결국 홍콩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났다. 홍콩 인력자원관리학회(人力資源管理學會)가 1996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90년에서 1991년까지 해외 이민을 간 홍콩인들의 7~8%가 귀국했고, 1993년부터 1994년까지는 30%로 상승했으며, 1995년에는 60%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의 미래에 대한 홍콩 주민들의 불안감 및 불확실성이 일정 정도 해소됨에 따라 해외 이민자 수는 대폭 줄어들었다. 鄭宇碩 編, 『香港評論 1997』(香港: 中文大學出版社, 1997), pp. 320~321; 鄭宇碩·盧兆興 編, 『九七過渡: 香港的挑戰』(香港: 中文大學出版社, 1997), pp. 32~33, 329~334; “香港現小移民潮,” 『財新網』, 2013.11.2.; “香港研究小組: 九七后香港人流的現況及前景,” <<http://www.moea.gov.tw/%7Eecobook/season/ss041.htm>>. (검색일: 2015.10.30.). 한편, 최근에도 홍콩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출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고조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인해 해외로 이주하려는 홍콩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대만으로의 이민이 두드러진다.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대만 거주를 허가 받은 홍콩·마카오인 수는 1,839명이었고 2001년에 1,305명으로 줄었으나, 최근 2년간은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들 중 90% 이상이 홍콩인이다. “작년 대만 이주 신청 홍콩인 역대 최다,” 연합뉴스, 2015.2.23.

‘양제’가 동등한 가치로 작용하기 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중국정부가 홍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2014년 홍콩에서 발생한 소위 ‘우산혁명’으로 지칭되는 시위는 홍콩 주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경제적 빈곤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결과이며, 동시에 홍콩이 중국과 같을 수 없다는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통합과정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나. 홍콩 반환 이후 국가정체성 변화

홍콩 주민들은 자신을 지칭할 때 홍콩인(Hongkonger), 중국의 홍콩인(Hongkonger in Chinese), 홍콩의 중국인(Chinese in Hongkong) 등과 같은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반면, 자신을 중국인(Chinese)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곧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부류에 속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홍콩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2006년까지 10년간 홍콩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체성 정도를 보면, 자신을 홍콩인(Hongkonger)으로 인식하는 정도(평균 7.77)가 중국인(Chinese)으로 인식하는 것(평균 7.5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⁸⁴⁾

⁸⁴⁾ 홍콩인의 정체성 변화에 대해서는 홍콩대학에서 1997년 7월 이후 6개월마다 실시한 여론(民意)조사 결과를 주로 활용한다. ‘홍콩대학 여론조사(民意調查)’ 홈페이지 <www.hkupop.hku.hk>. (검색일: 2015.10.30.).

표 III-22 홍콩 주민 스스로가 생각하는 정체성 정도(1997~2006년)

(단위: 10점 만점)

조사기간 (6개월단위)	홍콩인 (평균)	중국인 (평균)	조사기간 (6개월단위)	홍콩인 (평균)	중국인 (평균)
1997/7~12	7.99	7.28	2002/7~12	7.87	7.63
1998/1~6	7.64	7.1	2003/1~6	7.77	7.54
1998/7~12	7.74	7.18	2003/7~12	7.41	7.52
1999/1~6	7.56	7.02	2004/1~6	7.54	7.48
1999/7~12	7.64	7.27	2004/7~12	7.54	7.47
2000/1~6	7.78	7.5	2005/1~6	7.77	7.56
2000/7~12	8.01	7.62	2005/7~12	7.91	7.73
2001/1~6	8.09	7.78	2006/1~6	7.79	7.68
2001/7~12	7.89	7.85	2006/7~12	7.98	7.82
2002/1~6	7.81	7.76	평균	7.77	7.51

주: 오차 범위는 0.09에서 최대 0.12 수준

출처: 홍콩대학 민의조사(民意調查) 홈페이지, <www.hkupop.hku.hk>. (검색일: 2015.10.30.).

특히 2007년 조사부터 아시아인(Asians), 중화민족의 일원(members of the Chinese race), 중화인민공화국 공민(citizens of PRC), 세계시민(global citizens) 등과 같은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홍콩인’으로 인식하는 정도는 여전히 높았다. 특히 2013년과 2014년 조사 결과, 자신을 ‘중국인’으로 인식하는 홍콩인이 1997년 반환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5년 6월 조사 결과, 홍콩 주민들의 ‘홍콩인’ 정체성 정도는 10점 만점에 7.95점을 기록하여 6개월인 2014년 12월 조사결과(8.18 점)에 비해 약간 하락했고, ‘중국인’ 정체성 정도는 6.70점으로 6개월 전 6.54점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⁸⁵⁾ 이는 곧 2014년 홍콩에

I
II
III
IV

서 발생한 시위의 영향으로 인해 홍콩 주민들이 정치적 혼란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III-23 홍콩 주민 스스로가 생각하는 정체성 정도(2007~2015년)

(단위: 10점 만점)

조사기간 (6개월단위)	홍콩인 (평균)	중국인 (평균)	아시아인 (평균)	중화민족의 일원 (평균)	중화인민 공화국 국민 (평균)	세계 시민 (평균)
2007/1~6	8.00	7.66	8.04	7.62	7.28	7.18
2007/7~12	8.09	7.87	8.69	8.23	6.72	7.56
2008/1~6	7.80	8.02	8.56	8.25	6.84	7.25
2008/7~12	7.99	7.79	7.68	7.84	6.88	6.75
2009/1~6	7.83	7.72	7.79	7.73	6.99	6.74
2009/7~12	8.14	7.79	7.80	7.78	6.92	6.73
2010/1~6	7.90	7.63	7.96	7.87	6.38	6.87
2010/7~12	8.12	7.10	7.45	7.42	6.27	6.66
2011/1~6	7.63	7.24	7.63	7.29	6.41	6.88
2011/7~12	8.23	7.01	7.65	7.46	6.28	6.91
2012/1~6	8.11	6.99	7.45	7.26	6.12	6.61
2012/7~12	8.43	7.47	7.74	7.71	6.39	7.06
2013/1~6	8.13	6.80	7.71	7.38	6.11	6.83
2013/7~12	7.87	6.91	7.71	7.35	6.08	6.81
2014/1~6	7.99	6.65	7.83	7.29	5.95	7.01
2014/7~12	8.18	6.54	7.49	6.83	5.66	6.59
2015/1~6	7.95	6.70	7.81	7.02	5.87	6.90
평균	8.02	7.28	7.82	7.54	6.42	6.90

주: 오차 범위는 0.09에서 최대 0.12 수준

출처: 홍콩대학 민의조사 홈페이지, <www.hkupop.hku.hk>. (검색일: 2015.10.30.).

85) “香港市民對港人身分認同感回落,” 『聯合早報』, 2015.6.23., <<http://www.zaobao.com.sg/realtime/china/story20150623-495013#sthash.ZgruFMH0.dpuf>>. (검색일: 2015.10.30.).

한편 홍콩 주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홍콩인’으로 인식한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대학의 여론조사 결과,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홍콩인’으로 인식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환 이후 몇 년 동안 그 비율이 하락하기도 했으나 최근 다시 40% 수준으로 상승했다. 반면,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인’으로 인식한 비율은 1997년 반환 당시 18% 수준에서 2000년대 30%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중국정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 다시 10~20% 대로 하락했다. 다만, 2015년 6월 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발생한 대규모 시위의 영향으로 인해 ‘홍콩인’ 정체성 비율은 약간 하락했고, ‘중국인’ 정체성 비율은 소폭 상승했다.

표 III-24 홍콩인의 정체성 비율(1997년 7월~2015년 6월)

(단위: %)

조사기간 (6개월 단위)	홍콩인 (Hongkonger)	중국의 홍콩인 (Hongkonger in China)	홍콩의 중국인 (Chinese in Hongkong)	중국인 (Chinese)	혼합 (Mixed Identity)	기타 (Other)	모른다/ 말하기 어렵다 (DK/HS)
1997/7~12	35.90	23.60	19.90	18.00	43.50	0.30	2.50
1998/1~6	32.20	18.30	17.40	28.20	35.70	0.30	3.60
1998/7~12	36.60	23.50	16.70	19.90	40.20	0.40	2.90
1999/1~6	41.40	22.00	13.20	17.50	35.20	0.70	5.10
1999/7~12	33.50	22.60	17.00	23.60	39.60	0.40	2.90
2000/1~6	37.50	22.50	15.90	19.00	38.40	0.50	4.60
2000/7~12	36.30	23.00	14.20	21.30	37.10	0.70	4.70
2001/1~6	33.80	20.00	14.70	28.30	34.70	0.20	3.10
2001/7~12	29.00	24.20	14.00	28.70	38.20	0.40	3.80
2002/1~6	29.90	20.70	15.50	30.40	36.20	0.20	3.50
2002/7~12	30.30	21.70	14.70	31.10	36.30	0.50	2.10
2003/1~6	32.60	20.80	13.50	30.70	34.20	0.50	2.10
2003/7~12	24.90	23.40	15.60	32.50	39.00	0.30	3.30
2004/1~6	28.00	21.20	14.30	33.00	35.50	0.40	3.10

I
II
III
IV

2004/7~12	25.90	23.10	16.20	31.60	39.30	0.40	2.80
2005/1~6	24.00	21.20	14.70	36.40	35.90	0.50	3.30
2005/7~12	24.80	26.50	16.90	30.70	43.40	0.00	1.10
2006/1~6	24.80	25.10	14.90	34.60	40.00	0.30	0.30
2006/7~12	22.40	24.30	20.10	31.80	44.40	0.60	0.70
2007/1~6	23.40	31.80	16.70	26.40	48.50	0.30	1.40
2007/7~12	23.50	31.50	16.00	27.20	47.50	0.70	1.10
2008/1~6	18.10	29.20	13.30	38.60	42.50	0.10	0.70
2008/7~12	21.80	29.60	13.00	34.40	42.60	0.50	0.70
2009/1~6	24.70	32.00	13.30	29.30	45.30	0.20	0.40
2009/7~12	37.60	23.90	13.10	24.20	37.00	0.20	1.00
2010/1~6	25.30	31.30	14.80	27.80	46.00	0.40	0.50
2010/7~12	35.50	27.60	13.80	21.10	41.40	0.40	1.50
2011/1~6	43.80	21.30	10.30	23.50	31.70	0.40	0.60
2011/7~12	37.70	25.30	17.80	16.60	43.10	0.60	2.10
2012/1~6	45.60	22.80	11.50	18.30	34.30	1.10	0.70
2012/7~12	27.20	33.10	16.10	21.30	49.20	0.60	1.70
2013/1~6	38.20	24.30	12.00	23.00	36.30	1.10	1.60
2013/7~12	34.80	27.60	15.00	21.80	42.60	0.80	0.10
2014/1~6	40.20	27.10	11.60	19.50	38.70	0.20	1.30
2014/7~12	42.30	24.30	15.00	17.80	39.30	0.60	0.00
2015/1~6	36.30	27.40	13.10	22.10	40.50	0.30	0.80

출처: 홍콩대학 민의조사 홈페이지, <www.hkupop.hku.hk>. (검색일: 2015.10.30.).

홍콩 주민들의 연령대별 정체성 역시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홍콩 대학 조사 결과, 스스로를 ‘홍콩인’이라고 인식하는 청소년(18~29세)의 비율이 1997년 45.60%에서 증가하다가 2006년 이후 평균 30%대로 하락했고, 최근 3~4년 전부터 다시 50%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면, 이들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인’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갈수록 하락했다.

표 III - 25 자신을 ‘중국의 홍콩인’으로 생각하는 홍콩 주민의 연령대별 비율(1997~2014년)

(단위: %)

조사기간 (6개월 단위)	18~29세	30세 이상	전체
1997/7~12	21.90	24.30	23.60
1998/1~6	18.70	18.70	18.50
1998/7~12	20.20	25.10	23.60
1999/1~6	22.20	21.90	22.00
1999/7~12	19.50	24.30	22.60
2000/1~6	22.30	22.80	22.50
2000/7~12	21.00	23.60	23.00
2001/1~6	20.70	19.60	20.00
2001/7~12	23.00	25.00	24.20
2002/1~6	18.90	21.30	20.70
2002/7~12	23.30	21.60	21.70
2003/1~6	19.50	20.80	20.80
2003/7~12	27.80	22.20	23.40
2004/1~6	22.80	20.60	21.20
2004/7~12	25.50	23.50	23.10
2005/1~6	18.60	21.60	21.20
2005/7~12	26.10	26.50	26.50
2006/1~6	23.10	25.60	25.10
2006/7~12	28.30	23.20	24.30
2007/1~6	29.60	32.60	31.80
2007/7~12	39.50	29.60	31.50
2008/1~6	35.40	28.00	29.20
2008/7~12	28.80	29.50	29.60
2009/1~6	35.60	31.30	32.00
2009/7~12	27.40	23.20	23.90
2010/1~6	30.40	31.60	31.30
2010/7~12	29.50	27.50	27.60
2011/1~6	25.10	19.90	21.30
2011/7~12	32.70	22.90	25.30
2012/1~6	15.60	24.50	22.70
2012/7~12	41.00	30.90	32.80
2013/1~6	28.50	23.30	24.30
2013/7~12	28.50	27.50	27.60
2014/1~6	33.50	24.80	27.10
2014/7~12	21.80	25.00	24.40

출처: 홍콩대학 민의조사 홈페이지, <www.hkupop.hku.hk>. (검색일: 2015.10.30.)

I
II
III
IV

표 III -26 자신을 ‘홍콩의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홍콩 주민의 연령대별 비율(1997~2014년)

(단위: %)

조사기간 (6개월 단위)	18~29세	30세 이상	전체
1997/7~12	15.10	22.20	19.90
1998/1~6	15.30	18.50	17.50
1998/7~12	12.30	18.80	16.80
1999/1~6	10.20	15.00	13.20
1999/7~12	12.70	18.50	17.00
2000/1~6	10.30	17.50	15.90
2000/7~12	11.10	15.20	14.20
2001/1~6	10.90	15.90	14.70
2001/7~12	10.90	15.50	14.00
2002/1~6	11.20	16.90	15.50
2002/7~12	10.90	16.00	14.70
2003/1~6	9.70	15.20	13.50
2003/7~12	12.80	16.90	15.60
2004/1~6	11.30	16.20	14.30
2004/7~12	13.10	17.40	16.20
2005/1~6	8.40	17.90	14.70
2005/7~12	13.50	18.10	16.90
2006/1~6	10.20	16.10	14.90
2006/7~12	8.30	22.80	20.10
2007/1~6	12.10	17.50	16.70
2007/7~12	9.60	17.80	16.00
2008/1~6	12.20	13.40	13.30
2008/7~12	9.30	14.00	13.00
2009/1~6	6.20	15.10	13.30
2009/7~12	7.60	14.30	13.10
2010/1~6	11.70	15.50	14.80
2010/7~12	7.50	15.50	13.80
2011/1~6	4.50	12.40	10.30
2011/7~12	8.80	20.70	17.80
2012/1~6	5.90	13.10	11.70
2012/7~12	8.20	18.10	16.20
2013/1~6	6.00	13.40	12.00
2013/7~12	4.70	17.40	15.00
2014/1~6	9.70	12.20	11.60
2014/7~12	11.00	16.00	15.00

출처: 홍콩대학 민의조사 홈페이지, <www.hkupop.hku.hk>. (검색일: 2015.10.30.).

한편 홍콩 중문대학의 조사결과 역시 홍콩 주민들이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홍콩인’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198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세대가 자신을 ‘중국인’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 중문대학의 2014년 11월 조사 결과 18세 이상 홍콩 주민 810명 중 8.9%만이 자신의 정체성을 ‘중국인’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1997년 조사에서는 32.1%를 기록했으나, 2010년 16.5%, 2012년 12.6%로 급락했고, 2014년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자신을 ‘홍콩인’이라고 응답한 홍콩 시민은 26.8%로 1998년 28.8% 이후 16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1980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 중에서 4.3% 정도만이 자신을 ‘중국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홍콩인’ 혹은 ‘홍콩인이면서 중국인이다’고 답변한 사람은 82.6%를 기록했다.⁸⁶⁾

다. 홍콩 반환 이후 중국정부의 정체성 형성 노력

(1) 국가정체성 형성의 내적 측면

첫째, 정치적인 차원에서 일국양제로 대표되는 제도통합이 이루어졌다. 홍콩의 모든 문제는 일국양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일국양제는 정책이나 원칙이 아닌 일종의 ‘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재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고”(제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행정구역으로서 중앙인민정부의 직할지역”(제12조)으로 규정되어

I

II

III

IV

⁸⁶⁾ “香港：自認‘中國人’比例跌至歷來新低,” 『明報』, 2014.11.11.

있다.⁸⁷⁾ 또한 행정장관은 “현지에서의 선거나 협상을 통해 선출되고, 중앙정부가 임명한다”(제45조)고 규정되어 있다.⁸⁸⁾ 이처럼 홍콩특별 행정구는 특수한 지방정부라는 점에서 중국 중앙정부와는 수직적 관계가 불가피하다. 또한 행정장관의 선출 방식에 있어서도 홍콩인들은 서구식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 중국정부의 개입과 조정에 의한 선거라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중국정부와 대립해오고 있다.

2014년 6월 10일 중국 국무원이 『홍콩특별행정구 일국양제 실천 백서』를 발간한 이후 홍콩인들의 일국양제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증대되었다. ‘백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중앙정부가 전면적인 홍콩 관할권을 보유한다. 따라서 ‘양제(兩制)’는 ‘일국(一國)’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일국’과 ‘양제’를 동등한 가치로 여겨서는 안된다.” 둘째, “고도의 자치권은 중앙정부가 부여하는 만큼만 누릴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에는 한계와 기준이 따른다. 따라서 ‘애국인사’를 주체로 한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⁸⁹⁾

이는 곧 중국정부가 ‘홍콩도 중국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2017년 행정장관 보통선거 쟁취 여론에 대한 대응과 함

87)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中國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test/2005-07/29/content_18298.htm>. (검색일: 2015.11.1.).

88) 위의 글.

89) 중국정부는 ‘백서’를 7개국 언어(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로 번역했는데, 이는 곧 외부세력의 홍콩 문제에 대한 개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 역시 홍콩 시위의 배후에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방 국가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홍콩 문제가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익 수호”를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澎湃, “港獨’背後的黑手究竟是誰,” 『環球時報』, 2014.10.1.; “占中已不是在行使正常的表達自由,” 『人民日報』, 2014. 10.2.

계 민주인사들의 민주화 소요 확산을 차단함과 동시에, 홍콩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중국과 홍콩과의 경제통합이 진행되었다. 중국정부는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의 경제 발전과 개인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홍콩 사람들이 약간의 정치적 불만을 감수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홍콩 경제의 발전에 주력했다. 하지만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비교할 때 홍콩의 경제발전은 더디게 이루어졌으며,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홍콩 경제는 GDP 성장률이 5.3%포인트 하락했고, 2003년 발생한 사스(SARS) 여파로 인해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8.7%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정부는 2003년 홍콩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체결하여 홍콩의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고 제도적인 경제통합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CEPA 체결 이후 중국본토와 홍콩 간 무역 증대와 홍콩 금융기관의 위안화 업무 허용 등이 가능해졌다.

또한 중국은 2009년 광둥성 선전(深圳)에 위안화 무역 결제를 처음으로 허용했고, 2012년에는 외환시범특구로 지정하여 홍콩과의 상호 투자 및 금융협력을 확대했으며, 선전 첸하이(前海) 특구에서는 ‘위안화 특별구’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광둥-홍콩-마카오 자유무역 시범지역(自由貿易試驗區)이 출범하여 서비스업 및 첨단 기술 사업 분야가 강점인 홍콩과 마카오를 광둥성과 연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셋째,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민족주의(애국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홍콩 당국은 반환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적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족주의(애국주의) 강화 노력이다. 홍콩 당국은 1984년 12월

‘중영 연합성명’ 합의 이후 중국본토와 홍콩인의 일체감을 강화하는 중국화 정책을 추진했다. 1986년 9월부터 초등학교 4~6학년에서 중국어 표준어(普通話) 교육을 실시했고, 1988년 9월부터는 중학교 1~3학년에서도 표준어 교육을 실시했다. 홍콩 반환 직전인 1996년에는 ‘학교 공민교육지침’을 개정하여 조국, 민족금지, 애국주의, 민족주의 등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다.

홍콩정부가 2002년 9월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제23조⁹⁰⁾와 관련된 입법을 발표하고 2003년 7월에 ‘국가안전조례’의 표결 처리를 추진하자, 2003년 7월 1일 홍콩에서 35만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2012년에는 중국정부가 홍콩의 각 급 학교에 ‘도덕·국민교육’ 과목 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중국은 두 차례 모두 홍콩인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다수의 홍콩인이 중국의 이와 같은 시도들을 홍콩의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결국 2012년 중국정부는 홍콩 내 친중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파인 령춘잉(梁振英)을 행정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홍콩의 반대세력과 중국정부의 관계를 더욱 급진적으로 만들었다.

(2) 국가정체성 형성의 외적 측면

첫째, 중국정부는 ‘국호’를 통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홍콩 주민들의 국가정체성을 형성·강화하고자 노력했다.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에 따르면 “홍콩특별행정구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구성원으로서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홍콩특별행정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

90) 동법 제23조는 “홍콩특별행정구는 반란·국가분열·선전선동·중앙정부전복·국가기밀누설 금지, 외국 정치단체의 홍콩 내 정치활동 금지, 홍콩 정치단체와 외국 정치단체의 연계 금지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담판에 참가할 수 있다”(제150조)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홍콩특별 행정구는 경제·무역·금융·항공·관광·통신·문화·체육 등 영역에서 ‘중국홍콩(中國香港)’의 이름으로 세계 각국과 지역 및 국제기구와 관계를 유지·발전할 수 있다”(제151조)고 규정되어 있다.⁹¹⁾ 이는 곧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One China)’의 원칙 하에 홍콩을 중국정부의 관할 지역으로 취급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설립과정에서 중국은 창립회원국들 간에 서명된 협정을 통해 회원국의 자격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회원국들에게도 개방함과 동시에 주권국이 아니거나 국제관계에서 책임성이 없는 신청국들에게도 AIIB 참여의 길을 열어 놓았는데,⁹²⁾ 이 역시 향후 홍콩이나 대만의 가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5년 6월 29일에 개최된 AIIB 재무장관회의에 홍콩특별행정구 대표가 중국정부 대표단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강대국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는 주변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질서 재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국지도부 역시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국가정체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⁹³⁾ 먼저, 2012년 11월 18차 당

91)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中國政府門戶網站, <http://www.gov.cn/test/2005-07/29/content_18298.htm>. (검색일: 2015.11.1.).

92) 관련 내용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협정(亞洲基礎設施投資銀行協定)」, 제3조(회원국 자격) 참조, <<http://www.mof.gov.cn/zhengwuxinxi/caizhengxinwen/201506/P020150629360882378045.pdf>>. (검색일: 2015.11.1.).

93)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정치학자인 왕지쓰(王緝思) 교수는 강대국의 외교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정치전통과 가치관념을 포함한 문화적 관점과 연계해서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王緝思, “美國外交思想傳統與對華政策,” 中國社

대회와 2013년 3월 전인대에서 각각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직에 오른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중국의 미래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즉, 중국은 기존의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벗어나 이제는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들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영향력 증대를 반영하여 자신들의 의지와 목소리가 반영된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려는 의도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또한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전통적 유가(儒家)사상에서 연원한 ‘친밀(親)·성실(誠)·호혜(惠)·포용(容)’ 개념을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 접목하고 있고, 미국을 겨냥해서는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곧 ‘21세기 강대국 부상’을 위한 중국정부의 외부정체성 형성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 시사점

(1) 특징

첫째, 홍콩 반환 초기 중국정부의 ‘통합’ 노력이 점차 ‘통제’로 변화함에 따라 홍콩 주민들의 국가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정부는 홍콩 반환 당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를 보장했다. 이후 중국의 역대 지도부는 모두 홍콩의 중국화(中國化)보다는 홍콩의 안정과 경제발전 및 통합에 초점을 두고 홍콩을 다스려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정부가 홍콩을 직접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2003년 홍콩정부의 ‘국가안전

會科學院美國研究所·中華美國學會編, 『中美關係十年』(商務印書館, 1989), p. 130.

조례' 표결 처리가 대중시위로 무산된 이후 중국의 홍콩 정책은 급변했다.⁹⁴⁾ 예를 들어, 중국본토 관광객의 홍콩 방문을 대규모로 허용한다든지,⁹⁵⁾ 대규모의 '기획 이주'⁹⁶⁾ 등을 통해 홍콩 주민을 소수자로 전락시키고 홍콩 내 반대 세력의 목소리에 '간섭'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후에 발생한 2012년 7월 '국민교육' 과목 도입 파문과 2014년 6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백서', 그리고 2014년 홍콩에서 발생한 '우산혁명' 등은 그동안 중국정부와 홍콩 주민 간에 누적되어 온 갈등이 폭발한 것이자 중국정부의 홍콩에 대한 '통제'와 '간섭'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대표적인 갈등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정부가 홍콩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줄곧 양보 불가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홍콩인의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94) 홍콩의 대표적인 비판적 지식인으로 알려진 천윈(본명 陳雲根)에 따르면, 중국은 198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홍콩을 외화 흡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로 인식하여 홍콩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참아 왔으나, 2003년 홍콩정부가 추진한 '국가 안전조례' 표결 처리가 실패로 끝난 후 중국의 홍콩 전략이 급변했다고 주장한다. 즉, 중국정부는 홍콩의 경제회복과 중국-홍콩 간 사회·경제적 통합이라는 슬로건하에 도시국가로서 자율성을 유지해 온 홍콩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陳雲, 『香港城邦論』(香港: 天窓出版社, 2011), pp. 112~127, 145~163.

95)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2003년 800만 명이었으나, 2009년 중국 광둥성 선전(深圳)시민의 홍콩 방문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된 이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2년에 연 인원 3천 5백만 명의 중국인이 홍콩을 방문했고, 2014년에는 4천 720만 명에 달했다. 이는 홍콩 인구(720만 명)의 6배를 넘는 규모로서,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에 따른 홍콩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누적되었다. 결국 중국정부가 2015년 4월부터 선전 시민들의 홍콩 방문 횟수를 주1회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2014년 홍콩 내 시위의 여파 등으로 인해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96) 1997부터 2012년까지 홍콩으로 이주한 중국본토 출신 이민자 숫자는 전체 홍콩 인구의 약 10%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홍콩 『문화보(文匯報)』의 편집자인 청상(程翔)은 중국공산당이 소위 '기획 이주'를 통해 홍콩사회의 각계각층에 요원을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程翔: 從十八大看香港地下黨規模," 『明報』, 2012.11.7.; 홍콩의 야권 지도자인 마틴 리(李柱銘) 역시 중국정부의 이주 정책이 홍콩 주민들을 소수로 만들고 결국은 홍콩의 티베트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柱銘, "香港西藏化," 『壹週刊』, 2012.9.29.

주었다. 중국정부 입장에서 홍콩 문제는 주권 문제이자 대만과의 통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31조 규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를 설치했고, 1984년 ‘중영 연합성명’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을 공표(1990.4.4)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정부는 홍콩을 통치했고 많은 비정치적인 부분을 양보해 왔으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양보는 중국의 정체성과 주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끊임없는 통제 노력을 기울여왔다.⁹⁷⁾ 2014년의 ‘우산혁명’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셋째, 홍콩 주민들은 경제발전보다는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과 같은 가치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홍콩인의 국가정체성 변화에 잘 반영되어 있다. 2012년 들어서면서 중국정부가 홍콩에 ‘도덕·국민교육’ 과목 도입을 시도하자 많은 홍콩인들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이루어지는 국민교육 도입이 홍콩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를 표명했다. 2012년 6월 홍콩대학 조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 홍콩 주민들이 자신을 홍콩인으로 인식한 비율이 45.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2012년 12월 조사 역시 홍콩인들이 자신을 홍콩 주민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10점 만점에 8.43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홍콩에서 2014년 ‘우산혁명’ 발생 이후 6월과 12월 조사 결과, 홍콩인들이 자신을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10점 만점 중에서 각각 6.65점과 6.54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처럼 홍콩인들이 스스로를 ‘중국인이기보다 홍콩 주민’으로 여기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발전 방향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

97) 張麟徵, “公民提名, 普選, 民主反思-談香港的困境與出路,” 『海峽評論』, 第286期 (2014), <<http://www.haixiainfo.com.tw/286-9248.html>>. (검색일: 2015.10.30.).

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이는 곧 홍콩인들은 중국의 경제발전 이외에도 다른 요소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홍콩 반환 이후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국경제는 발전하고 중국본토와 홍콩 간 정치·문화적 간극도 점차적으로 좁혀지고 있지만 홍콩에서 중시되는 인권과 민주주의는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홍콩 주민들 사이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홍콩 반환 이후 경제·사회적 위상 저하로 인해 홍콩 주민들의 위기의식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반환 직후인 1997년 홍콩의 GDP는 중국 전체에서 15.6%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2.9%로 급감했고, 부유한 중국본토인들의 홍콩 유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을 촉발했으며, 홍콩지역의 지니계수 역시 1997년 0.518에서 2013년 0.537로 상승하는 등 소득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적 위기의식이 정치적 불만족과 결합되면서 홍콩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 증대 및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때 홍콩 주민들의 ‘중국인’ 정체성이 일정하게 강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2003년 12월과 2004년 6월 조사 결과, 홍콩 주민들이 자신을 ‘중국인’으로 여기는 비율이 각각 32.5%와 33.0%를 기록했다. 이는 199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서, 2003년 중국 최초의 유인 우주선(神舟5號) 승무원인 양리웨이(楊利偉)가 홍콩을 방문하여 영화배우 청룡(成龍)과 함께 공연을 하는 등 중국과 홍콩의 일체감을 고무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홍콩이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고 있던 2003년 당시 중국-홍콩 간 ‘CEPA’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 6월 조사 결과, 홍콩인들의 약 38.6%가 자신을 ‘중국인’

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로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따른 ‘중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2007년 12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오는 2012년부터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의원 선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는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결정이 민주화를 갈망하는 홍콩인들의 욕구를 일정부분 충족시켜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홍콩 청소년의 중국에 대한 불신 증대 등은 ‘홍콩인’ 정체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2년 6월 조사 결과, 연령대가 18~29세인 젊은이들 중에서 69.3%가 자신의 정체성을 ‘홍콩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반면에 8%만이 자신을 ‘중국인’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국이 2012년에 시도한 ‘도덕·국민교육’ 과목 도입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우산혁명’이 발생한 2014년 6월과 12월 조사 결과 역시 18~29세의 젊은이들이 자신을 ‘중국인’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각각 3.6%와 6.5%에 그쳤다. 이들 젊은 학생들은 홍콩에서 태어나고 대부분이 표준 중국어 학습을 요구받은 첫 번째 세대로서 스스로를 ‘홍콩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강하다. 이들은 중국본토의 정치와 문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중국을 다른 세대들보다 좀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위협을 받을 경우 강하게 반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시사점

중국-홍콩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중국정부는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해 홍콩 반환 초기에 점진적인 방식의 정책적 조치를 취했으나, 점

차적으로 ‘국가 주도의 일방형(A+B=A)’ 방식으로 국가 정체성 형성을 위한 대내외적 조치를 취했다. 즉, 민족주의 강화를 위한 애국주의 교육과 일국양제로 대표되는 제도적 통합 및 CEPA로 대표되는 경제통합 등과 같은 대내적 정체성 형성 노력은 물론, ‘국호’ 통합과 ‘중국의 꿈’과 같은 미래 비전 제시 등과 같은 대외적인 강대국 정체성을 과시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통합을 위한 대내외적 국가정체성 형성 노력은 성공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한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통합과정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대내적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중국이 홍콩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국양제와 ‘하나의 중국’ 등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7년 이후 현재까지 홍콩에서 진행된 변화를 보면 초기에는 ‘일국’과 ‘양제’가 동등한 가치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정부가 홍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4년 홍콩에서 발생한 소위 ‘우산혁명’으로 지칭되는 시위는 홍콩 주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경제적 빈곤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결과이며, 동시에 홍콩이 중국과 같을 수 없다는 정체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결국 향후 중국의 홍콩 정책에 있어서 ‘일국’과 ‘양제’가 동등한 가치로 작용하는 경우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통일·통합과정을 보이겠지만, 2014년 홍콩에서 발생한 ‘우산혁명’ 사례처럼 ‘일국’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중국의 간섭이나 통제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반감이 커질 것이다. 즉, 중국의 홍콩에 대한 개입과 통제가 늘어날수록 홍콩 사람들의 ‘홍콩인’ 정체성은 더욱 늘어나게 되고 결국 일국양제의 미래 역시 좀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둘째, ‘21세기 강대국화’를 도모하고 있는 중국의 대외적 정체성 형성 전망 역시 불투명하다. 특히 ‘친·성·혜·용’ 이념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주변외교 정책이 갖고 있는 외교적 수사로서의 모호성과 보편성의 결여 등으로 인해 주변국들이 중국의 주변외교 정책을 혼란히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중국과 영토·영유권 분쟁을 경험한 국가들(베트남, 필리핀 등)과 지역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지역강대국(일본·인도·러시아 등)과의 관계 정립도 중요하다. 결국 시진핑 시기 중국의 주변외교 이념과 정책은 전통시대의 ‘중화질서’관과 유사한 측면이 많고, 중국정부 역시 기본적으로 주변국들을 대등한 지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변외교 정책 추진과정에서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주변외교 정책의 성패는 역내 영토분쟁 해결 과정 및 ‘일대일로’ 전략 구상 추진과정에서 시진핑 지도부의 주변국에 대한 태도(誠)와 포용성(容) 등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

셋째, 중국의 홍콩에 대한 통치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통일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홍콩과 마찬가지로 대만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국양제 방식으로 통일·통합하려 하지만, 대만은 스스로를 독립적인 정치적 실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이 그동안 축적해 온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교류협력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분단국의 통일·통합 노력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2014년 3월 대만에서는 중국과의 ‘양안 서비스무역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는 곧 마잉주(馬英九) 집권 이후 중국과의 성급한 경제통합 추진에 따른 중국의존도 증대와 일자리 감소 등

에 대한 우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11월 대만 지방선거에서도 홍콩에서 발생한 ‘우산혁명’의 영향을 받아 친중 성향의 대만 국민당이 패배하기도 하였다. 이는 곧 2016년 1월에 예정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민진당이 집권할 경우 중국의 대만에 대한 통일·통합 노력은 더욱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중국-대만 간 비정치적 분야(경제교류, 인적교류, 사회문화교류 등)에서 교류협력은 늘어났으나 대만인들의 정체성은 갈수록 중국과 멀어지고 있다는 점,⁹⁸⁾ 대만에서 태어난 ‘본성인(本省人)’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⁹⁹⁾ 등은 양안 간 통일·통합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넷째, 미래 세대인 홍콩의 젊은 층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불신 증대 및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역시 중국과 홍콩의 통합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한반도 통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결국 통일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시킬 수 있는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의 내·외부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대내적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남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치’의 문제들—개인주의와 권

98) 대만 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의 여론조사 결과, 1992년에 자신이 대만인이라는 대답이 17.6%, 중국인은 25.5%, 양쪽 모두라는 대답은 46.6%였으나, 2014년에는 대만인 60.6%, 중국인 3.5%, 양쪽 모두 32.5%였다. ‘대만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esc.nccu.edu.tw/course/news.php?Sn=166#>>. (검색일: 2015.11.10.).

99) 대만의 행정원 대륙위원회가 2010년 9월 실시한 대만인들이 보는 현재의 양안관계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인 8.1%는 현상 유지 후 통일을 바라고, 1.7%는 빠른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대답했다. 양안 교류의 속도에 대해서도 응답자 40.3%는 ‘딱 맞다’, 37.5%는 ‘너무 빠르다’, 13.2%는 ‘너무 느리다’고 답했다.

리의 문제, 자유와 평등의 균형의 문제 등—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남북한 주민이 중시하는 가치가 다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남북한 주민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적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의 통일·통합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동화’와 ‘애국주의’ 교육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통일·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치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간극을 좁힐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대내적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남북한 양측의 ‘제도통합’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진정한 통일·통합에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의 제도통합 과정에서 좀 더 개방적이고 다원화된 사회가 좀 덜 개방적이고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사회를 포용하는 제도통합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부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통일한국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만 국제사회와 주변국이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제화와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강대국에 둘러싸인 통일한국이 ‘종합국력’ 경쟁에 매진하기 보다는 ‘개방성’과 ‘포용성’을 가진 ‘국격있는 나라’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북아일랜드

영국은 북아일랜드 이외에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다양한 지역정체성의 도전에 직면해왔다. 특히 북아일랜드의 경우는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어 상대적으로 장기간 갈등해왔으며, 영국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단위에 ‘영국다움’ 혹은 ‘영국적인 것(Britishness)’이라고 하는 정체성

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도전을 제기해왔다. 북아일랜드의 정체성 도전에 대해서는 분리주의 운동과 무장활동에 대한 폭력적 대응, 1998년 벨파스트협정(Belfast Agreement) 체결과 이후 분권화(devolution)를 통한 자치권 확대,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와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철폐, 그리고 사회집단 간 갈등 완화를 위한 교류 증대 등의 노력 등이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과정은 다민족 사회로서의 영국의 특성상 특정 민족주의를 동원한 국가정체성 형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국 정체성이 갈등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영국 정체성을 확산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영국은 ‘협의적 접근(consociational approach)’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아일랜드 정체성을 수용하고, 북아일랜드 의회에 경제·사회적 권한을 이양해 실질적으로 연방체제 수준의 중앙-지방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제도적으로 ‘연방주의’ 도입은 거부함으로써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서의 ‘영국’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가. 배경

(1) 북아일랜드의 정체성문제

사회집단의 정체성은 다른 집단과의 뚜렷한 경계, 집단 간 차별의 존재, 그리고 차별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변화된다. 사회집단의 정체성은 “사회적 범주나 대상에 대한 자신을 규정하는 것으로 집단 내 정서적, 정치적, 심리적 요소의 상호작용”이며,¹⁰⁰⁾ 자신과 외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자기범주화와 집단 내 관계가 집단 외부와의 관계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자부심(self-esteem)을 확대 재생산하는 사회적 비교과정을 통

¹⁰⁰⁾ Jan E. Stets and Peter J. Burke, “Identity Theory and Social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63, no. 3 (2000), p. 224.

해 강화된다.¹⁰¹⁾ 특히 이 과정에서는 ‘자기 고양(self-enhancement)’이 중요하며, 이는 객관성보다는 “특정한 ‘객관적 대상’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측면 가운데 특정한 맥락에서 발견되는 주관적 의미를 강조하는 인지과정”이다.¹⁰²⁾ 이러한 과정은 자신이 속한 집단은 물론 ‘외부’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사회정체성이론에 따르면 비교 과정에서 발견되는 집단 간 차별과 이러한 차별의 정당성에 대한 태도에 따라 집단 간 갈등이나 협력이 이루어진다. 국가정체성 형성과정은 이러한 하위집단의 정체성을 포괄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소속집단에 대한 유대나 집단 간 관계에 따라 하나의 국가정체성 형성부터 분리·독립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북아일랜드의 정체성 형성문제는 민족·종교적으로 뚜렷한 사회집단 사이의 차이, 식민지배과정에서 축적된 차별적 관계에서 시작되고 있다. 북아일랜드 분쟁은 1542년 영국의 아일랜드 복속, 그리고 보다 가까운 역사로는 1801년 통합법안(Acts of Union)에 따라 아일랜드가 영국에 병합됨으로써 설립된 영국-아일랜드왕국(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의 아일랜드 병합 이후 1916년 부활절 봉기(Easter Rising)와 같은 아일랜드 독립 운동이 지속되었으며, 1920년 아일랜드법안(Government of Ireland Act of 1920)에 따른 아일랜드(26개 카운티)와 북아일랜드(6개 카운티)의 분리, 1921년 5월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성립, 그리고 1922년 12월 아일랜드 자유공화국 독립이 진행되었다.

북아일랜드의 분리와 자치 허용문제는 북아일랜드 내 거주하는 영국-프로테스탄트계 주민과 아일랜드-가톨릭계 주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

101) *Ibid.*, p. 225.

102) 김성진, “몰도바 정체성과 민족주의,” 『슬라브학보』, 제29권 3호 (2014), pp. 4~5.

게 대립되는 문제였다. 1912년 가톨릭계 주민들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우려는 영국-프로테스탄트계의 얼스터민병대(Ulster volunteers) 창설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응해 북아일랜드 자치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세력은 1913년 아일랜드민병대(Irish volunteers)를 조직하였다. 이들 간의 갈등은 1913년 얼스터의용군(Ulster Volunteer Force: UVF)이 조직되어 대량으로 무기를 밀반입하고, 아일랜드 공화주의자들이 1917년 아일랜드공화군(Irish Republican Army: IRA)을 조직하면서 고조되었으나,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소강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들은 영국의 잔류를 지지하는 연방주의자(unionist)와 영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32개 카운티로 구성된 아일랜드' 건설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nationalist)들 간 무력갈등의 두 축을 형성하였다.¹⁰³⁾

양자 사이의 갈등은 194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산발적으로 지속되었으나, 1966년 3월과 4월 부활절 봉기(Easter Rising, 1916) 50주년 기념 행진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1966년 연방주의자 가운데 강경파들은 공화주의자들의 세력 강화를 우려해 이전의 UVF를 계승하는 무장조직을 재결성하였으며, 이후 IRA/IRA 분파들과 무력갈등이 재점화되었다. 이후 1998년 벨파스트협정으로 무력분쟁이 종식될 때까지의 시기는 '고난의 시기(the Troubles)'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 시기동안 진행된 북아일랜드 무력분쟁으로 약 3,500여 명이 희생되었다.

103) IRA는 아일랜드 독립전쟁 이후 1969년까지는 비교적 통합적으로 활동하였으나 1969년 이후 아일랜드와의 관계에 대한 입장과 맑시즘의 수용 등에 따라 '공식 IRA(Official IRA)'와 '임시 IRA(Provisional IRA)'로 분리되었다. '임시 IRA'는 다시 1986년 '지속 IRA(Continuity IRA)'로 분리되었으며, 이어 1997년 평화과정(peace process)에 반대하는 '참 IRA(Real IRA)'로 분리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공화주의자들 내에서도 북아일랜드의 장래와 아일랜드와의 관계 설정에 이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
II
III
IV

1998년 벨파스트협정으로 무력분쟁이 중단되고 영연방 내 자치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민족·종교 갈등, 오랜 기간 진행된 두 집단 간 경제·사회적 격차 혹은 차별, 그리고 무력분쟁으로 야기된 적대감 해소라는 과제를 안고 시작되었다. 북아일랜드 내 ‘평화의 벽(peace wall)’이 보여주는 것처럼 아일랜드-가톨릭계 주민과 영국-프로테스탄트계 주민의 갈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차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법치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¹⁰⁴⁾

(2) 범주의 현저성

북아일랜드의 정체성 갈등은 민족과 종교적 경계를 따라 나타나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인구구성은 17세기부터 아일랜드계 주민들이 유출되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주민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 구성에도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북아일랜드에서의 사회·경제적 차별과 정체성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표 III-27 북아일랜드의 종교 구성

	1991년		2001년		2011년	
	인구(명)	%	인구(명)	%	인구(명)	%
가톨릭(Catholic)	605,639	38.4	678,462	40.3	738,033	40.8
장로교(Presbyterian)	336,891	21.4	348,742	20.7	345,101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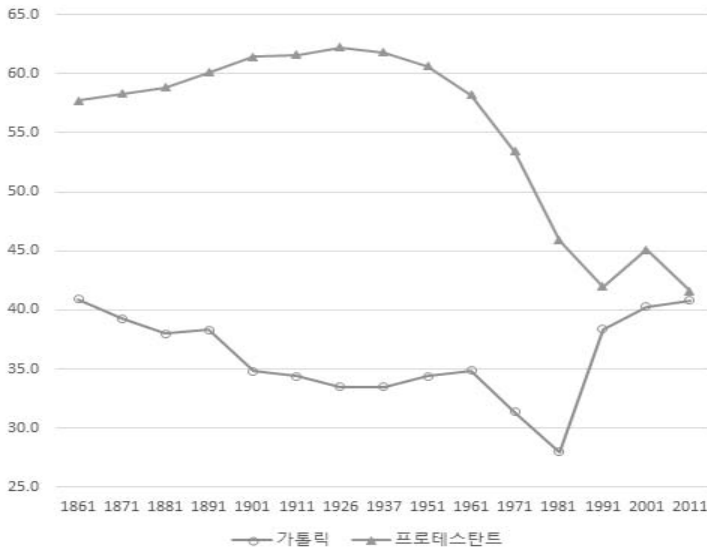
¹⁰⁴⁾ 협정문안 관련,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36652/agreement.pdf>. (검색일: 2015.6.20.) 참조.

아일랜드 성공회 (Church of Ireland)	279,280	17.7	257,788	15.3	248,821	13.7
감리교(Methodist)	59,517	3.8	59,173	3.5	54,253	3.0
침례교(Baptist)	19,484	1.2
형제교단(Brethren)	12,446	0.8
회중주의자 (Congregationist)	8,176	0.5
유니테리언교 (Unitarian)	3,213	0.2
기타 기독교 (Other Christian)	79,129	5.0	102,211	6.1	104,380	5.8
기타 종교 (Other Religions)	.	.	5,082	0.3	14,859	0.8
무교(None)	59,234	3.7	.	.	183,164	10.1
무응답(Not Stated)	114,827	7.3	233,853	13.9	122,252	6.8
총계(Total)	1,577,836	100.0	1,685,267	100.0	1,810,863	100.0

출처: 북아일랜드 인구조사자료 2011, <<http://cain.ulst.ac.uk/ni/religion.htm#ni-rel-01>>. (검색일: 2015.6.10.) 참조.

북아일랜드의 종교 구성은 1991년 프로테스탄트 50.6%(장로교 21.4%, 아일랜드 성공회 17.7%, 감리교 3.8%, 침례교 1.2% 등), 가톨릭 38.4%, 무교 3.7% 등이었다. 이러한 구성은 2001년에는 프로테스탄트 45.6%, 가톨릭 40.3%로 프로테스탄트 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가톨릭 인구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1년 인구조사에서도 나타났으며, 북아일랜드 총인구 180만 명 가운데 프로테스탄트 인구(41.6%)와 가톨릭 인구(40.8%)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림 III-3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인구 구성비의 변화(1861~2011년)



출처: “Northern Ireland Census 2001 Key Statistics (2002),” Table KS07a; “Northern Ireland Census 2011 Key Statistics (2012),” Table KS211NI, in <<http://cain.ulst.ac.uk/ni/religion.htm#ni-rel-01>>. (검색일: 2015.6.10.)에 기초

특히 북아일랜드의 경우 영국 전체와 비교할 때 가톨릭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1993년의 경우 영국 총인구 가운데 가톨릭 인구비율은 약 10%에 불과하지만 북아일랜드에서는 약 35%에 달하고 있으며,¹⁰⁵⁾ 각각의 종교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사회가 가톨릭 지역과 프로테스탄트 지역으로 양분되었다.

105) 이러한 차이는 교회를 방문하는 비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주 방문한다는 응답은 북아일랜드 58%, 영국 15%였으며, 교회에 거의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북아일랜드 32%, 영국 78%로 ‘삶의 방식’에서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Northern Ireland Social Attitudes Survey 1992~1993,” The Third Report, pp. 6~7, in <<http://cain.ulst.ac.uk/ni/religion.htm#ni-rel-01>>. (검색일: 2015.6.10.).

표 III-28 지역의 가톨릭 인구비율(1991년)

지역	인구(명)	%	지역	인구(명)	%
Antrim	44,516	31.7	Down	58,008	58.0
Ards	64,784	11.3	Dungannon	45,428	55.7
Armagh	51,817	45.4	Fermanagh	54,033	54.9
Ballymena	56,641	18.3	Larne	29,419	22.1
Ballymoney	24,198	30.2	Limavady	29,567	51.7
Banbridge	33,482	27.6	Lisburn	99,458	26.9
Belfast	279,237	39.0	Magherafelt	36,283	58.8
Carrickfergus	32,750	8.9	Moyle	14,789	52.2
Castlereagh	60,799	9.4	Newry&Mourne	82,943	71.8
Coleraine	50,438	22.4	Newtownabbey	74,035	13.0
Cookstown	31,082	53.2	North Down	71,832	9.0
Craigavon	74,988	40.1	Omagh	45,809	64.3
Derry	95,371	69.5	Strabane	36,141	61.3

출처: “The Northern Ireland Census 1991: Religion Report,” in <<http://cain.ulst.ac.uk/ni/religion.htm#ni-rel-01>>. (검색일: 2015.6.10.).

이러한 종교 구성은 민족 구성과 겹쳐 나타나는 것이며, 지역적 종교분포는 교육과 직업 선택 등의 과정에서 상호 교류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종교가 정체성의 차이는 물론, 사회·경제적 차이와 차별, 그리고 정치적 지향의 차이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3) 집단 간 차별

종교로 구분되는 집단 간의 뚜렷한 경계는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 집단 간 격차가 발생하면서 ‘차별’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내에서도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가 위축된 지역이었다. 예를 들어 벨파스트협정 체결(1998) 직전인 1996년 GDP를 보면 잉글랜드가 약 85%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I
II
III
IV

뒤를 이어 스코틀랜드 8.6%, 웨일즈 4.1%,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2.3%를 담당하고 있다.

표 III-29 영국 GDP의 지역별 구성(1989~1996년)

(지역별 단위: %)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합계 ¹⁾	435,060	472,049	490,280	511,737	540,138	570,943	597,741	629,840
잉글랜드	85.2	85.0	84.9	84.8	84.9	84.8	84.7	84.9
웨일즈	4.3	4.3	4.3	4.2	4.1	4.2	4.2	4.1
스코틀랜드	8.3	8.5	8.6	8.7	8.7	8.7	8.8	8.6
북아일랜드	2.1	2.2	2.3	2.3	2.3	2.3	2.3	2.3

1) 합계 단위: 백만 파운드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Regional Trends 1998, p. 145, in <<http://cain.ulst.ac.uk/ni/economy.htm>>. (검색일: 2015.6.10.).

이러한 생산력 격차는 소득격차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1997년 주 평균소득을 보면 잉글랜드는 평균 373파운드, 스코틀랜드 337파운드, 웨일즈 330파운드이며, 북아일랜드는 약 320파운드였다.¹⁰⁶⁾ 1인당 소득의 경우 1996년을 보면 북아일랜드는 9,696파운드로 잉글랜드 11,622파운드나 스코틀랜드 11,266파운드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웨일즈보다 높은 수준이었다.¹⁰⁷⁾

지역 간 소득격차는 직업선택의 기회와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예를 들어 벨파스트협정이 체결되는 직전의 시점인 1997년을 보면 개인/

¹⁰⁶⁾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Regional Trends 1998, <<http://cain.ulst.ac.uk/ni/economy.htm>>. (검색일: 2015.6.10.) 참조.

¹⁰⁷⁾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Regional Trends 1998, p. 150, <<http://cain.ulst.ac.uk/ni/economy.htm>>. (검색일: 2015.6.10.).

보호서비스(33.1%), 관리직(26.1%), 사무/비서직(21.6%), 판매직(20.3%) 등에서는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인구의 취업 비율이 20%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1991년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인구 구성비가 각각 38.4%와 50.6%로 구성비 차이가 12.2%였으나, 이러한 차이가 2001년에는 5.3%(가톨릭 40.3%, 프로테스탄트 45.6%)로 급감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 이상의 취업 비율 격차는 종교에 따라 취업기회에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30 직종별 종교 구성 비율(1997년)

(단위: %)

	종사자 합계 ¹⁾	프로테 스탄트 (A)	가톨릭 (B)	비율 격차 (B-A)
관리직(Managers & Administrators)	36,185	60.9	34.8	-26.1
전문직(Professional Occupations)	20,994	51.2	35.6	-15.6
준전문직/기술직 (Associate Professional & Technical Occupations)	41,440	53.6	39.4	-14.2
사무/비서직 (Clerical & Secretarial Occupations)	66,169	59.2	37.6	-21.6
기능직(Craft & Skilled Manual Occupations)	44,615	61.8	35.5	-26.3
개인/보호서비스 (Personal & Protective Service Occupations)	53,524	63.9	30.7	-33.1
판매직(Sales Occupations)	31,100	58.4	38.1	-20.3
장치·기계 조작직 (Plant and Machine Operatives)	56,691	56.3	41.3	-15.0
기타(Other Occupations)	47,734	56.4	38.8	-17.6
총합(TOTAL)	398,452	58.5	37.0	-21.5

1) 합계 단위: 명

출처: Fair Employment Commission, "A Profile of Northern Ireland Workforce: Summary of Monitoring Returns 1997," Monitoring Report, Appendix 1, no. 8 (1998), <<http://cain.ulst.ac.uk/ni/employ.htm>>. (검색일: 2015.6.10.).

I

II

III

IV

이러한 종교집단별 차이는 실업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1992년 가톨릭계 주민들의 실업률은 18%로 프로테스탄트계 주민들의 실업률 9%의 두 배에 달하였다. 가톨릭계 주민의 실업률은 1993년 18%, 1994~1995년 16%, 1996년 13%, 1997년 12%, 그리고 1998년 10%로 낮아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같은 시기 프로테스탄트계 인구 실업률의 2배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서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어 남성 실업률 격차는 1992년 13.7%, 1997년 10.4%, 그리고 1998년 7.2%에 달했다.¹⁰⁸⁾

직업선택에서의 격차는 공직과 사기업 종사자의 종교 구성비에서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북아일랜드 왕실얼스터경찰대(Royal Ulster Constabulary: RUC) 가운데 프로테스탄트의 비율은 2001년 전체 병력의 92%에 달했다.¹⁰⁹⁾ 이러한 편중은 사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1997년 조사된 북아일랜드 40대 기업의 대부분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종업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업원 가운데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구성비 차이가 20% 미만인 곳은 11개에 불과했던 반면, 40% 이상의 격차가 있는 기업은 18개에 달했다. 가톨릭계 종업원이 다수를 차지한 경우는 6곳에 불과했으며, 두 개의 기업에서만 가톨릭계 종업원이 30% 이상 많았다. 이러한 구성은 종교가 취업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08) 박종철 외,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190.

109) 이러한 비율은 쿼터제 도입으로 가톨릭계 시민의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종료되는 2011년 4월에도 여전히 가톨릭의 비율은 전체 7,200여 명 가운데 약 30%에 불과했으며, 지원병력 2,500명 가운데 약 18%에 그쳤다. 위의 책, p. 206.

표 III-31 40대 기업 중 1천 명 이상 고용 기업 종사자 종교구성비

(단위: %)

순위	기업명	종업원 수 ¹⁾	프로테스탄트 (A)	가톨릭 (B)	격차 (B-A)
1	Short Brothers PLC.	6,058	85.5	14.5	-71.0
2	Desmond & Sons Ltd.	3,679	31.9	68.1	36.2
3	Queen's University of Belfast, The	3,045	67.9	32.1	-35.8
4	University of Ulster	2,962	69.2	30.8	-38.4
5	British Telecom Northern Ireland	2,810	56.6	43.4	-13.2
6	Stewarts Supermarkets Ltd.	2,698	73.8	26.2	-47.6
7	Adria Ltd.	2,682	14.1	85.9	71.8
8	Moy Park Ltd.	2,565	60.5	39.5	-21.0
9	Super Valu Distribution Ltd.	2,551	48.5	51.5	3.0
10	Northern Ireland Electricity PLC.	2,254	73.8	26.2	-47.6
11	Northern Bank Ltd.	2,196	75.3	24.7	-50.6
12	Ulster Bank Ltd.	1,853	70.8	29.2	-41.6
13	Dunnes Stores (Bangor) Ltd.	1,830	23.6	76.4	52.8
14	Crazy Prices	1,722	59.1	40.9	-18.2
15	Gardner merchant Ltd.	1,546	58.1	41.9	-16.2
16	Compass Services Ltd.	1,421	60.4	39.6	-20.8
17	Harland & Wolff Shipbuilding and Heavy Industries Ltd.	1,421	94.2	5.8	-88.4
18	Marks & Spencer PLC.	1,330	56.9	43.1	-13.8
19	Wilson FG (Engineering) Ltd.	1,293	78.7	21.3	-57.4
20	AIB Group Northern Ireland PLC	1,288	53.3	46.7	-6.6
21	Grafton Recruitment	1,183	45.8	54.2	8.4
22	Sandown Private Nursing Homes Ltd.	1,159	70.3	29.7	-40.6
23	Michelin Tyre PLC	1,136	73.3	26.7	-46.6
24	Gallagher Ltd.	1,114	85.9	14.1	-71.8
25	Courtaulds Textiles (Holdings) Ltd.	1,092	47.0	53.0	6.0
26	Northern Telecom (NI)	1,074	76.3	23.7	-52.6
27	AVX Ltd.	1,049	74.4	25.6	-48.8

1) 종업원 수 단위: 명

출처: Fair Employment Commission, "A Profile of the Northern Ireland Workforce: Summary of Monitoring Returns 1997," Monitoring Report, no. 8 (1998), <<http://cain.ulst.ac.uk/ni/employ.htm>>. (검색일: 2015.6.10.)에 기초해 작성(40대 기업 가운데 종업원 1천 명 이상 기업만 제시).

I
II
III
IV

(4) 벨파스트조약 체결 시기의 ‘사회정체성’

북아일랜드에서는 1920년 북아일랜드 분리와 1922년 아일랜드 독립이 진행되면서 영국,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정체성 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이러한 정체성은 종교를 기반으로 지역적으로 상호 단절되면서 독자적인 교육과 상호 배타적인 경제·사회영역을 구축하고, 분단까지는 아니어도 단절적인 환경에서 집단 내 자기고양과 집단 간 갈등이 촉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영국 이주민을 중심으로 구축된 연방주의는 프로테스탄트들과 연결되고 있으며, 가톨릭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는 ‘32개 카운티의 아일랜드’ 복원, 즉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아일랜드 정체성과 북아일랜드를 하나의 독립적 정치체로 인식하는 북아일랜드 정체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족주의 진영의 분화는 IRA의 발전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표 III-32 북아일랜드정책에 대한 종교별 입장

(단위: %)

	1989년	1990년	1991년	1993년	1994년
프로테스탄트					
영국 잔류	93	93	92	90	90
아일랜드와 통일	3	5	4	5	6
기타 선택	2	1	1	4	3
잘 모름	2	1	1	1	1
답하지 않음	0	0	1	0	0
가톨릭					
영국 잔류	32	33	35	36	24
아일랜드와 통일	56	55	53	49	60
기타 선택	4	5	2	5	7
잘 모름	7	6	7	10	8
답하지 않음	1	1	2	1	1

기타					
영국 잔류	81	72	79	74	66
아일랜드와 통일	13	19	13	13	15
기타 선택	4	5	4	6	14
잘 모름	3	2	4	7	5
답하지 않음	0	2	0	0	0

출처: “Northern Ireland Social Attitudes Survey 1995~1996,” The Fifth Report, p. 35, <<http://cain.ulst.ac.uk/ni/religion.htm#ni-rel-01>>. (검색일: 2015.6.10.).

1989년부터 1994년의 시기 동안 나타난 북아일랜드정책에 대한 입장을 보면 프로테스탄트계 주민들은 90~93%가 북아일랜드의 영국 잔류를 선택했으며, 응답자의 3~6%만이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대안으로 제시해 비교적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비해 가톨릭계 주민들은 1989년 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선택한 응답자가 56%에서 1994년 60%로 증가되었으나, 영국 잔류를 선택한 응답도 1989년 32%에 달했다. 가톨릭 응답자 가운데 영국 잔류를 지지하는 비율은 1994년 24%까지 감소했으나 여전히 집단 내 의견이 프로테스탄트 주민들보다 분열되어 있었다.

표 III-33 민족정체성에 대한 응답(1996년)

(단위: %)

	1989년		1991년		1993년		1994년	
	P	C	P	C	P	C	P	C
British/Ulster	79	12	82	12	85	13	82	10
N.Irish/Sometimes	18	29	16	27	13	26	15	28
Irish	3	60	2	62	2	61	3	62

* P: 프로테스탄트, C: 가톨릭

출처: “Northern Ireland Social Attitudes Survey 1995~1996,” The Fifth Report, p. 37, <<http://cain.ulst.ac.uk/ni/religion.htm#ni-rel-01>>. (검색일: 2015.6.10.).

이와 유사하게 민족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프로테스탄트는 1994년 영국인이라는 응답 약 82%, 아일랜드인이라는 응답 3%, 그리고 북아일랜드인이라는 응답은 15%였다. 이에 비해 가톨릭 가운데 영국인이라는 응답은 10%에 불과했으며, 아일랜드인이라는 응답은 62%, 그리고 북아일랜드인이라는 응답은 28%에 달하였다.

나. 국가정체성의 변화

(1) 정치적 주도 세력의 변화

1998년 벨파스트협정은 북아일랜드의 자치를 위한 제도적 문제(Strand 1),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과의 관계(Strand 2), 그리고 영국과 아일랜드공화국 사이의 합의(Strand 3)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정체성 형성과 변화와 관련해 벨파스트협정을 위한 협의과정 및 이후 평화과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변화-정치세력의 교체, 투자와 경제발전을 통한 경제적 격차 해소 노력, 경찰력 개편과 공동교육의 진행과 같은 사회통합 노력-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벨파스트협정 체결 이후 두드러지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양 진영을 주도하는 정치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연방주의자들의 경우 1960년대 프로테스탄트 연방주의당(Protestant Unionist Party: PUP)과 얼스터 연방주의당(Ulster Unionist Party: UUP)으로 분리되었으며, 1971년 PUP 일부와 급진 연방주의자들이 민주연방주의당(Democratic Unionist Party: DUP)을 설립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민족주의 진영은 1970년 8월 사회민주노동당(Social Democratic and Labour Party: SDLP)의 입헌주의에 기초한 아일랜드에의 통일을 주장하였으며, ‘임시 아일랜드공화군(Provisional Irish

Republican Army: PIRA)’의 무장투쟁노선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SDLP의 영향력은 PIRA가 1994년 휴전에 동의하면서 지지기반이 취약해졌으며, 협상 및 평화과정은 신페인(Sinn Féin: SF)이 주도하게 되었다. 1998년 이후 선거에서는 연방주의 진영에서 DUP가 UUP를 누르고 1당으로 부상하였으며,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SF가 SDLP의 교체세력으로 대두되어 2006년 양자 사이의 연정이 구성되었다.¹¹⁰⁾ 이들에 의한 평화과정은 무력을 동원한 극단적인 대결보다는 통합적 정체성 형성과 이를 위한 경제·사회적 문제해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2) 경제적 차이·차별의 변화

경제적 격차는 차별과 연계되면서 사회 내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상위의 정체성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사회집단 사이의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차이가 차별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기회의 평등과 보다 적극적인 차별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1998년 벨파스트협정 이후 북아일랜드 경제는 주 평균소득만 본다면 전체적으로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의 소득 격차는 1997년 잉글랜드 여성 주 평균 소득(301.3 파운드)의 88%수준이었으나, 2012년 97.3%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110) 벨파스트협정 이후 선거 결과와 양 진영의 1당의 변화에 대해서는 박종철,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pp. 183~184.

표 III -34 영국의 지역별 주 평균수입 격차(잉글랜드 평균소득 대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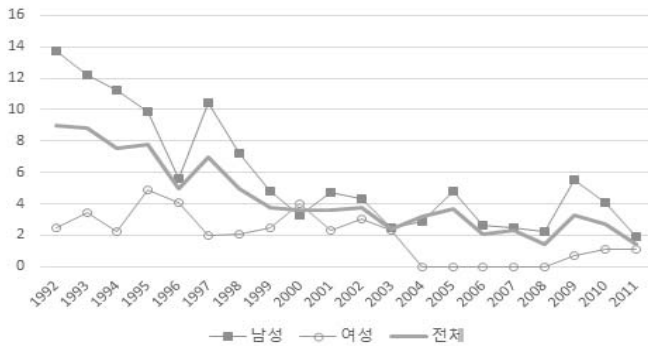
(단위: %)

	1997년			2007년			2012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잉글랜드 ¹⁾	414.0	301.3	372.7	505.4	399.2	495.2	553	452.3	512.1
웨일즈	87.8	89.3	88.6	87.4	89.3	89.0	73.0	100.1	88.4
스코틀랜드	91.3	90.4	90.4	95.4	95.7	95.6	79.2	110.0	97.2
북아일랜드	86.0	88.0	85.8	84.1	93.3	88.7	86.6	97.3	89.7

1) 잉글랜드 단위: 주평균소득액(파운드), 기타: 잉글랜드 주평균소득 대비 비율(%)
출처: 1997 소득액,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Regional Trends 1998, <<http://cain.ulst.ac.uk/ni/economy.htm>>. (검색일: 2015.6.10.); Department of Enterprise, Trade and Investment (DETI), Results from the Northern Ireland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 2012 (22 November, 2012), p. 11; DETI, Northern Ireland 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 2007 (7 November, 2007), p. 9에 기초해 작성.

경제격차에 영향을 주는 실업률의 경우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프로테스탄트계와 가톨릭계 실업률 격차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1992년 가톨릭계와 프로테스탄트계 주민의 실업률 격차는 13.7%에 달했으나, 1998년 한 자리 수로 좁혀진 이후 2011년 1.9%대로 감소해 양 집단이 거의 유사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격차는 여성 실업률 격차가 1992년 2.5%와 2011년 1.1%로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주로 남성에게서 발견되는 격차였다고 할 수 있으나, 2011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차이도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그림 III-4 프로테스탄트-가톨릭 실업률 격차(1992~2011년)



출처: Office of the First Minister and Deputy First Minister, “2011 Labour Force Survey Religion Report: Labour Market,” (December 2012), Table A3.5와 A5.9, <<http://www.ofmdfmi.gov.uk/labour-force-religion-report-2011.pdf>>. (검색일: 2013.7.16.) 참조.

실업률에서의 격차가 현저하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율에서는 두 공동체 사이에 여전히 작지 않은 격차가 발견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프로테스탄트 남성의 취업률은 54%인 반면, 가톨릭 남성의 취업률은 46%에 그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도 프로테스탄트 53%, 가톨릭 47%로 비슷한 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도 54%와 46%로 여전히 8%의 격차가 나타났다.¹¹¹⁾

보다 구체적인 차이는 산업별 고용구조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운송/창고업, 공무/국방, 도소매 영역에서는 프로테스탄트의 고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다. 특

¹¹¹⁾ Office of the First Minister and Deputy First Minister, “2011 Labour Force Survey Religion Report: Labour Market (December 2012),” Table A5.5, <<http://www.ofmdfmi.gov.uk/labour-force-religion-report-2011.pdf>>. (검색일: 2013.7.16.) 참조.

히 요식업의 경우 2004년 50%에 달했으나 2011년 39%로 하락되어 신규 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 -35 산업영역별 프로테스탄트 인구 고용 비율

(단위: %)

산업구분	2004년	2007년	2011년
농림수산 ¹⁾	63	63	58
제조	62	62	54
건설	48	44	45
도소매/자동차 수리	59	57	56
운송/창고 ²⁾	60	60	71
요식	50	47	39
정보통신	-	-	55
재정/보험	47	55	49
교수, 과학자, 기술자	-	-	51
부동산, 임대, 비즈니스	61	58	-
행정/지원서비스	-	-	48
공무원/국방	61	60	60
교육	42	53	55
건강/사회복지	55	50	51
기타 서비스	57	56	55
총 고용인구 비율	56	55	54

1) 2007년과 2004년 자료에는 수산업 대신 수렵(hunting)이 포함됨.

2) 2007년과 2004년 자료에는 통신이 운송/창고업에 포함됨.

출처: 2004 Labour Force Survey Religion Report, p. 56; 2007 Labour Force Survey Religion Report, p. 58; 2011 Labour Force Survey Religion Report, p. 58에 기초해 작성, 박종철 외, 『통일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p. 192에서 재인용.

(3) 사회적 차이·차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북아일랜드 내 갈등의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사회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한 인식은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벨파스트(Belfast)의 퀸스대학교(Queen's University)와 얼스터대학교(Ulster University)는 1998년부터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회의 상호이해, 두 공동체 사이의 평등과 차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정체성 인식 등에 대해 '북아일랜드의 삶과 시대(Northern Ireland Life and Times: NILT)'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

북아일랜드 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회 사이의 상호이해 수준은 1998년 벨파스트협정 체결 이후에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수준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듯하다. NILT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의 경과를 고려할 때, 가톨릭 사회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응답자들의 이해는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조금 이해한다'는 응답이 줄고 '대체로 모른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프로테스탄트 공동체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많이 이해한다'는 가톨릭계 응답자의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두 응답자 집단 모두 상대방의 문화와 전통을 '대체로 모른다' 혹은 '전혀 모른다'는 응답에는 큰 변화가 없으며, 이는 두 사회 사이의 상호이해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

II

III

IV

표 III -36 가톨릭 및 프로테스탄트 사회의 상호 이해

(단위: %)

	가톨릭 사회의 문화/전통에 대한 프로테스탄트 사회의 이해				프로테스탄트 사회의 문화/ 전통에 대한 가톨릭 사회의 이해도			
	2005년	2007년	2009년	2012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2년
많이 이해한다	27	25	27	28	25	30	30	35
조금 이해한다	55	58	59	53	57	53	56	47
대체로 모른다	13	14	11	15	14	14	12	14
전혀 모른다	5	3	3	3	5	3	2	4
잘 모르겠다	1	·	0	1	0	·	0	0

출처: <<http://www.ark.ac.uk/nilt/results/comrel.html#equality>>. (검색일: 2013.6.13.).

상호이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가 주도적인 지역에 취직해야 할 경우 선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동 질문에 대해 가톨릭계 응답자의 경우 ‘당연히 회피한다’와 ‘회피할 듯하다’는 응답은 2003년 약 40%에서 2012년에도 약 25%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여전히 응답자의 1/4은 종교적으로 다른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회피하겠다는 입장은 물론, ‘회피하지 않을 듯하다’는 응답자들은 점차 ‘당연히 회피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당연히 회피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03년 14%에서 2012년 42%로 급증했으며, 이는 상호인식에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¹²⁾

112) 박종철 외, 『통일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p. 194.

표 III -37 프로테스탄트 지역에 있는 일자리에 대한 가톨릭 주민의 인식

(단위: %)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2년
당연히 회피한다	15	11	9	8	7
회피할 듯하다	25	26	25	21	18
회피하지 않을 듯하다	39	35	37	38	29
당연히 회피하지 않는다	14	23	28	34	42
잘 모르겠다	8	5	2	0	5

출처: <http://www.ark.ac.uk/nilt/2003/Community_Relations/AVOIDPWK.html>;
 <http://www.ark.ac.uk/nilt/2012/Community_Relations/AVOIDPWK.html>.
 (검색일: 2013.7.11.) 등 각 연도별 결과 참조, 박종철 외, 『통일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p. 194에서 재인용.

종교적으로 다른 사회에 대한 이해와 부담은 두 집단 사이의 차별에 대한 인식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NILT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3년 사이에 전체응답자의 약 45%가 종교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2003년의 경우 가톨릭 응답자의 56%는 프로테스탄트가 더 우대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프로테스탄트 응답자의 41%는 가톨릭 공동체가 더 우대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을 포함할 경우 전반적으로 종교에 따라 불평등한 처우가 존재한다는 인식과 상대방이 더 혜택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I

II

III

IV

표 III-38 '일반적으로 누가 우대받는가?'에 대한 응답

(단위: %)

	1998년			1999년			2000년			2003년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무교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무교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무교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무교
프로테스탄트	70	12	·	73	11	30	54	11	33	56	8	·
가톨릭	1	48	·	1	52	33	3	46	25	1	41	·
경우에 따라 다르다	25	35	·	24	29	32	42	37	25	39	47	·
기타	·	·	·	0	2	1	0	1	8	0	1	0
잘 모름	4	6	0	2	6	4	2	4	10	4	4	·

출처: <<http://www.ark.ac.uk/nilt/results/comrel.html>>. (검색일: 2013.7.13.).

서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은 '가장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북아일랜드 분쟁의 핵심이 종교 문제이기 이전에 차별의 문제이며, 경제적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아일랜드 평화과정의 핵심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NILT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응답자 모두 직업의 기회가 가장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직업선택의 문제는 1998년 이후에는 프로테스탄트 응답자들에게서 더 많이 지적되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직업기회만큼이나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그 비율도 증가되고 있다. 평등이 필요하다는 영역 가운데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응답자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은 문화적 평등과 경찰로부터의 처우 문제이다.¹¹³⁾ 문화적 평등 문제는 무력충돌을 야기

113) 위의 책, pp. 199~200.

해은 프로테스탄트들에 의한 ‘종교행사’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며, 가톨릭 응답자들이 경찰력 행사과정을 평등이 필요한 영역의 하나로 지적하는 것은 북아일랜드의 공권력이 처한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Ⅲ-39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에 대한 인식 차이 (단위: %)

	1998년		1999년		2000년		2003년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직업 기회	54	41	31	37	21	33	28	33
주택	2	4	4	3	2	2	2	4
문화적 표현	4	16	8	13	5	11	6	11
경찰로부터의 처우	13	5	15	4	16	7	15	4
교육 기회	4	7	4	6	4	3	4	8
기타	0	1	0	0	0	2	1	0
모든 영역	22	25	37	34	50	42	42	37
잘 모르겠다	1	1	1	3	1	2	2	2

출처: <<http://www.ark.ac.uk/nilt/results/comrel.html>>. (검색일: 2013.7.13.), 박종철 외,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p. 200에서 재인용.

다. 중앙정부의 정체성 형성 노력

(1) 국가정체성 형성의 내적 측면

정체성 갈등은 차이와 차별의 존재, 그리고 이러한 차이와 차별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반발을 관리하기 어려울 때 야기된다. 이와 반대로 통합적인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차이가 차별로 발전하

I
II
III
IV

지 않도록 관리하고, 차별을 줄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체성 갈등 해소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북아일랜드 분쟁 이후 영국정부는 협의적 접근을 통해 사회집단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소하고자 하였다. 북아일랜드에서의 협의적 접근은 집행권의 공유, 자치권의 부여, 주요 직책, 자원배분 및 지출에서의 비례성, 그리고 ‘사실적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거부권 부여에 기초하고 있다.¹¹⁴⁾ 이와 관련해 네빈 아이켄(Nevin T. Aiken)은 북아일랜드에서의 정체성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적 접근을 과거 적대적 세력과의 접촉(engagement)을 위한 정부·비정부 간 제도를 설립·운영하는 도구적 화해, 과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통한 사회경제적 화해, 그리고 구조적·물질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분배적 화해로 요약하였다.¹¹⁵⁾

북아일랜드 정체성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영국정부의 노력은 권력 분점과 일방적인 정치질서 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정치적 제도 발전, 경제적·사회적 차별의 완화·해소, 적대적 사회집단 사이의 교류와 접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피해자 보상을 통한 화해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권력의 분점과 다수에 의한 일방적 정치질서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은 집행부 구성, 의회의 투표 방식, 그리고 북아일랜드 자치권 부여와 관련된 국제적 협의제도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북아일랜드 사태는 근본적으로 독립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

114) John McGarry and Brendan O’Leary, *The Northern Ireland Conflict: Consociational Engage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 2.

115) Nevin T. Aiken, “Learning to Live Together: Transitional Justice and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vol. 4, no. 2 (July 2010), pp. 166~188.

다. 독립운동은 분리를 전제로 하게 되며 이 경우 ‘통합’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지향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 영국은 ‘연방주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으며, 단일체제하의 분권(devolution)을 통한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¹¹⁶⁾ 이러한 입장에서 영국은 북아일랜드에 대해 직접통치와 자치를 번갈아 적용하면서 합의된 틀과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자치를 허용하는 방식을 고집해왔다.

이러한 자치권 확대과정은 권력 분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북아일랜드의 집행부는 각각의 정당이 등록된 연방주의 및 공화·민족주의 양당과 내 최다득표 정당들의 연정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조치는 다수를 점한 한 정파가 의사정책과정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북아일랜드 의회와 집행부로의 실질적인 권한 이행은 갈등하는 두 정파 사이의 연정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또한 벨파스트협정은 북아일랜드 의회 내 ‘공동체 결정(cross-community decision making)’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참가자 과반수와 각각의 연방주의 및 민족주의 진영내 참가자 과반수 지지(5조 (d)항), 혹은 투표 참가자 60% 이상 지지와 연방주의와 민족주의 각각의 진영 내 40% 이상의 지지(5조 (d)ii항)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¹⁷⁾

북아일랜드의 자치권 확대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급진적 변화’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벨파스트협정은 2부(Strand 2)와 3부(Strand 3)를 통해 아일랜드공화국과 북아일랜드 간 장관회의(North/South Ministerial Council), 그리고

116) ‘분권과 ‘연방’은 제도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에서 많은 괴리가 발견되며 일부 연방관계는 영국의 분권체제보다 더 집권적인 경우도 발견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영국의 경우는 제도적으로는 단일체제를 지향하지만 과정적으로는 연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7) Belfast Agreement of 1998 조약문,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36652/agreement.pdf>. (검색일: 2015.9.15.).

영국-아일랜드 위원회(British-Irish Council)와 영국-아일랜드 정부 간 회의(British-Irish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등 북아일랜드의 지위가 북아일랜드 내 행위자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변경되기 어려운 국제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인 민족주의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고, 이러한 참여와 자치권 확대에 대한 연방주의자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¹¹⁸⁾

둘째, 분쟁 후 통합과정에서 영국정부는 무엇보다 경제·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차별적 상황에 대한 대응은 북아일랜드 경제 전반의 발전을 통한 경제적 지역격차의 완화와 공식 참여에서의 차별 금지, 그리고 경찰과 같은 특정영역에 대한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등으로 구성되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1998년 북아일랜드법안에 따라 정부의 장단기 경제계획은 평등위원회(Equality Commission)의 평등효과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정책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평가해 경제적 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 행정부는 5년 장기계획과 연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와 경제발전,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집단 사이의 평등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2011년에 발간한 『정부 프로그램 2011~2015』(Programme for Government 2011~15)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외 투자, 사회

118)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는 1993년과 1995년 각각 EU 회원국으로 EU내 공동체 문제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합의를 1998년 벨파스트협정에 반영하였다. 특히 이러한 협력은 EU의 구조발전기금의 수혜는 물론 1994년 IRA와 연방주의자들 사이의 종전 합의 이후 EU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창설과 ‘아일랜드 국제기금’에의 기여 증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었다. Katy Hayward, “Reiterating National Identities: The European Union Conception of Conflict Resolution in Northern Ireland,”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41, no. 3 (2006), pp. 275~276.

간접시설 확충, 도시와 마을의 개선, 공동체 발전, 광대역 네트워크 확충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¹¹⁹⁾ 특히 동 프로그램은 북아일랜드 경제발전 방향으로 하위지역 간 균형발전, 평등,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하였다.¹²⁰⁾ 이와 함께 북아일랜드 집행부는 이미 『정부 프로그램 2008~11』(Programme for Government 2008~11)의 추진 과정에서 2010년 공동체의 통합된 발전을 위한 자문보고서 『응집, 공유, 그리고 통합전략』(Cohesion, Sharing and Integration Strategy: Consultation Document)을 발간하였다. 이 자문보고서를 통해 북아일랜드 집행부는 지난 10여 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는 분할(division)과 격리(segregation)를 정상으로 여기는 공동체에 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인종, 피부색, 종교나 정치적 견해, 연령, 성별, 장애나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정, 평등, 권익, 책임과 존경 속에서 살고 일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다고 천명하였다.¹²¹⁾

119) Northern Ireland Executive, “Programme for Government 2011~15: Building A Better Future,” <<http://www.northernireland.gov.uk/pfg-2011-2015-final-report.pdf>>. (검색일: 2015.9.22.), p. 16.

120) *Ibid.*, p. 25.

121) “Cohesion, Sharing and Integration Strategy,” <http://www.ofmdfmi.gov.uk/reformatted_final_print_version_csi_-_26.07.10.pdf>. (검색일: 2015.9.17.), p. 1. 동 자문보고서는 북아일랜드 집행부가 향후 관심을 갖고 진행할 사안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단기 조치로는 ‘응집, 공유, 통합 프로그램’의 시행과정에서 공동체의 참여능력 강화, 분파적 폭력 시 즉각 개입해 다자적 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위기개입능력 육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조기 개입, 공동체 재건 등이 제시되었으며, 중기조치로 공공집회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메카니즘의 제공, 응집, 공유, 통합에 기여하는 성공적 프로젝트의 확산이 제시되었다. 또한 장기 관심으로 공동영역 개발, ‘공유하는 이웃(shared neighbourhood)’의 장려, 공동체별로 단절된 공공 서비스의 제거, 공동체의 단절과 배제, 그리고 증오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을 언급하고 있다. *Ibid.*, pp. 7~9. 동 보고서는 공동체 사이의 물리적 장벽인 ‘평화 장벽’ 수를 줄일 것을 천명하고 있기도 하다. *Ibid.*, p. 10.

I
II
III
IV

북아일랜드의 경우 경제적 차별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차별은 사법적 차별이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경찰력 충원과정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경찰 및 사법제도의 개선 문제는 양 진영의 무장해제와 맞물려 장기간 갈등을 촉발한 사안이었으며, 1999년 9월 발간된 ‘북아일랜드 치안에 대한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on Policing for Northern Ireland)’의 보고서,¹²²⁾ 2006년 세인트 앤드류스협정(St Andrews Agreement),¹²³⁾ 그리고 2010년 10월 힐스버러협정(Hillsborough Agreement)의 과정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었다.¹²⁴⁾ 이와 관련해 2010년 4월 북아일랜드의 권력이양과 함께 신설된 법무장관직은 주목할 만하다. 북아일랜드 법무장관은 공동체 투표방식으로 선출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내각으로부터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동체 투표로 선출된 법무장관이 사법적 조치와 관련해 독자성을 갖는다는 점은 정파적인 법률 집행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셋째, 북아일랜드 내 정체성 갈등에 대해 영국정부는 사회집단 사이의 교류와 접촉을 확대함으로써 상호 분리된 공동체 사이의 적대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10년의 보고서 『응집, 공유, 그리고 통합전략』에서도 이미 언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치들은 정부와 민간수준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122) 원본은 <<http://cain.ulst.ac.uk/issues/police/patten/patten99.pdf>>. (검색일: 2015.9.25.) 참조.

123)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36651/st_andrews_agreement-2.pdf>. (검색일: 2015.9.25.) 참조.

124) 힐스버러협정에 대해서는 <<http://www.parliament.uk/documents/post/snpc-05350.pdf>>. (검색일: 2015.9.25.) 참조; 경찰개혁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박종철 외, 『통일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pp. 186~187 참조.

공동체 사이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1987년 중앙공동체관계사업단(Central Community Relations Unit: CCRU)에서부터 시작되었다. CCRU는 북아일랜드 내 서로 다른 공동체 간의 관계에 대해 국무장관에 자문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나, 평등, 공동체관계, 정보와 평가부서의 세 부서로 나누어 정부정책에 대한 도전과 평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를 통한 혁신 기능을 담당하였다.¹²⁵⁾ CCRU는 정부기관 이외에 학계 및 민간단체와 연계되어 활동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비정부 자선단체로 공동체관계위원회(Community Relations Council)를 설립해 공동체 사이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¹²⁶⁾ CCRU는 2000년 공동체관계사업단(Community Relations Unit: CRU)으로 개칭되었으며, 수석 및 제1장관실의 평등사업단 일부로 소속되었다. CRU는 북아일랜드 내 지역행정단위들의 ‘우호관계 프로그램(good relations program)’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의 26개 전 지역이 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¹²⁷⁾

끝으로 북아일랜드는 정체성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과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통해 ‘사회경제적 화해’를 시도하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1969년 북아일랜드 사태부터 벨파스트협정 체결 전까지의 ‘고난의 시기’ 동안 약 3,500명이 희생되었으며, 정치적 수감자(political prisoner) 규모도 약 25,0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¹²⁸⁾

125) <<http://cain.ulster.ac.uk/ccru/background/background.htm>>. (검색일: 2015. 9.27.) 참조.

126) 특히 공동체관계위원회는 북아일랜드 발전에 관한 정치적 입장을 유보하고 공동체 사이의 관용과 이해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CCRU의 활동에 대해서는 <<http://cain.ulster.ac.uk/ccru/links/centres.htm>>. (검색일: 2015.9.27.) 참조.

127) <http://www.ofmdfmi.gov.uk/district_council_programme>. (검색일: 2015. 9.27.) 참조.

대체로 과거사에 대한 접근은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다양한 면을 포괄하고 있으며, 대체로 이 과정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²⁹⁾ 이러한 경향은 북아일랜드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대결양상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의 처벌 보다는 피해자 발굴과 보상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SF 의장인 게리 아담스(Gerry Adams)의 경우 1984년 3월 암살 시도의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1972년 영국군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희생된 진 맥콘빌(Jean McConville)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었다.¹³⁰⁾ 동 사건에 대해 북아일랜드 경찰은 2011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SF 북아일랜드 의장 바비 스토레이(Bobby Storey)를 포함해 총 11명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동 사건과 관련해 북아일랜드 검찰은 아담스와 스토레이 등 총 7인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¹³¹⁾

128) James W. McAuley, Jonathan Tonge, and Peter Shirlow, "Conflict, Transformation, and Former Loyalist Paramilitary Prisoners in Northern Ireland,"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vol. 22, no. 1 (2010), p. 25.

129) 북아일랜드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문제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는 Cillian McGrattan, "Working through the Past in Bosnia and Northern Ireland: Truth, Reconciliation and the Constraints of Consociationalism," *Journal on Ethnopolitics and Minority Issues in Europe*, vol. 11, no. 4 (2012), pp. 103~126 참조.

130) 맥콘빌은 1972년 12명의 IRA에 의해 벨파스트 자택에서 납치된 후 살해되었으며, 이후 실종자로 분류되었다. 맥콘빌은 당시 37세로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1999년 IRA는 동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맥콘빌은 영국군의 정보원이었다고 발표하였다. 동 사건은 2001년부터 보스턴대학(Boston College) 학자들과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2003년 맥콘빌의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2006년 경찰 음부스만에 의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아담스가 그 배후로 지목되었다. "Gerry Adams will not be Prosecuted over the IRA murder of Belfast Mother-of-ten Jean McConville who was killed in 1972," *Mail Online*, 29 September, 2015.

이러한 조사는 연방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영국군과 RUC, 그리고 연방주의자 민병대에 의해 7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5건의 사건을 조사한 ‘카셀 보고서(Cassel Report)’는 조사대상 사건 가운데 24건에서 RUC와 얼스터방위연대(Ulster Defence Regiment)의 공모협약이 있음을 지적하였다.¹³²⁾ 2013년 11월 동 사건들의 희생자 가족들은 관련자들의 행위를 방지한 책임을 물어 영국정부와 경찰을 제소할 것임을 밝혔으며,¹³³⁾ 2015년 2월 고등법원은 UVF의 살인행위들에 대해 법적 검토를 승인하였다.¹³⁴⁾

이러한 조치들은 ‘화해’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북아일랜드 과거사문제는 주로 피해자 보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북아일랜드 의회 산하에 피해자사업단(Victims’ Unit)이 설치되었으며, 150개 공동체 수준에서 피해자 지원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등이 마련되는 등 피해자 보상과 지원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었다. 2008년 의회는 ‘피해자와 생존자를 위한 위원회(Permanent Commission for Victims and Survivors)’를 설립했으며, 2009~2012년의 기간 동안 피해보상 예산으로 3천 6백만 파운드를 책정하였다.¹³⁵⁾

131) <<http://www.bbc.com/news/uk-northern-ireland-34391293>>. (검색일: 2015.9.30.).

132) Douglass Cassel, Susie Kemp, Piers Pigou, and Stephen Sawyer, Report of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Panel on Alleged Collusion in Sectarian Killings in Northern Ireland,” <<http://cain.ulst.ac.uk/issues/collusion/docs/cassel061106.pdf>>. (검색일: 2015.9.30.).

133) <<http://www.bbc.com/news/uk-northern-ireland-24962960>>. (검색일: 2015.9.30.).

134) <<http://www.bbc.com/news/uk-northern-ireland-31084022>>. (검색일: 2015.9.30.).

(2) 국가정체성 형성의 외적 측면

북아일랜드 정체성의 외적 측면은 스코틀랜드나 웨일즈 등 영국 내 다른 지역과는 다소 다르게 형성되어왔다. 특히 북아일랜드의 경우 지역 내 종교적 배경에 기초한 사회정체성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며, 영국 정체성은 프로테스탄트 사회를 중심으로 상향식(bottom-up)으로 전개되었다.¹³⁶⁾ 이로 인해 영국 정체성은 대결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으나, 벨파스트협정 이후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¹³⁷⁾

무엇보다 영국의 경우 영국 정체성은 민족을 기반으로 성립할 수 없었으며, 구체적으로 정의되기보다는 다소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북아일랜드 내 아일랜드 정체성을 인정하고, 공동체 사이의 교류 확대와 불평등의 해소를 통해 영국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갈등을 완화 혹은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북아일랜드 정체성에 대한 지지가 증가됨에 따라 향후 영국 정체성을 분쟁 당사자와 같은 입장을 탈피해 북아일랜드 정체성의 상위에 위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축적되고 있다.

벨파스트협정 이후 나타나는 커다란 변화는 여전히 종교적 격차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방주의자나 민족주의자가 아니라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무력분쟁이 종식되면서 대결적인 정체성에 대한 지지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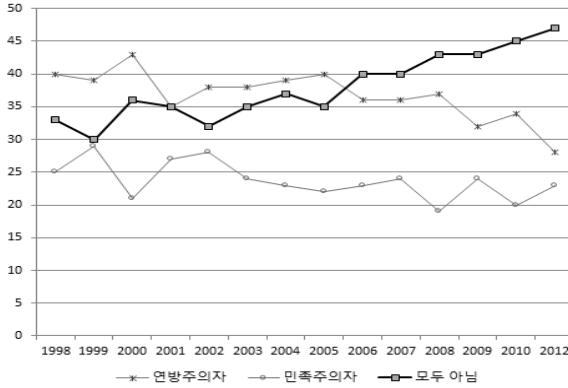
135) Nevin T. Aiken, "Learning to Live Together: Transitional Justice and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p. 176.

136) James W. McAuley and Jonathan Tonge, "British in Northern Ireland since the Good Friday Agreement," *Parliamentary Affairs*, vol. 63, no. 2 (2010), p. 266.

137) 이러한 변화는 이미 1985년 영국-아일랜드협정(Anglo-Irish Agreement)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Ibid.*, p. 267.

●그림 III-5 정체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1998~2012년)

(단위: %)



출처: Northern Ireland Life and Times Survey, <<http://www.ark.ac.uk/nilt/results/polatt.html#interest>>. (검색일: 2013.6.17.)에 기초해 작성, 박종철 외, 『통일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p. 210에서 재인용.

이와 유사한 현상은 민족정체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연방주의나 민족주의에 대한 질문이 정책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다면 민족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보다 구체적인 정체성의 지향을 보여줄 수 있다. 201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40%가 스스로를 영국인이라고 응답했으며, 아일랜드인이라고 응답한 경우 약 25%, 그리고 북아일랜드인이라고 응답한 경우 약 21%로, 종교적 구성비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I
II
III
IV

표 III -40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2011년 인구조사 결과)

(단위: %)

민족정체성	거주자 응답 비율
영국인(British only)	39.9
아일랜드인(Irish only)	25.3
북아일랜드인(Northern Irish only)	20.9
영국인이면서 아일랜드인(British & Irish only)	0.7
영국인이면서 북아일랜드인(British & Northern Irish only)	6.2
아일랜드인이면서 북아일랜드인(Irish and Northern Irish only)	1.1
영국인, 아일랜드인, 북아일랜드인(British, Irish, and Northern Irish only)	1.0
기타	5.0

* 2011년 인구조사 당시 거주자(usual residents)는 총 1,810,863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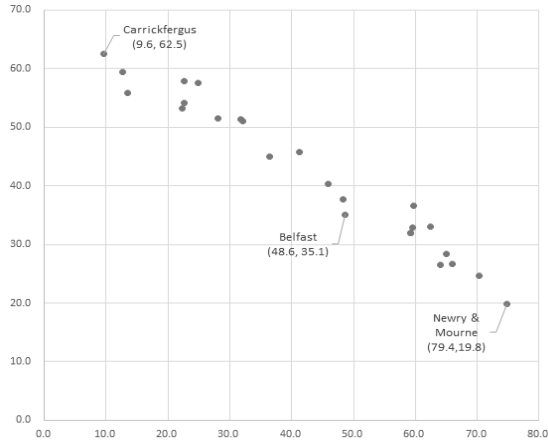
출처: Northern Ireland Census 2011 Key Statistics (2012), Extracted from Table KS202NI, <<http://cain.ulst.ac.uk/ni/popul.htm>>. (검색일: 2015.6.10.).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종교와 정체성은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I-6>은 행정단위 별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영국인(British)’라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 가톨릭 인구비율과 반비례함을 보여주고 있다. 가톨릭 인구비율이 79.4%였던 뉴리/몬(Newry & Mourne district) 주민 가운데 스스로를 영국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9%에 불과했으며, 가톨릭 인구가 9.6%로 가장 적은 캐릭퍼거스(Carrickfergus)에서는 스스로를 영국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이 종교로 나뉘어 있으며, 정체성에서도 여전히 지역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³⁸⁾

138) 그러나 스스로를 북아일랜드인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종교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지

그림 III-6 지역별 ‘영국인’ 정체성과 가톨릭 인구비율(2011년 인구조사)

(단위: %)



* X축: 가톨릭 인구비율, Y축: ‘영국인’ 정체성

출처: <[http://www.ninis2.nisra.gov.uk/InteractiveMaps/Census%202011/National%20Identity%20\(Classification%201\)%20KS202NI/atlas.html](http://www.ninis2.nisra.gov.uk/InteractiveMaps/Census%202011/National%20Identity%20(Classification%201)%20KS202NI/atlas.html)>. (검색일: 2013.6.17.).

이보다 앞선 2007년 설문조사 역시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사회의 민족정체성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톨릭 사회에서는 아일랜드인이라는 응답이 75%에 달하였으며, 프로테스탄트 사회에서는 아일랜드인이라기보다 영국인이라는 응답이 75%로 두 사회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차이는 응답항목상의 차이 때문에 직접 비교는 타당하지 않지만 <표 III-33>에 나타난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프로테스탄트의 영국 정체성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1994년 82%), 가톨릭의 아일랜드 정체성은 다소 증가한 것이다(1994년 62%). 이리

않았다. Jonathan Tonge and Raul Gomez, “Shared Identity and the End of Conflict? How Far Has A Common Sense of ‘Northern Irishness’ Replaced British or Irish Allegiances Since the 1998 Good Friday Agreement?,” *Irish Political Studies*, vol. 30, no. 2 (2015), p. 282.

I
II
III
IV

한 변화는 영국 정체성을 강요하지 않고 아일랜드 정체성을 인정한 벨 파스트협정의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41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사회의 민족정체성(2007년)

(단위: %)

민족정체성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무종교
영국인이 아닌 아일랜드인(Irish not British)	43	0	7
영국인이라기보다는 아일랜드인(more Irish than British)	32	4	23
아일랜드인이면서 영국인(equally Irish and British)	14	18	22
아일랜드인이라기보다는 영국인(more British than Irish)	4	40	26
아일랜드인이 아닌 영국인(British not Irish)	1	35	14
기타	6	2	8
잘 모름	1	0	0

출처: NILT Survey 2007, in McAuley and Tonge, "British in Northern Ireland Since the Good Friday Agreement," p. 268.

둘째,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북아일랜드인’이라는 정체성의 강화이다. 영국의 정체성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정체성의 상위 정체성으로 영국 정체성이 존재하는 다층적 정체성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아일랜드와 영국 정체성 사이의 갈등은 북아일랜드인이라는 정체성의 강화에 따라 다층적 구조가 형성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NILT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약 26%가 스스로를 북아일랜드인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응답은 특히 18~24세의 청년층(약 34%)에서는 높게 나타났다.¹³⁹⁾

¹³⁹⁾ 이러한 수치는 1989년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McAuley and Tonge, "British in Northern Ireland since the Good Friday Agreement," p. 276.

이러한 응답은 <표 III-33>에 제시된 것처럼 프로테스탄트 가운데 북 아일랜드 정체성을 제시한 응답자가 1994년에 15%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배가 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연령층의 경우 프로테스탄트들은 북아일랜드 정체성을 수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가톨릭계에서는 이전보다 아일랜드 정체성에 무감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양대 정당인 DUP와 SF가 각각 영국과 아일랜드 정체성을 지지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는 여전히 양대 정체성의 대립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⁴⁰⁾

셋째, 영국이나 아일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 정체성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념들은 여전히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영국 정체성은 ‘영국’ 민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족정체성’이 될 수 없으며, 영국독립당(UK Independence Party: UKIP)이 ‘영국 정체성’을 이주자와 유럽주의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영국계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지역정체성 혹은 ‘하위 정체성(subordinate identity)’으로서의 ‘북아일랜드인’이란 가톨릭, 북아일랜드 주민, 혹은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나거나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이주해온 사람들의 정체성” 등으로 공감대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일랜드 가톨릭에게 북아일랜드인이라는 정체성은 “아일랜드에 살지만 아일랜드인으로 구분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영국인 혹은 통합된 아일랜드를 부인하고 영국의 일부이기를 원하는 사람들”, 혹은 “영국인이거나 프로테스탄트로 북부에 사는 사람들”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반해 ‘북아일랜드인’은 북아일랜드인을 “영국이나 아일랜드에 속하지 않는 북아일랜드에 사는 사람”

140) Tonge and Gomez, “Shared Identity and the End of Conflict?,” pp. 294~295.

으로 정의하고 영국과 아일랜드 정체성과 구분되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이와 달리 영국 프로테스탄트와 같은 맥락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영국인으로 불리거나 영국 여왕과 의회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한다.¹⁴¹⁾ 이러한 다의적인 해석에도 불구하고 영국 프로테스탄트나 아일랜드 가톨릭 모두 북아일랜드 정체성이 모두 각각의 정체성에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⁴²⁾

대체로 이러한 발전을 종합하면 영국의 경우 하나의 특정한 정체성을 형성·강요하기보다는 다양한 정체성을 다층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정체성 사이의 갈등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층적 성격을 통해 영국 정체성이 보다 다의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라. 시사점

북아일랜드에서의 갈등과 정체성문제는 분쟁 후 화합과 통합적 정체성의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통일한국의 정체성 문제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북아일랜드 분쟁 해결과정에서 영국정부는 협의제에 기초해 권력 분점과 공동체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배제 우려를 불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구상이 북아일랜드의 독특한 제도라기보다 벨기에의 연방화 과정이나 EU의 정책결정과정 등에도 도입된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평화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큰

141) Shelley McKeown, “Perceptions of a Superordinate Identity in Northern Ireland,” *Peace & Conflict*, vol. 20, no. 4 (2014), pp. 510~511.

142) *Ibid.*, p. 513.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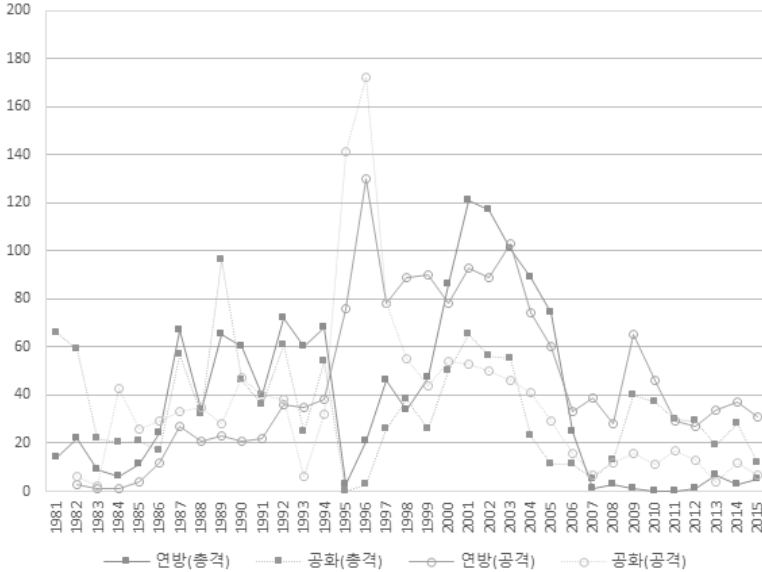
둘째, 정체성 갈등을 초래하는 보다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차별과 관련해 북아일랜드는 경찰력의 충원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할당제를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할당제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할당제는 또 다른 차별을 의미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보다는 차별금지법안의 강화와 동법률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차별을 완화·해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다른 차별 가능성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북아일랜드는 종교적 혹은 공동체 간 차별 해소과정에서 특정 종교나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인권과 평등의 관점, 즉 성별, 연령,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는 방향에서 사회적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특정한 사회적 집단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다른 사회적 소수에 대한 차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며,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아일랜드 문제는 갈등의 공식적 종식 이후 ‘실질적 화해’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북아일랜드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양측의 총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1975년 189명이 최고치이지만 2001년 186명, 2002년 173명, 1989년 161명, 2003년 156명, 2000년 136명, 1992년 127명 등 벨파스트협정 체결 이후 무장해제과정에서 보다 많은 총격 희생자가 기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⁴³⁾

143) 2010년 이후에도 연평균 20~30명의 총격 사상자와 40~60명의 공격 피해자가 기록되고 있다. PSNI, “Police Recorded Security Situation Statistics: Annual Report Covering the Period 1st April 2014~31st March 2015,” <http://www.psni.police.uk/august_2015_accompanying_excel_spreadsheet_for_security_website_online_11_09_15.xls>. (검색일: 2015.9.25.).

●그림 III -7 무장단체의 공격에 의한 희생자 수(1981~2015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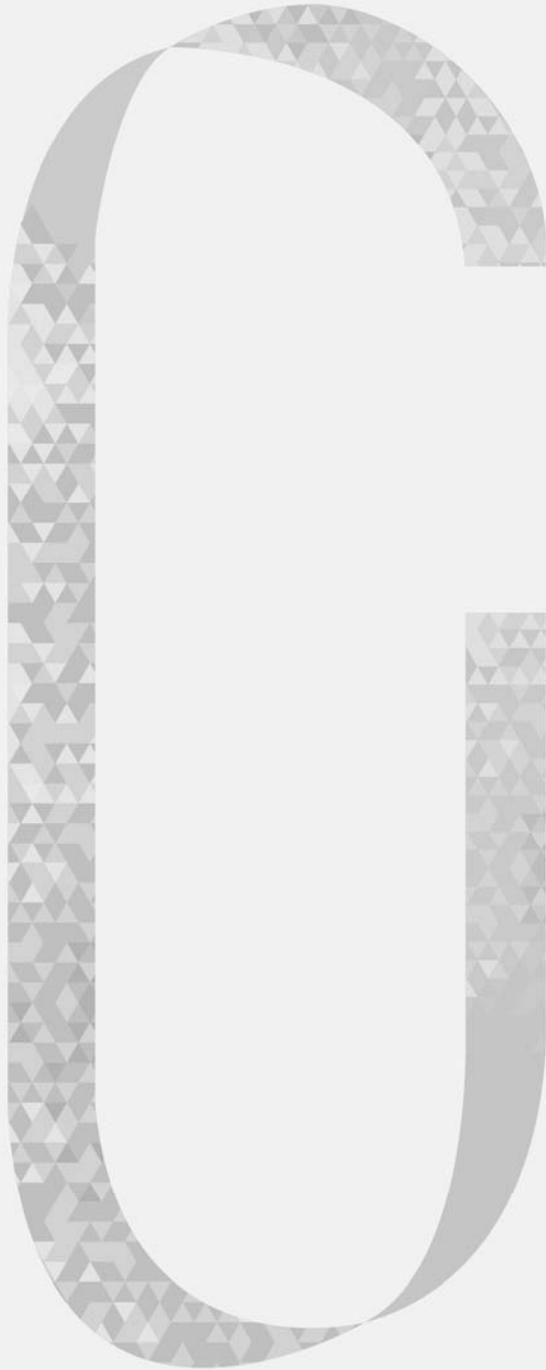
출처: PSNI, "Police Recorded Security Situation Statistics: Annual Report Covering the Period 1st April 2014-31st March 2015," <http://www.psn.police.uk/august_2015_accompanying_excel_spreadsheet_for_security_website_online_11_09_15.xls>. (검색일: 2015.9.25.)에 기초해 작성.

이러한 충돌은 그 자체로 두 공동체 간의 화해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들 충돌을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차별이라는 피해의식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은 화해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역사에 대한 공동 의식이 공동체의 주요 요소임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과 화해’ 문제는 정체성 갈등을 지속적으로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과거사 문제와 가해자 처벌 문제는 인권이라는 보편가치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면과 사법적 처벌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문제이다. 영국의 경우 진실규명의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선택과 그 영향에 대해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북아일랜드 사례는 국가정체성과 지역 혹은 사회정체성의 다층적 구조에서 정체성 사이의 갈등과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평화과정을 통해 북아일랜드 정체성을 수용하였으며, 평화과정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북아일랜드 정체성’은 프로테스탄트의 영국 정체성이나 가톨릭 사회의 아일랜드 정체성 사이의 대립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국가 하위수준에서의 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이 혼재해 갈등이 야기될 경우 다층적인 정체성의 구분을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스코틀랜드의 분리투표와 같이 여전히 영국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이러한 정체성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열린 개념으로 남겨 다층적 정체성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IV. 결론

1. 이론 및 사례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는 개인, 집단, 국가가 다른 대상과의 인정투쟁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구성주의 이론을 토대로 국가정체성 형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국가정체성은 국가구성원들이 국내의 집단들과의 관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제도통합 및 가치통합에 대한 응집력과 상호교환성을 인정받음으로써 형성된다. 이러한 국가정체성의 형성과정은 대내적 측면에서 전개되는 내적 측면과 대외적 측면에서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전개되는 외적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논문은 국가정체성이 언어, 문화, 혈연, 역사 등 정체성의 내적 동질요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전제했다. 국가정체성을 위한 내적 지표는 정치구조, 국가기관의 통합, 경제통합, 사회·문화·교육·복지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국가정체성 형성의 외적 지표는 대외적 가치,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시각, 지역공동체의 존재 여부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시각에 입각하여 독일, 홍콩, 북아일랜드의 국가정체성 형성을 비교하였다. 세 가지 사례는 각각 배경, 국가정체성 형성과정, 시사점 등이 상이하다. 따라서 세 가지 사례를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가정체성 사례를 유형화하고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례에 대한 연구와 이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례연구의 제약과 유형화에 따른 단순함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편의를 돕기 위해 세 가지 사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하고자 한다.

독일의 국가정체성 형성사례는 ‘융합형(A+B=A(b))’에 가깝다. 서독의 정체성과 동독의 정체성이 결합하여 서독 정체성의 우위 하에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동독의 정체성이 완전히 소멸한 것이 아니라 잔여범주로서 존재함으로써 통일독일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위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흔히 독일통일을 서독의 이념과 체제 우위에 의한 흡수통일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의 기본틀에 입각하여 동독체제의 전환과 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동독의 현실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서독의 법·제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범위, 적용시점 등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배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독의 정체성과 과거 역사를 전면 배제하는 것이라 과거 역사와 경험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함으로써 동독 주민의 정체성 혼란과 자아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독일사례를 서독형으로의 일방적 통합이 아니라 서독의 우위 하에 동독의 잔여범주가 인정된 융합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홍콩사례는 ‘일방형(A+B=A)’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사례는 일국양제 하에 홍콩의 자율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병존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홍콩의 자율성은 중국의 압도적 우위 하에 허용되었기 때문에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 제한적인 자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정치, 안보 면에서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통합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문화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 왔다. 중국은 최종적으로 중국체제로의 병합이라는 목적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주도의 일방형 통합에 대한 홍콩의 불만은 ‘노란 우산시위’로 일컬어지는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북아일랜드 사례는 ‘병존형(A+B=AB)’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

갈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배경으로 발생한 북아일랜드 사례는 독일, 홍콩 사례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북아일랜드 사례에서는 무역시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갈등의 정도가 높다, 영국정부는 북아일랜드의 분리주의를 잠재우는 대신 협의제에 입각하여 정치, 경제분야에서 자치권을 허용하고 문화적 융합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공존의 틀을 마련하고 병존하는 방식을 택했다. 여기에는 영국의 분권주의적이고 협의제적 정치적 전통이 작용하였다.

다음은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한 사례별 국가의 노력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독일은 동서독 주민 간의 내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였다. 우선 정치분야에서 구동독정당의 활성화, 연방정부에서 구동독정치인의 활동 허용, 보상 및 배상 중심의 과거청산,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일은 경제분야에서 내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 구동독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동독지역 경제부흥정책(Aufbau Ost), 구동독지역 산업발전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일은 사회분야에서 정치교육의 확대, 구동독문화의 인정 및 존중(다층적 정체성 인정), 동독평화혁명 기념사업 추진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독일은 외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독일 민족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 해소(유럽화된 독일, 다문화 정책, 다중정체성), 유럽 재정정책에서의 단호함(유럽재정 분담금, 통화정책, 산업정책에서 자국 이익 방어), 너그러운 이민정책(반외국인정서 억제)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중국정부는 홍콩의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해 정치분야에서 가치통합(일국양제)을 실시하고, 경제분야에서는 제도통합(CEPA 체결 등), 사회분야에서는 민족주의 강화(애국주의 교육 등) 정책을 실시하였다.

I
II
III
IV

그리고 중국정부는 대외정체성 형성을 위해 ‘국호’ 통합, 미래 비전 제시(‘중국의 꿈’) 등의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영국정부는 북아일랜드의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해 정치분야에서는 협의적 접근방식에 입각하여 집행권 공유, 자치권 부여, 공동체 투표방식에 기초한 공동체의 거부권 인정, 참여에서의 비례성, 국제협약제도 구축 등의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영국정부는 경제분야에서는 분배적 화해 기조에 입각하여 경제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완화, 공직참여에서의 차별금지, 제한된 할당제 실시로 참여와 평등 제고 등의 정책을 적용하였다. 또한 영국정부는 사회분야에서 도구적 화해(적대적 집단의 상호접근과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부·비정부 제도적 기반 마련), 사법적 차별 해소(법무장관 등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사회경제적 화해(피해자 보상 중심의 과거사 문제 접근)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영국정부는 대외정체성 형성을 위해 아일랜드정체성 수용, 영국 정체성 혹은 영국다움(Britishness)에 대한 다층적 해석 존중, 젊은 층에서 북아일랜드 정체성 확대 현실 인정, 하나의 상위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 다양한 정체성을 다층적으로 수용 등의 정책을 적용하였다.

표 IV-1 독일, 홍콩, 북아일랜드의 국가정체성 형성 비교: 정체성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

	정체성의 내적 측면			정체성의 외적 측면
	정치	경제	사회	
독일: 융합형, A+B =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독독정당의 활성화 - 연방정부에서 구독독정치인의 활동 - 보상 및 배상 중심의 과거청산 -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원 · 구독독주민 복지 향상 - 동독지역 경제부흥정책(Aufbau Ost) · 구동독지역 산업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교육의 확대 - 구독독문화의 인정 및 존중 · 다층적 정체성 인정 - 동독평화혁명 기념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민족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 해소 · 유럽화된 독일 · 다문화 정책 · 다중정체성 - 유럽재정정책에서의 단호함(유럽재정 분담금, 통화정책, 산업정책에서 자국 이익 방어) - 너그러운 이민정책 · 반외국인정서 억제
홍콩: 일방형, A+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통합 (일국양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통합 (CEPA 체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주의 강화 (애국주의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호' 통합 - 미래 비전 제시 ('중국의 꿈')
북아일랜드: 병존형, A+B =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적 접근 ① 집행권 공유, ② 자치권 부여, ③ 공동체 투표방식에 기초한 공동체의 거부권 인정, ④ 참여에서의 비례성, ⑤ 국제협약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배적 화해: ① 경제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완화, ② 공직참여에서의 차별금지, ③ 제한된 할당제 실시로 참여 평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구적 화해: 적대적 집단의 상호접근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비정부 제도적 기반 마련 - 사법적 차별의 해소: 법무장관 등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 사회경제적 화해: 피해자 보상 중심의 과거사 문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적 접근에 기초해 아일랜드 정체성 수용, 영국정체성 혹은 영국다움(Britishness)에 대한 다층적 해석 존중, 젊은 층에서 북아일랜드 정체성 확대 현실 인정, 하나의 상위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 다양한 정체성을 다층적으로 수용해 정체성 사이의 갈등을 회피

I
II
III
IV

2. 통일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복합형 정체성 모색

독일(융합형), 홍콩(일방형), 북아일랜드(병존형) 가운데 통일한국의 정체성은 어떤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사례마다 독특한 배경과 특징을 지니고 있고 역사적 맥락, 정치·사회적 환경, 제도적 기반, 문화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체성 형성의 모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반영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정체성은 남북한의 역사성과 상호관계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통일한국은 정치사회적 안정과 갈등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 국가정체성을 지향해야 한다. 통일국가의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관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가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셋째,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대외적으로 평화와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 통일국가는 대외적으로 평화로운 환경조성과 협력을 지향해야 한다.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이러한 대외환경 조성에 상응하여 개방성과 공존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홍콩과 같은 일방형은 적합하지 않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홍콩의 일국양제는 두 체제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협력과 통합을 모색하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콩의 일국양제는 사실상 중국의 일원적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방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 모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독일(융합형)과 북아일랜드(병존형)를 선택적으로 결합한 복합형이다. 독일형은 서독의 우위 하에 통합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동독의 정체성이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서독의 정체성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통일독일의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 이것은 체제 및 이념 면에서는 서독의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서독의 정체성과 동독의 정체성이 상호 교섭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아일랜드는 국가분열을 방지하면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이 영국의 정체성과 병존함으로써 국가통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렇게 볼 때,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은 독일형과 북아일랜드형을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복합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은 남한의 가치와 이념, 체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포섭함으로써 공존하고 병존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나. 다중 정체성 형성

이질적인 두 체제가 하나로 합해지는 통합과정에서 어느 한 측의 우위에 입각한 통합은 화합과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두 체제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녹아드는 상호침투와 상호교섭의 과정이 필요하다. 통일국가의 정체성 형성은 두 개의 문화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문화접변 현상과 같다. 두 개의 문화가 만나면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우위에 의해 문화흡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문화가 필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교류작용이 있게 된다. 국가정체성 형성도 이러한 상호작

I

II

III

IV

용을 거쳐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일독일의 경우에도 서독의 정체성, 동독의 정체성, 통일독일의 정체성, 유럽연합의 정체성이 다른 층위에서 공존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에도 홍콩인의 정체성,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길항관계를 이루고 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북아일랜드 정체성, 영국 정체성, 아일랜드 정체성이 병존하고 있다.

정체성은 하나의 단일한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중 정체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정체성이 반드시 단일민족과 단일국가의 전통에 입각하여 단일국가의 일원적 정체성을 지향할 필요는 없다. 또한 통일한국이 단일국가의 일원적 정체성을 형성할 것이라고 단정할 이유도 없다.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은 여러 개의 하위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다중정체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국가에서 여러 개의 지역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대외정체성이 다양한 층위에서 존재하거나 이것들이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융합적 정체성이 형성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다중정체성이 형성되더라도 사회적 안정과 통합이 유지될 수 있으며, 갈등과 긴장이 조정·관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위적으로 단일정체성을 형성하려 할 경우, 오히려 불만과 갈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 정서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경제적 조건의 병행

통합은 제도통합과 가치통합으로 이루어진다. 제도통합은 법·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분야별로 제도, 절차, 규칙을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제도통합은 제도이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민주주의제도와 시장경제제도를 개도국에 이식하는 것은 제도통합과 비슷한 과정, 절차, 원칙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제도통합이나 제도이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많은 신생국과 개도국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이식되었으며 내전을 거친 후 새로운 국가건설을 하기 위한 제도건설 노력이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것은 제도건설이 사회문화적 진공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규범, 가치, 규칙, 절차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통일 이후 통합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제도통합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통합이 작동할 수 있는 문화와 가치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제도통합은 공허한 기준과 원칙의 나열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가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내적통합의 한 영역인 국가정체성 형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독일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제도통합을 이룩하였지만 내적통합을 이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직까지 내적통합의 진통을 겪고 있다. 홍콩은 일국양제의 틀에 의해 순조롭게 점진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014년 우산혁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질적 통합과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아일랜드는 갈등을 봉합한 채, 화합정책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있다.

정체성 형성이 문화와 가치를 포함하는 내적통합의 문제이지만 역설적으로 정체성 형성은 정서적 공감대와 문화적 공통분모를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순환론적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정체성 형성을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문화와 가치통합을 위해서 제도통합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문화적 일체감과 공존의식을 함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체성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작동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해 내적 지표로 정치, 법, 경제, 사회 등의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 대외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종합적·장기적 차별 해소방안 마련

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두 체제 간의 정체성 형성은 동일한 위상과 역량을 지닌 체제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통일한국의 정체성 형성도 상대적 우위에 있는 남한 주민과 상대적으로 열세 위치에 있는 북한 주민 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두 체제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보편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상대적 위상의 차이를 감안하여 특혜를 제공하는 예외조항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보편적 원칙과 차별해소를 위한 예외 조항을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북아일랜드 사례는 정체성 형성을 위해 보편적 원칙과 차별해소를 위한 예외 조항을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가에 대해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아일랜드 분쟁 해결을 위해 영국정부는 협의제에 기초하여 권력분점과 공동체 의사결정을 통해 북아일랜드의 소외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였다. 이러한 협의제는 북아일랜드 분쟁해결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영연방의 정부운영 방침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러한 협의제 원칙은 북아일랜드인이 차별성을 느끼지 않고 영연방 내에서 정체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바탕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북아일랜드에서 경찰 충원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할당제가 적용된 것 외에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북아일랜드인에 대한 할당제가 실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할당제는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킨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차별금지법안을 강화하고 이 법률의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차별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영국은 보편적 인권과 평등의 원칙 하에 성별, 종교, 연령에 따른 차별을 배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보편적 평등의 원리가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통일한국에서 남북한 간 사회·경제적 격차, 교육의 차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남북한 주민이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분야별로 북한 주민을 배려하는 특혜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 조항은 최소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보편적 원칙과 제도, 절차 등을 정착 시킴으로써 구조적으로 정체성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화해·화합 지향적 과거사 해결

갈등과 분규를 겪은 집단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물리적 충돌이나 전쟁을 겪은 경우 과거 역사의 굴레를 극복하고 화해와 화합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겪은 후 오랫동안 사회적, 심리적 갈

I

II

III

IV

등이 지속되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흑인과 백인간의 갈등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북아일랜드도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교와 카톨릭 간의 장벽은 아직도 높기만 하다.

갈등과 폭력을 겪은 사회에서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할 경우 과거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해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자가 있지만 가해자는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독일의 경우 동독의 비밀경찰인 스타지의 비밀문서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인권침해에 대한 많은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회화합 차원에서 최소화하였다.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도 진실규명에 중점을 두는 대신 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강조점을 두었다.

통일한국의 경우 과거 상흔에 대한 트라우마는 상당히 해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에 중점을 두되, 화해와 화합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바. 통일 대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과 소통

통합은 정치적·법적 통일 이전부터 시작해서 정치적·법적 통일 이후 까지 지속되는 오랜 과정이다. 통일 이전에 어떤 조건과 형태로 교류, 협력, 소통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통일의 경로와 양상을 결정하며, 통일 이후 통합의 성격도 결정한다.

독일통일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와 이에 따른 냉전

종식이라는 유럽질서의 변화에 따른 결과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시작된 동서독 간의 상호체제 인정 존중, 긴장완화, 교류·협력, 인적 교류가 독일통일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동서독 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은 명시적으로 통일을 목표로 했다기보다 체제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평화공존정책이었다. 이러한 평화공존정책이 역설적으로 동서독 간 상호이해와 교감을 증진시키고 기회가 왔을 때 역사적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동서독 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은 주변국으로 하여금 독일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를 줄이고 독일문제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통일한국을 위한 정체성 형성은 통일 이후의 과제가 아니라 통일 이전 통합 단계에서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통일 이후를 염두에 둔 정체성 형성을 위해 어떤 목표 하에 어떤 접근법을 통해 어떤 정책을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 추진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통일 이후를 염두에 둔 통합정책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긴장완화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통합과 미래의 공동체 건설을 위해서 필요하다.

통합에 대비하여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 인적 교류, 소통의 기회를 다각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민간단체의 접촉망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 국제민간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를 활용하여 복합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교류·협력의 분야도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협력, 자연재해·인위적 재난 등 재난구조 협력, 환경협력, 주거환경 개선 등 실생활에 관련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한국사회의 개방적·포용적 능력 배양

통일 이후 통합과 정체성 형성을 위해 한국사회의 대내적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론적으로 보면 통합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사회의 통합능력이다. 독일사례를 보면 이러한 점이 분명해진다. 독일이 평화적이고 합의적 방식에 의해 통일을 이룩한 이후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 경제발전, 사회복지, 정체성 회복 등을 달성하고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한 것에는 서독의 내적 통합능력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서독은 안정된 사회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달성했다.

또한 통일은 기본적으로 이질적인 두 체제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이것은 개인적, 집단적 차원에서 구별되는 다른 개인과 집단이 한 지붕 아래서 공존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질적인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은 어느 일방의 압도적인 주도에 의해서 달성되기 힘들다. 더욱이 무력적인 방법이 아니고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법에 의해 통합을 추진할 경우 이질적인 존재양식에 대한 인정과 관용, 용인이 필요하다. 다양성과 이질성, 다층성, 복합성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이 존재하지 않는 물리적 결합이 화학적 결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

통일한국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한국사회의 내적 준비역량과 수용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사회는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과 포용성, 관용을 함양하는 것이 실질적인 통일준비이다. 또한 통일 이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을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갈등관리에 대한 한국사회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 열린 민족주의와 평화·협력을 지향하는 지역정체성 지향

한반도통일은 민족의 숙원인 근대민족국가의 완성을 의미한다. 통일을 향한 염원의 밑바닥에 민족주의에 대한 열정이 자리잡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21세기 세계화와 다문화사회의 경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일한국의 이념으로 민족주의가 상당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의 내포와 외연을 넓히고 신축적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민족주의의 내적 요인인 혈연, 민족 등 고정적 요인보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가치, 규범, 문화의 공유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족주의의 내적 요인을 탄력적이고 구성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세계화와 다문화의 추세를 포용할 수 있다. 또한 통일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도 개방적인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은 내적 구성원 간의 내적 정체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밖에 대해 공존의사를 표명하는 외적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한다. 통일과 통합이 내적 정체성에 집착할 경우 대외적으로 갈등과 분규가 발생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전 내적 통합성을 바탕으로 대립적 대외정체성을 추구했던 독일과 일본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통일문제를 유럽연합의 확장과 병행한 독일은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독일통일이 철저하게 유럽통합의 관점에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한 실제적으로 독일은 통일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유럽통합의 견인차가 됨으로써 유럽통합의 과실을 향유하였다.

한반도통일은 지정학적, 지경학적 요인을 고려할 때 동북아질서에

I

II

III

IV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요인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 통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해 통일외교가 필요하다. 또한 통일 이후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은 평화와 협력을 지향하는 대외정체성을 지향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박종철 외. 『통일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배정호 외.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서울: 통일연구원, 2014

황병덕 외.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1.

Abrams, Dominic, and Michael A. Hogg, eds. *Social Identity Theory: Constructive and Critical Advances*.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90.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Books, 2006.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8.

Billig, Michael. *Banal Nationalism*. London: Sage Publications, 1995.

Campbell, David. *Writing Securit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8.

Collins, Randall. *Weberian Sociological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Conradt, David P. *The German Polity*. New York: Longman, 1993.

Ellemers, Naomi, Russell Spears, and Bertjan Doosje. eds. *Social*

- Identity: Context, Commitment, Content.* Oxford: Blackwell, 1999.
- Gellner, Ernest.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Giddens, Anthony. *The Constitution of Society.* Cambridge: Polity Press, 1984.
-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The Phenomenology of Spiri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1807].
- Honneth, Axel.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Cambridge: MIT Press, 1995.
- Inglehart, Ronald.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Köpping, Klaus-Peter, Bernhard Leistle, and Michael Rudolph. eds. *Ritual and Identity: Performative Practices as Effective Transformations of Social Reality.* London: Transaction Publishers, 2006.
- Larrain, Jorge. *Identity and Modernity in Latin America.* Cambridge: Polity Press, 2005.
- McGarry, John, and Brendan O'Leary. *The Northern Ireland Conflict: Consociational Engage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Mead, George Herbert.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34.
- Smith, Adam.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New York:

- Penguin, 2007.
- Smith, Anthony D. *National Identity*.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91.
- Terrier, Jean. *Visions of the Social: Society as A Political Project in France, 1750~1950*. Leiden: Brill, 2011.
- Trencsenyi, Balazs. and Michal Kopecek. eds. *National Romanticism: Formation of National Movements, Discourses of Collective Identity in Central and Southeast Europe 1770 ~1945*. Volume Two.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2007.
-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Williams, Robert. *Recognition: Fichte and Hegel on the Other*.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2.
-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2014*. Berlin: BMWi, 2014.
- Hübner, Emil. *Jahrbuch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92*. München: Dtv Verlag, 1991.
- Klaus, Manfred. *Städtepartnerschaften zwischen ost-und westdeutschen Kommunen*. Berli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liche Forschung und Publizistik mbH, 1994.
- Klaus, Schroeder. *Die veränderte Republik: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Stamsried: Verlag Ernst Vögel, 2006.

Klein, Michael. *Die nationale Identität der Deutschen: Commitment, Grenzkonstruktionen und Wert zu Beginn des 21. Jahrhunderts*. Wiesbaden: Springer Fachmedien, 2014.

Klein, Michael. *Deutsch-Sein: Ein neuer Stolz auf die Nation im Einklang mit dem Herzen*. Düsseldorf: Identity Foundation, 2009.

姚奇木 等著. 『香港華僑概況』. 台北: 正中書局, 1991.

鄭宇碩 編. 『香港評論 1997』.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1997.

鄭宇碩·盧兆興 編. 『九七過渡: 香港的挑戰』.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1997.

陳雲. 『香港城邦論』. 香港: 天窰出版社, 2011.

2. 논문

김누리. “통일독일의 문화변동.” 『독일문학』. 제108집, 2009.

김성진. “몰도바 정체성과 민족주의.” 『슬라브학보』. 제29권 3호, 2014.

김학성. “동독의 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제.” 『정치·정보 연구』. 제16권 1호, 2013.

산동천 외. “통일비용과 남북협력기금: 독일통일로부터의 교훈.” 『통일연구』. 제12권 제1호, 2008.

양민석·송태수. “독일통일 20년-사회·문화적 통합의 성과와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4호, 2010.

정병기. “독일통일의 정치통합과 한반도.” 『한반도 통일과정과 통일방안』.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공동학술회의, 2009.11.27.

허영식·정창화. “한국의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간문화적 접근방안.” *OUGHTOPIA*. 제27권 2호, 2012.

- Anderson, Joel. "Translator's Introduction."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The Moral Grammar of Social Conflicts*. Axel Honneth. Cambridge: MIT Press, 1995.
- Aiken, Nevin T. "Learning to Live Together: Transitional Justice and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Northern Ire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vol. 4, no. 2. July 2010.
- Bauer-Kaase, Petra and Max Kaase. "Five years of Unification: The Germans on the Path to Inner Unity." *German Politics*. vol. 5, no. 1. April 1996.
- Coakley, John. "National identity in Northern Ireland: Stability or Change?." *Nations and Nationalism*. vol. 13, no. 4. 2007.
- Conradt, David P. "Changing German Political Culture." *The Civic Culture revisited*. edited by G. A. Almond and S. Verba.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0.
- Hayward, Katy. "Reiterating National Identities: The European Union Conception of Conflict Resolution in Northern Ireland."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41, no. 3. 2006.
- Jepperson, Ronald L., J Alexander Wendt, and Peter J. Katzenstein.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edited by Peter J. Katzenstein. Columbia: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Kim, Samuel S. "Northeast Asia in the Local-Regional-Global Nexus: Multiple Challenges and Contending Explan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east Asia*. edited by Samuel S. Kim. Lanham: Rowman & Littlefield. 2004.
- Kim, Samuel S., and Lowell Dittmer. "Wither China's Quest for

- National Identity?." *China's Quest for National Identity*. edited by Lowell Dittmer and Samuel S. Ki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 Kowert, Paul. "National Identity: Inside and Out." *Security Studies*. vol. 8, no. 2/3. 1998/99.
- McAuley, James W., and Jonathan Tonge. "British in Northern Ireland since the Good Friday Agreement." *Parliamentary Affairs*. vol. 63, no. 2. 2010.
- McAuley, James W., Jonathan Tonge, and Peter Shirlow. "Conflict, Transformation, and Former Loyalist Paramilitary Prisoners in Northern Ireland."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vol. 22, no. 1. 2010.
- McGrattan, Cillian. "Working through the Past in Bosnia and Northern Ireland: Truth, Reconciliation and the Constraints of Consociationalism." *Journal on Ethnopolitics and Minority Issues in Europe*. vol. 11, no. 4. 2012.
- McKeown, Shelley. "Perceptions of A Superordinate Identity in Northern Ireland." *Peace & Conflict*. vol. 20, no. 4. 2014.
- Norkus, Zenonas. "Max Weber on Nations and Nationalism: Political Economy before Political Sociology."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vol. 29, no. 3. 2004.
- Stets, Jan E., and Peter J. Burke. "Identity Theory and Social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63, no. 3. 2000.
- Tajfel, Henri.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3, no. 1. 1982.

- Tajfel, Henri and John Turner.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edited by Stephen Worchel and William Austin. Chicago: Nelson-Hall, 1985.
- Tonge, Jonathan., and Raul Gomez. "Shared Identity and the End of Conflict? How Far Has A Common Sense of 'Northern Irishness' Replaced British or Irish Allegiances Since the 1998 Good Friday Agreement?." *Irish Political Studies*. vol. 30, no. 2. 2015.
- Veen, Hans-Joachim and Carsten Zelle. "National Identity and Political Priorities in Eastern and Western Germany." *German Politics*. vol. 4, no. 1. April 1995.
- Wendt, Alexander.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1992.
- Belwe, Katharina. "Sozialstruktur und gesellschaftlicher Wandel in der DDR." W. Weidenfeld and H. Zimmermann. München: Carl Hanser Verlag, 1989.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 Stand und Perspektiven der politische Bildung in der BR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Sonderdruck. April 1992.
- Gebhardt, Winfried and G. Kamphausen. "Mentalitätsunterschiede im wiedervereinigten Deutschland? Das Beispiel zweier ländischer Gemeinde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6, 1994.

Glaessner, Gert-Joachim. "Politische Kultur und nationales Erbe in der DDR." *Einheit-Freiheit-Selbstbestimmung: Die Deutsche Frage im historisch-politischen Bewußtsein*. Hrsg. von Karl-Ernst Jeismann. Frankfurt a.M.: Campus Verlag, 1988.

Holtmann, Everhard., and Tobias Jaeck. "Was denkt und meint das Volk? Deutschland im dritten Jahrzehnt der Einhei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nr. 33~34. 2015.

Maaz, Hans-Joachim. "Psychosoziale Aspekte im deutschen Einigungsprozeß."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9. 1991.

Riebau, Bernd. "Geschichtswissenschaft und Nationale Frage in der Ära Honecker." *Deutschland Archiv*. nr. 5. 1989.

Roberts, Geoffrey K. "Superwahljahr: The German Elections in 1994." *German Politics*. vol. 4, no. 2. 1995.

Sauerhöfer, Werner. "Die Jugend-Verbandskontakte zwischen den beiden deutschen Staaten." *Kein Alter zum Ausruhen*. Bonn: Deutscher Bundesjugendring, 1989.

Schild, Joachim. "Eruopäisierung Nationaler Politischer Identitäten in Deutschland und Frankreich."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3~4. January 2003.

Weidenfeld, Werner. "Politische Kultur und deutsche Frage." *Politische Kultur und deutsche Frage*. Hrsg. von W. Weidenfeld. Köln: Wissenschaft und Politik, 1989.

强世功. "香港人的身分變遷與價值認同變遷." 『文化縱橫』. 2014.

王緝思. “美國外交思想傳統與對華政策.” 中國社會科學院美國研究所·中華美國學會編. 『中美關係十年』. 商務印書館, 1989.

張麟徵. “公民提名, 普選, 民主反思-談香港的困境與出路.” 『海峽評論』. 第286期. 2014.

3. 기타자료

『연합뉴스』.

『聯合早報』.

『明報』.

『人民日報』.

『壹週刊』.

『財新網』.

『環球時報』.

BBC NEWS.

Der Spiegel

Die Welt.

Mail Online.

The Wall Street Journal.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중화민국 경제부. <<http://www.moea.gov.tw>>.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http://www.gov.cn>>.

대만정치대학 선거연구센터. <<http://esc.nccu.edu.tw>>.

독일연방정치센터 홈페이지. <<http://www.bpb.de>>.

얼스터대학교. <<http://www.ulster.ac.uk/>>.

영국의회 홈페이지. <<http://www.parliament.uk/>>.

영국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

홍콩대학 여론조사(民意調查). <www.hkupop.hku.hk>.

ARK. <<http://www.ark.ac.uk>>.

Central Community Relations Unit. <<http://cain.ulster.ac.uk/ccru>>.

DETI. <<http://detini.gov.uk/>>.

Eurobarometer. <<http://ec.europa.eu>>.

NISRA. <<http://www.nisra.gov.uk/>>.

Northern Ireland Executive. <<http://www.northernireland.gov.uk/>>.

Office of the First Minister and Deputy First Minister. <<http://www.ofmdfmi.gov.uk/>>.

PSNI. <<http://www.psni.police.uk/>>.

University of Ulster. <<http://cain.ulst.ac.uk/>>.

Bundespräsidialamt. *Ansprache von Bundespräsident Roman Herzog bei einem Festakt aus Anlaß des Tages der Deutschen Einheit in Congress-Centrum Bremen 3. Okt 1994.*

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neuen Bundesländer,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포츠희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 남북합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 통일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근 외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외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 통일나침반 ■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 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옥
2015-04 북한 의화별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욱 외	23,000원

연구보고서

2013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근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컨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희 편	16,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 협동연구총서 ■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근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 Study Series ■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2014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욱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중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2015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7 분단 70년 남북한 통일정책 및 통일담론 평가	허문영 외	13,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

	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예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연례정세보고서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논문총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학술회의총서

비매품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기 타

2014 복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성명*		입금일자*	
소속*		입금자 (신청자와 다를 경우)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전화		이메일
	핸드폰		F A X
이메일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원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성명, 입금일자,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 선택사항: 입금자, 이메일서비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경영지원실 지식정보팀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통일한국의 내일,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